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0-04 (IV)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Andreas Henneka, Bernhard Seliger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Ⅳ):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Andreas Henneka, Bernhard Seliger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ISBN 978-89-8479-559-4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매장: 734-6818·사무실: 394-0337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1 .....	1
1. 개요 .....	3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	4
I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2 .....	43
1. 개요 .....	45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	46
II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3 .....	117
1. 개요 .....	119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	120

IV.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4 .....	141
1. 한반도 접경 생물권보호지역 설립방안 .....	143
2. 남북협력의 가능성: 후퇴인가 진로수정인가? .....	173
V.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	195
1.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197
2.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준비 .....	2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25

## 그림 목차

[그림 II-1]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46
[그림 II-2] 독재청산재단의 8년 연구 결과물 .....	55
[그림 II-3] 독일경제연구소 .....	57
[그림 II-4] 슈타지 문서보관소 .....	62
[그림 II-5] 슈타지 문서보관소의 카드 .....	63
[그림 II-6] 슈타지 문서보관소 .....	65
[그림 II-7] 슈타지 문서보관소 .....	66
[그림 II-8] 파손된 슈타지 문서들 .....	67
[그림 II-9] 룬데 액케 박물관 .....	73
[그림 II-10] 촛불 평화시위 사진들 .....	73
[그림 II-11] 슈타지가 사용했던 문서 파쇄기 .....	75
[그림 II-12] 룬데 액케 박물관 .....	75
[그림 II-13] 라이프치히 슈타지 책임자의 제복 .....	76
[그림 II-14] 레닌의 사진 .....	76
[그림 II-15] 슈타지 군대 시스템 .....	76

[그림 II-16] 슈타지의 제복 .....	76
[그림 II-17] 변장술 교육과정 도구들 .....	78
[그림 II-18] 슈타지가 촬영한 사진들 .....	78
[그림 II-19] 슈타지의 안가 위치 .....	78
[그림 II-20] 슈타지의 첩보활동 도구들 .....	78
[그림 II-21] 마흥에 위치한 슈타지의 이동 지휘본부 병커 사진들 .....	79
[그림 II-22] 슈타지의 조사시설 검 감옥 .....	82
[그림 II-23] 독일사회주의통일당(동독공산당)의 로고 .....	86
[그림 II-24] 포크트란트 .....	93
[그림 II-25] 작센주에 있는 그뤼네스 반트 .....	97
[그림 II-26] 콜로네벡 .....	98
[그림 II-27] 그뤼네스 반트 인근 풍력발전소 .....	100
[그림 II-28] Little Berlin .....	101
[그림 II-29] 동독 측 국경지대 .....	103

# 그림 목차

[그림 II-30] 한스-자이델 재단 .....	105
[그림 III-1] 위르겐 클림케 의원과 함께 .....	120
[그림 III-2] 베를린 소재 연한국박물관 .....	123
[그림 III-3]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	124
[그림 III-4] 샬제 생물권보전 신청지역 .....	125
[그림 III-5]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	127
[그림 III-6] 독일그린벨트 사례발표 .....	130
[그림 III-7] 독일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그린벨트) .....	131
[그림 III-8] 유럽그린벨트 .....	133
[그림 III-9] 유럽그린벨트 사례발표 .....	134
[그림 III-10] 라인강 유역 지도 .....	136
[그림 III-11]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 조직도 .....	137
[그림 III-12] 라인강과 라인강관리위원회 .....	139
[그림 IV-1] 독일 그린벨트 .....	147

[그림 IV-2] 실제 생물권보전지역 두루미 보호 프로젝트의 인터넷 스크린샷 .....	161
[그림 IV-3] 두루미 주식 .....	162
[그림 IV-4] 두루미 보호를 위한 기부포스트 .....	163
[그림 V-1] 독일통일 20년: 2010년 10월 3일 현장 .....	223



## 서 문

단·중·장기적 차원에서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탐구할 연구협의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연구참여자를 주축으로 하되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리아 접경 포럼」을 발족·운영하였다. 월례회를 상시적으로, 특히 비무장지대와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시·군에서 개최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독일통일 20주년이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통일 이전과 이후에 동·서독간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협력과 평화적 이용방안에 관심을 두었다. 4번에 걸쳐 독일 현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접경지역을 실제 방문하여 독일사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20년간 여러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국가적 성장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이후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2010년도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란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코리아 접경 포럼」의 여러 활동 가운데 독일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엮어보았다. 독일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

「코리아 접경 포럼」 대표

손 기 용



# 「코리아 접경 포럼 소개」

## I. 경과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협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뜻을 모아 2010년 3월 3일에 출범하였다.

## II. 목적

-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적 보전에 기여한다.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다.
-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 통일 환경 조성 및 통일준비에 기여한다.
- 전 세계 모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한다.

### Ⅲ. 조직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생태적 보전에 관련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치분과, 군사분과, 경제분과, 법분과, 환경분과, 문화분과를 두고 필요시 국제협력분과를 둔다.
- 집행위원회는 대표, 분과위원장,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Ⅳ. 사업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한다.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한다.
  - 국제기구 및 국제NGO들과 협력한다.
-



# 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1



## 1. 개요

### □ 출장목적

- 독일통일 20년을 맞아 독일의 통일 및 정치·군사·경제·사회·교육·기술·문화·환경 등 각 분야별 통합과정에 관해 독일 측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여 그 공과를 평가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베를린장벽 붕괴 직전·후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통일과정에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통일과정에서 미·영·불·소 전승 4개국의 입장은 어떠하였으며, 서독의 통일외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통일 이후 전 분야에 걸친 통합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비민주적, 비인도적 행위를 한 동독인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통일을 통해 독일이 이룩한 성과와 향후 과제, 시사점은 무엇인가?
- 독일 측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한·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출장기간: 2010년 5월 1일~5월 8일(7박 8일)
- 출장지: 독일(베를린, 드레스덴, 뮌헨, 아이히슈테트)
- 참가자: 서재진(통일연구원장), 이명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영수(한스-자이델재단), 최수영, 이규창(이상 통일연구원)

I

II

III

IV

V

## □ 주요 일정 및 내용

- 2010년 5월 3일 월요일
  - 독일 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을 방문하여 동독의 민주화 운동, 통일과 분단 노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010년 5월 4일 화요일
  - 드레스덴시청 부시장실에서 통일 이후 드레스덴의 발전 상황을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부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 2010년 5월 5일 수요일
  - 한스-자이텔재단 본부에서 독일 통일에 담긴 외교적 함의에 대해 라인하르트 마이어 발저 교수와 토론하고,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재건 과정에 대해 에두아르트 린트너와 토론하였다.
  - 아이히슈타트 카톨릭대학교에서 독일통일의 경제성과에 대해 요하네스 슈나이더 교수와 토론하고, 통일과정의 헌법적 토대에 대해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와 토론하였다.

##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 가.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세미나

#### □ 개요

- 일시: 2010년 5월 3일, 월요일
- 장소: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주제: 동독의 민주화 운동, 통일과 분단 노력

- 1989년의 빛나간 예측, 평화혁명과 1990년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과정
  - 동독 및 사회주의통일당이 저지른 부정사례들에 대한 처리 및 사법청산 현황
  - 통일과정에서 동독 인민군의 해체
- 독일 측 참석자: 독재청산재단 엔스 휘트만 박사, 크리스토프 쉬프젠 박사, 베그너 아프라스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1) 제1주제: 1989년의 빛나간 예측, 평화혁명과 1990년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과정

- Dr. Robert Grunbaum 박사님(독재청산재단 사무차장) 독재청산재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
- 1989년 평화혁명을 근거로 통일 독일을 이루었으나 통독 20년 후 평화로운 독일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 동독 시절 40년간 동독 주민들이 어떤 조건에서 살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구동독 슈타지가 문서를 보기를 원했다.
  - 이런 욕구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감이 증대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했다.
  -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연방의회 과거사 담당 조사위원회(연방의원과 전문가)가 발족 가동하였고, 6년간의 작업 결과 발표한 후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연방의회 내 모든 당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1998년 연방의회 발의로 법률을 제정한 후 독재청산재단을 설

I

II

III

IV

V



립하였다.

- 독재청산재단은 구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이하 SED)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2009년 평화혁명 기념행사를 포함하여 독재청산과 관련한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 Dr. Jens Huttmann(독재청산재단)의 논문 “1989년의 빛나간 예측, 평화혁명과 1990년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의 주요 내용

- 1989년에도 통일의 징조는 없었다. 20년 전을 회고해 보면 30년전 구동독 에릭 호네커의 사임으로 그 자리를 이어 받은 에곤 크래츠 정권 하에서도 평화혁명에 대한 어떠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 학계, 정치 분야 전문가는 동독의 안정성 및 견고함에 대해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으나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 예측이 빗나간 것은 동독 주민에게는 행운이었고, 전문가들에게는 충격이었다.

- 그러나 1989년 가을부터 상황은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다.

- 1989년 구동독 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 1989년 10월 라이프치히와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군중들의 기세로 SED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운명이었다.

○ Dr. Jens Huttmann님, 평화혁명을 예측하지 못한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뮌헨공대 ‘한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예측을 했다.

- SED가 체제유지 및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사회주의 변화를 채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 구체적으로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도 기술 관료의 영향 증대는 가능하다고 예측하면서 교육과 소비의 자유(자율성) 증대 및 강압조직의 약화 또는 철폐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제시된 내용에 대해 현실화는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 비록 기술, Technic에서의 변화는 가능하나 법의 강화를 수반한다고 할 때 이것이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렇지만 자유의 확대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진행되었고, 개인적 자유 확대와 점진적인 자유의 요구를 SED는 억제할 수 없었다.
  - 동독뿐만 아니라 구 사회주의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예측은 어려웠다. 동독 전문가, 변화의 참가자, 운동가, 전문가조차도 이렇게 빨리 동독이 무너질지 몰랐다.
  - 서독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동독이 변할지 전혀 몰랐다.
- Texas대 ‘베일리’ 교수는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 서독 ‘헤르만 헤이버’ 교수는 1945년에서 1986년까지 동독의 유지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경제적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서독 동독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 미 대통령 고문 ‘브레진스키’는 1989년 1월 저서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공산주의는 몰락한다고 예견했으면서도 동독과 불

가리아는 예외 국가로 간주했었다.

○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단순화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기본적인 이유는 상상력 부족, 연구방법상의 문제, 긴장완화정책, 동독의 비책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일부에서는 ‘독일의 이중적인 미래’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있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수긍, 수용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아이디어였다.
- 루츠 교수는 이중적인 미래는 2개의 미래가 있다고 하였다.
  - 1945년 이래 동독과 서독은 2개의 국가로 존재했다.
  - 아데나워 초대 수상 이래 서독의 경우 통일은 목표였지만 현실은 분단 고착화였다.
  - 1970년대까지 대연정 시절 등에서 자문, 고문, 전문가 역할을 한 ‘페이터 크리스찬 루츠’ 교수는 독일은 현실적으로 두 개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이 주장에 대해 중도개혁 성향의 사민당과 보수정당은 1970년대에는 동의했었다.
  - 기사당 당수는 1988년에도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지만 아니면 포기’ 해야 한다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치 현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3명의 동독 학자, 헤르만, 프린츠 루이저, 볼프강 하이쯔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 동독 훔볼트대 교수로, 1980년대 서독으로 이주한 후 1980

년대 중반 발표한 저서에서 동독 내부 경험자로서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 설명했다.

- 이들은 서독의 과학자들이 동독을 분석할 때 1970년대가 오히려 1980년대 분석보다 동독 실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1980년대 들어와서 정보가 더욱 부재해 현실에 기반한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와는 떨어진 감이 있다는 것이다.

○ 예측의 실패와 관련하여 한국에 충고하고자 하는 점이 있는가?

- 1989년 동독 정권의 안정성 예측은 잘못된 것이었다.
  -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통일로 이어지는 행운이 되었다.
  - 역설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유연하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만약 동독 정보·국가기구가 동독의 붕괴를 알았다면 비극적인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동독의 1989년과 1990년의 변화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동독의 자유 신장이 통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분단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독일의 문제는 ‘자유 쟁취’에서 시작했다.
  - 평화혁명을 통해 1989년 이전에 정치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또는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I

II

III

IV

V

○ 서재진 원장의 질문

-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등의 입장에서는 자료, 데이터 부족, 잘못된 입력(모델 및 변수 선정의 잘못) 등 오류 때문이라고 변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독 상황의 변화 및 독일 통일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은 오히려 독일(동독 주민)에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된다.
- 구소련의 붕괴 및 해체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은 결과적으로 구동독 정권의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휘트만박사의 답변

- 왜 예측이 빗나간 것일까? 상상력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자들은 당시 동독 상황에 대해서 ‘위로부터의 변화에 집착’한 결과 이것에 반대되는 ‘아래로부터의 불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 평화혁명의 전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동독 주민들이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탈출하고, 국내 거주자들의 시위가 확산(소규모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 둘째, 외부의 변화로, 구소련의 개혁·개방(페레스트로이카)과 폴란드의 자유화 움직임(솔리데리티)를 들 수 있다.
  - 셋째, 서독의 역할이다. 앞의 두 전제보다 영향력은 적었지만 서독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였다. 동독 주민은 서독의 언론과 미디어 시청이 가능함에 따라 서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삶의 질, 제품 등)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

에 따라 1989년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된 탈출 행렬은 체코, 폴란드 등의 시위를 서독 TV에서 보고 용기를 얻었다.

- 통일 당시 서독 내 ‘반통일 세력’의 집단 움직임은 없었나? 있었다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가?
  - 조사에 따르면 다수는 통일에 찬성하고 있었으나 통일 실현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무관심이 증대되었다.
  - 그러나 1989년 변화가 보이면서 제임스 베키(미 장관)는 ‘통독 할 때가 아닌가’라는 발언을 계기로 서독주민들의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대두되었다. 이 당시 연방의회 의원들조차 통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나 이후 급박하게 변화했다.

## (2) 제2주제: 동독 및 사회주의통일당이 저지른 부정사례들에 대한 처리 및 사법청산 현황

- 한국도 통일이 되면 북한 정권 하에서 행해진 과거행위에 대한 청산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독일은 1996년 경 동독시절 과거 청산을 완료하였다.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 과거 청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독일의 과거 청산 과정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2차 대전 후 4대 전승국에 의해 독일은 분할되었다. 동·서독 갈등구조가 잉태되고 독일 분단이 지속되었다.

I

II

III

IV

V

- 서독(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 분단 고착화 이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탈출 경로는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 동독 여타 지역에서도 주로 서베를린으로 탈출했다.
-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설치 후 상황은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동서독이 분단되었다.
- 분단 고착화 이후 서독에서는 동독에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향후 법적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서독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잊지 않겠다, 공소시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1989년 12월, 호네커 사임이후 동독에서는 자체적으로 호네커의 잘못을 추적했다.
-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되면서 ‘통일협약’은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 엠네스티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독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독일 연방의회는 구동독시절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늦추는 법률을 제정했다.
  - 한편 독일사회에서는 통일독일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도 존재함과 동시에 사법처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도 존재했다. 사법처리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 이후 2004년 12월까지 사법적 추적 절차를 진행하여 결과를 완결하였다.

- 이런 배경에서 슈타지 문서보관소를 설치하였다. 국가보위부 문서보관을 수행하고, 인사 관련(공무원 임용 등) 자료로 활용하며, 연구자 및 언론 등에는 처음부터 접근이 허용되었다.

○ 과거청산 및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내독 간 국경을 통해 동독 주민이 탈출 시 사망, 동독 군인이 무장 경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독 규정에 따르면 동독 군인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총기를 사용해야만 탈출을 막을 수 있을 때 군인은 임무에 따라 발포할 수 있었다. 1962~1985년 사이 동독 국경수비대는 동서독 국경지역에 지뢰밭을 설치하여 동독 탈출을 시도하다 265명이 사망(총격 및 지뢰 등)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였다. 이와 관련 책임소재 규명의 관건은 정치국위원회로 귀속하여 발포명령 규명을 위해 8,000여건 조사했다.
- 동독의 사법이 적법하게 적용됐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독의 사법부는 법보다는 당·정치적 결정이 우선했다. 15~20만 명의 동독인(반정부인사 및 정치범)이 체포되어 옥살이 등의 제재를 받았고 이 중 72건은 사형이 언도(이 중 52건 집행)되었다. 5만 건 이상의 소송(동독 탈출 및 인근국가의 여행 감행 등)이 있었다.
- 비밀경찰 활동에 대해서는 범죄적 행위(폭행, 살인 감행, 감시 및 우편 검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과거청산의 법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통일협약’에서는 과거 동독 시절의 불법적 사안에 대해 특정

I
II
III
IV
V



행위, 사람 등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사법조사가 가능했다.

- 적법한 기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가 조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소송을 중단했다.
- 과연 발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동독에서는 이 상황을 내부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발포자는 포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
- 동독에서는 법전상의 규정과 실제 적용에서는 차이(법상 인권 침해와는 다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권침해)가 있었다. 따라서 통독 이후 실상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 나치 독일에 비유한다면 히틀러의 명령(법은 무시)
- 실제로 통일 이후 동독 시절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실제로 처벌된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이것은 인권 고려 차원에서의 문제다.
- 동독에서 이런 행위는 국영 탈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자행되었다.
- 역설적으로 SED는 나치 청산을 천명하면서도 오히려 나치를 답습(국가사회주의)했다.
- 법 적용보다는 자의적 해석을 그대로 감행했다.
- 인권 차원에서 '자국 탈출' 이유만으로 '발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엄청난 폭력 자행의 전형적인 사례다.
- 동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담당 판사(또는 검사)도 불이익을 받았다. 사법부는 정권 수호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 구동독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자유(여행, 표현 등)가 제한되고 억압받았다.

○ 통일 이후 진행된 과거청산 소송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통일 이후 과거청산 관련 소송 건수는 약 7만 5천여 건(10만 명)이었다.
- 이 중 80~90%는 판결이 나지 않은 채로 소송이 끝났다.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3명으로 이 중 46명만이 실형을 받았다.
- 이런 결과는 독일 국민의 정서상으로는 매우 미흡했다.
- 이와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한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동독 하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본보기 효과 및 기초적인 정의 구현에 의미를 두었다.
  - 피해자의 법률적 수요와 심정적 수요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 소송의 공개 여부와 반응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해 달라.

- 검찰의 기소 및 조사 순간부터 언론 등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관심은 약해졌다.
- 판결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반응과 승전국의 사법부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 모든 판결은 문서화되었다. 훔볼트대학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

I
II
III
IV
V

- 폭스바겐재단의 지원을 받아 책자를 발간했다.
- 호네커, 밀케 등 동독 지도부에 대해서는 조사만 하고 끝났다. 소송은 제기하지도 않았다.
  - 호네커의 경우 경제범(외환사범)으로 기소되었다.
  - 이런 사법적 판결에 대해 동독 시절의 피해자(인권유린, 정신적·육체적 피해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책임을 지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불만)되었다.
  -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지만 과거 청산을 위한 사법처리를 맡았던 검찰로서는 사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 동독에서도 서류상으로는 체계적인 법이 존재(이것은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판단의 근거)한다. 운용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다.
  - 과거청산 및 처리 관련 사법적 판결(판단)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제3주제: 통일과정에서 동독 인민군의 해체

- 동독 마지막 내각과 당시의 동독을 둘러싼 국제안보정세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해 달라.
  -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에 따른 마지막 정권의 차관들이 임명되었다.
  - 안보문제에서는 경험이 일천했다.
  - 그 당시 에펠만 국방장관(현 독재청산재단 이사장)과 현 메르켈 총리도 참여했다.
  - 마지막 내각 장관들은 모두 아마추어였다.

- 차관에 임명되고 행했던 첫 번째 일은 10개의 임명장과 15개의 해고 문서에 서명하는 일이었다.
- 동독은 통독 이전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 당시 동서독의 평화협약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2+4조약 등이 필요했다.
-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실각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통일 이전까지는 NATO가 동독에 들어오지 않기로 하였다.

○ 동독인민군의 해체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1990년 4월 동독 총리가 모스크바 방문 시 동독이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동독은 여전히 구소련의 통제 하에 있었다. 당시 동독에는 38만 명 규모의 구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던 상태였다.
- 1990년 5월 5일, 2+4조약 협상이 시작되었다, 당시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소련과 동독 평화협정을 제의하였으나 동독은 거부했다.
- 1990년 5월 8일, 에펠만 장관과 아프라스 차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및 소련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당시 소련 외교안보비서관은 통일독일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 1990년 5월 22일, 폴란드를 방문했다. 당시 폴란드는 독일 통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폴란드 국민 68%가 우려를 표시했다.
  - 영국·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 서방국 정부는 독일 통일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I
II
III
IV
V

- 다만 당시 미국의 부시대통령만이 일관되게 독일 통일을 지지했다.
  -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을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련의 기존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 1990년 5월 31일, 고르바초프와 부시 회담에서 통일된 독일의 NATO 가입 여부는 독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 1990년 6월 22일, 2+4조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당시 동독 정부는 고르바초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다소 걱정하고 있었다.
    - 헬무트 콜(관계자)과 고르바초프의 코카서스 합의 이후 파리에서 외무부 장관이 만났다. 통일 독일의 동쪽 국경으로 오데르나이제를 합의하였고 동독 주민과 군대는 환영과 기대를 표현했다.
  - 1990년 7월 1일, 서독 마르크화로 동독 임금을 지불하고, 여행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 1990년 8월부터 4~5 주에 걸쳐 동독 인민군에 대한 정리, 해고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동독 인민군은 병사 11만 명, 탄약 20만 톤, 4,000대의 탱크 및 장갑차, 전투기 7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 199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통일협약을 진행했다. 8월 1일, 동베를린에서 동독에 연방 주를 설립하고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21일, 본에서 협상이 시작되어 동서독은 통일 협약에 서명하였다.

- 1990년 9월 12일, 2+4는 뉴욕에서 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모스크바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고르바초프의 입지 약화로 인한 소련 국내 문제로 변경되었다.
    - 9월 초 동독 인민군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도부 처벌을 통해 진정되었다.
  - 1990년 9월 24일, 동독은 바르샤바조약을 탈퇴했다.
  - 1990년 9월 27일, 동독 드메르세 총리는 UN에 동독 탈퇴신청서를 송부했고, 동독은 자의에 의한 유일한 UN 탈퇴국이 되었다.
  - 1990년 9월 28일, 동독 인민군 장군 24명을 해임했다.
  - 1990년 9월 30일, 서독 기민당(여당)과 동독 기민당이 함부르크에서 합당했다.
  - 1990년 10월 2일, 오후 1시 30분에서 45분에 걸친 동독 사령관, 고위 참모들이 마지막 미팅을 가졌다. 이들은 국가를 부르고 해산했다. 동독군은 병영, 군대 내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기·탄약 등을 회수하고, 평화롭게 해체되었다.
    -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통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동독인민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평화로운 해체가 이행되었다.
  - 1990년 4월 동독 인민군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거의 대부분 군대 존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평화로운 해체의 바탕이었다고 생각한다.
  - 이후 동독군 의무병 5만은 해체되었고, 직업군인 5만 중 3,200명은 장교로, 6,500명은 하사관으로 통일 독일군에 편입되었다.

I
II
III
IV
V

- 2+4 합의의 배경과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헬무트 콜 총리의 외교력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
  - 영국 대처 수상,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반대했다.
  - 고르바초프가 독일 편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상황이 역전되었다. 서독은 소련에게 14억 마르크 이상 지원했다.
  - 미국은 계속 영국에 압력을 가하고, 소련의 태도 변화 등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독일 통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SED(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과 1998년 사이 독일 의회의 두 여론조사기관이 구동독 독재 정권의 역사와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li> <li>○ 1998년 6월 5일 제2조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독일 의회는 독재 청산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제2독일독재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li> <li>○ 1998년 가을, 독재청산재단을 설립했다.</li> </ul>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동독의 독재가 통일 독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원적인 논의를 추구하고 있다.</li> <li>○ 동독의 독재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연구 및 정치, 언론기관과 대중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li> <li>○ 재단의 연구 자료와 다큐멘터리는 재단 도서관과 자료센터를 통해 습득하고 활용되고 있다.</li> </ul>
재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Stiftungsrat)는 재단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한다.</li> <li>- 이사회는 5년 단위로 선출된다.</li> <li>- 이사회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 독일 연방과 베를린 주정부 관리 및 구동독 독재 문제 연구에 헌신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li> </ul> </li> </ul>

재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이사장은 연방의원 마르쿠스 맥켈(MP Markus Meckel)이다.</li> <li>○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의 업무를 지휘한다.</li> <li>- 현재 가이어 에펠만(위원장), 베르트 파울렌바흐(부위원장), 도리스 리버만, 게르트 포페, 헤르만 루돌프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li> <li>-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의 프로젝트 펀딩, 연구비 책정, 회의 및 행사 등의 문제 대행, SED 독재정권에 대한 조사 및 재평가에 주력하는 여러 기관 중개, 직업적 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li> </ul> </li> </ul>
<b>연구비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D 독재정권에 대한 역사적 조사에 헌신하려는 각종 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 신청을 수용하고 있다.</li> <li>○ 펀딩 결정은 재단의 재정적 능력, 신청 내용이 재단의 주된 관심 및 현장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li> <li>○ 펀딩에 대한 법적인 claim은 존재하지 않는다.</li> </ul>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D 독재청산재단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 SBZ(소비에트 점령구역)과 GDR의 발생원인,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li> <li>○ 이런 취지에서 재단은 SED 정권의 부정과 그 희생자를 증언하며, 독일 사회 내에 반독재에 대한 합의를 깊게 하고 민주주의와 독일 통일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li> <li>○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R 사회를 조사하는 프로젝트 증진 및 지원.</li> <li>- 피해자 기관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정치적 교육.</li> <li>- 반 SED 독재에 관계된 자료 수집, 문서화 및 보관.</li> <li>-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법적 지원 제공.</li> <li>- 독재문제의 재평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li> <li>- 재단 고유의 출판물과 행사를 통해 대중적 토론에 기여, 상과 장학금 수여.</li> </ul> </li> </ul>

I
II
III
IV
V



## 나. 통일 이후 드레스덴의 발전 상황 브리핑

### □ 개요

- 일시: 2010년 5월 4일, 화요일
- 장소: 드레스덴시청 부시장실
- 주제: 통독 이후 구동독지역 변화 사례
- 독일 측 참석자: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부시장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드레스덴시에서 오늘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의 날’은 한국 관련 행사 및 기업설명회로 올해 75개 기업을 신청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드레스덴시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달라.
  - 1206년 도시가 시작되었다.
  - 인구는 513,000명으로 독일에서 인구 규모로 12번째 도시로 성장했다.
  - 면적은 328km<sup>2</sup>로 62%가 녹지다. 면적으로 독일에서 4번째 큰 도시다.
  -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2006년에 부채가 없는 도시를 이루었다.
  - 기업 수는 총 46,000개이고, 이 중 종업원 10인 이하를 고용하는 Micro 기업이 88%, 종업원 수가 10~49명인 Small 기업이 9%,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1%를 차

지하고 있다.

- 드레스덴시가 역동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학술이론을 뒷받침하는 기관과 대학이 다수 있고, 기초과학연구  
구소·응용과학연구소 등이 있으며, 연구인력 15,000명 정도로,  
산업·기술인력 밀집도에서는 독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드레스덴시의 경제발전 전략과 핵심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핵심경제발전전략과 우선순위는 Sector Specific economic  
promotion (Cluster), Technopoles strategy, Struggle for  
the best talent, Internalization 로 요약될 수 있다.
  - 3대 핵심 산업은 Micro-electronic, 생명공학(BT), 나노관련  
산업이다.
  - Mckinsey보고서에 따르면, 드레스덴은 반도체(semi-conductor)  
기술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성장 지역이다.
  - 2005년 기준 고용자의 55%가 High Tech에 종사하고 있다.
  
- 드레스덴시는 독일 통일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통독 이후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지역(도시)이고, 성공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이룬 도시다.
    - 구동독지역 예나, 포츠담 등도 성공 사례
  - 경제적 성과 이외 문화·역사적으로도 발전했다. 예술과 관광  
으로 연 1,000만 명이 방문한다.
  - 발전의 동인은 혁신적인 생각이다.

I

II

III

IV

V

## 다. 독일 통일 이후 20년

### □ 개요

- 일시: 2010년 5월 5일, 수요일
- 장소: 한스-자이텔재단 본부
- 주제: 1. 독일 통일에 담긴 외교적 함의  
2. 독일 통일 20주년-통일 이후 동독 재건 과정
- 독일 측 참석자: Dr. Peter Witterauf 한스-자이텔재단 사무총장, 라인하르트 마이어 발저 교수, 에두아르트 린트너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1) 제1주제: 독일 통일관련 회고 및 충고

- Dr. Peter Witterauf 사무총장님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 방문의 소감을 말씀해 달라.
  - 지난해 서울 및 강원도 고성을 방문했다.
  - 방문기간 동안 지난 시절 동서독 분단을 회상할 기회가 많았다.
  - 서울대 외교학과 학생에게 특강을 했었다. 통일비용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었다. 나는 학생들의 질문에 통일이란 목표를 향해 낙관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었다.
  - 그 외에도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가해서 접경지역 관련 토론을 했었다.
  
- 독일 통일을 되돌아보면 한국에 충고할 것들이 있을 것 같다.

- 올해는 독일 통일 2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다. 향후 과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스-자이텔재단은 CSU(기사당)과 함께 1970년대 이후 일관되게 독일 통일을 지지해왔다.
- 독일 통일은 갑자기 왔고 준비가 없었다. 따라서 짧은 과정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 당시 동독 상황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경제 및 환경 오염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
- 통일이후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중 ‘드레스덴’시는 모범적인 성공사례다.
- 아직도 할 일이 매우 많고, 특히 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통일에 따르는 문제가 있으나 통일 독일 전체 과정에서 자부심을 가지며 통일 독일은 안보 등 분야에서 역할이 가능하다.
- 한스-자이텔재단은 통일 관련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의 목적은 과거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탈출 시 사망한 경우와 동독 내 인권 문제 등이다.

**(2) 제2주제: 독일 통일에 담긴 외교적 함의: 외교적 측면에서 독일의 분단과정과 역사, 한국에 대한 시사점**

- Dr. Reinhard Meier-Walser 박사님, 분단 이후 서독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초대 아데나워 수상은 2개의 원칙을 고수했다. 첫째, 서방(미

I
II
III
IV
V

- 국, 프랑스 등)과의 관계 유지와 둘째, 통일 즉, 독일을 대표하는 국가는 서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 그러나 이 2개의 원칙은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서방국가와의 밀착으로 통일이 멀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프랑스 등과의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도 않았다. 1961년 이후 동서독 간 장벽 설치로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상대적으로 공산세력에 접근, 냉전을 심화시켰다.
  - 아테나위의 뒤를 이은 에르하르트 수상은 긴장 완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다. 체코 사태에 대한 소련의 무력 개입이 큰 장애였다.
  - 1969년 사민당·자민당(중도개혁 성향) 연합정권은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 독·소, 독·폴, 동서독 등 5개 협약을 체결했다.
    - 세부 내용 중 통일에 위배되는 조항과 통일과 멀어지는 조항에 대해 CSU(기사당) 및 한스-자이델재단은 보완을 요구했다. 실제로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방향(동독을 국가로 인정)으로 나아가는 경향에 반대했다. 내독성 유지 입장도 견지했다.
    - 1970년 8월, 독·소 협정에 관한 보완된 내용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했다. 서독헌법 서문에는 ‘독일의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 통일 관련 위협성도 있었다. SPD(사민당)가 동서독 간 맺은 기본 협약에는 2개의 국가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 동독에서는 이것을 더욱 명백하게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 이런 근거에서 출발하면 통일의 형식과 방법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다.
- 만약 서독이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통일’은 희미하게 되었을 것이다.

○ Dr. Reinhard Meier-Walser 박사님, 1980년대 말 독일 상황에 대해 말씀해 달라.

- 먼저 내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을 통해 동독 주민의 대량 탈출과 국내 시위가 있었다. 서독은 동독의 이런 상황을 전폭 지지했다.
- 외부 상황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약화되고 마침내 무력화되었다. 1987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노선(페레스트로이카 등)과 동유럽국가에 대한 억압 중단 선언이 있었다. 미국은 일관되게 독일의 통일을 지지했다. 1950년대 중반 미·영·불은 독일 통일을 지지하는 약속에 합의했다. 1989년 동독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독일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부시(아버지)는 통일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다. 당시 영국의 대처수상과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회의적이었다.

○ Dr. Reinhard Meier-Walser 박사님, 1989년 11월 2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 관련 10개 의제 제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통일 후에도 독일은 유럽공동체 틀 속에 남을 것을 천명했다. 독자적인 외교가 아니라 유럽 전체 틀 속에서 외교노선을 추

I

II

III

IV

V

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일 이후 역학 관계를 우려해 다른 서방 국가는 독일이 분단국가로 남기를 선호했다. 특히 통일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독일은 부상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 통일로 인해 독일은 2개의 원칙을 달성(서방과의 관계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완전한 국가로 탄생했다. 통일은 동서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2+4 조약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통일됨으로써 독일은 주권국으로서 국제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에는 불참했고 다만 재정만 지원했다. 이 당시 상황은 독일이 국제문제에 참여할 만큼 내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Dr. Reinhard Meier-Walser 박사님, 독일 통일 이후 외교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목표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통독은 NATO 속에 머물러 1950년대와 같이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둘째, EU에 적극 동참했다. 셋째, 국제 문제는 UN의 틀 속에서 행동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우호적·협조적 균형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중국·러시아와는 경제 관계에 대해 노력했다. 그러나 인권문제로 인해 양국과의 관계는 불편해졌다.
- 2003년에는 프랑스와 함께 이라크 참전에 반대했다.
  - SPD(사민당-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참전에 반대했다.
  - 미국은 당황과 함께 실망을 표현했다.

-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한 이유는 국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 상황은 미국 반대 여론과 반미 성향이 높았다.
-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선포했고, 세계 각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슈뢰더 총리는 즉각 협력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독일 국민 중 70% 이상이 미국과 이란 중에서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부시의 네오콘(체니, 럼스펠드 등)에 반발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 경향이 등장했다.
- 그러나 메르켈 총리(CDU 기사당)의 등장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복원되었다.

○ Dr. Reinhard Meier-Walser 박사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미중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평양의 외교능력은 탁월하다. 1950년대 중·소의 영향력 하에서 줄타기 외교가 대표적이다.
- 미국은 중국 내 정책에 큰 힘이 없다.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국가에 대한 입장은 “핵우산(한·미·일) vs 중국”과의 관점이다. 미국의 card는 제한적이다.
- 동독의 변화과정에서 소련은 대동독 지원을 중단했다. 독일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 소련과 중국은 자유화 형태가 다르다. 소련은 정치부문에서의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시스템은 고수하면

I
II
III
IV
V



- 서 경제부문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 (3) 제3주제: 독일 통일 20주년: 통일 이후 동독 재건과정

- Eduard Linter 의원님, 독일 연방의회 의원을 지내시고, 독일 연방 내무부 차관으로 재건작업에도 참여하셨는데, 통일 당시에 내부의 활동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독일 통일 당시, 서독 내무부 차관은 서울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강연 중이었다.
  - 헬무트 콜은 총리실 실장 자이트 박사에게 ‘집에 가라, 별일 있겠느냐?’라고 지시했다.
  - 갑작스러운 장벽 붕괴는 아무도 몰랐다. 통일은 역동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 통일의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일 관련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다. 동독지역에 새로운 연방 주를 만들어 독일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은 진행되었다. 통일은 무한정 시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 Eduard Linter 의원님의 통일과정과 주요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 통일 요소로서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 동독 주민이 통일을 스스로 원했다는 점이다. 서독의 지지를 끌어내고, 주변국의 지지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 헬무트 콜 총리의 역할이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조건으로 첫째, 4대 전승국이 통일을 추인했고, 둘째, 통일 독일이 NATO에 편입했으며, 셋째, 고르바초프는 동독 주둔 소련군을 사고없이 철수를 완료했다.
- 통일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 연방형태의 통일을 고려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다.
- CDU·CSU(기민당·기사당 연합)은 통일 관련 일관된 대동독 정책을 추진했다. 반대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런 통일정책 견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급변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 Eduard Linter 의원님, 독일 통일의 전제는 무엇이었는가?

-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독은 서독에 의존했다. 서독은 동독에 차관을 제공했다. 동독은 파산상태여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서독은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더 많은 인적 교류와 동독의 자율성 신장을 요구했다.
- 이것은 동독정권과 시민과의 관계 단절에서 한걸음 나아가게 만들었다.
- 따라서 통일 전에 동독 내에 서독 형태의 정당이 탄생하고 통일후 서독은 동독에 법·민주체제 재건에 기여했다.

○ Eduard Linter 의원님, 동독 재건과정에서의 Partnership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I
II
III
IV
V

- 모든 분야, 정당은 파트너쉽(SPD-(동독)SPD, CDU·CSU연합-CDU, 동서독 지자체들과 자매결연(지자체 시스템 재건))을 맺었다.
- 1990년 3월,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 총선이 실시되었다. 각자 정당은 동독 내 새로 탄생한 정당 지지를 위해 파트너 관계를 형성했다. 총선 이전에는 동독 전당대회에 참가 및 토론했다. 한스-자이텔 재단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 연방 주 차원에서는 동서독 주 사이 파트너쉽을 형성했다. 바이에른-작센주 등이 대표적이다. 서독 공무원들은 동독지역 주에 이주하여 약 35,000명이 행정재건을 지원했다.

○ Eduard Linter 의원님, 이주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 통일을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했다.
- 그러나 하루 2,000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동독은 빈 공간으로 남았을 것이다.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로는 서독 마르크화를 동독 화폐와 교환(화폐통합)했다. 실제 환율은 1(서독):4~1:10 정도였으나 1:2~1:1 정도로 교환됐다.
- 1990년 8월 '통일협약'이 체결(동서독 의회에서 추인)되었다.
-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인 통일이 달성되었다.
- 1990년 12월 총선에서 CDU·CSU(기민당·기사당)연합이 42.8% 획득하고, SPD(사민당) 25.4%, 자민당 11%을 획득했다. 제3제국 이전 동독지역은 SPD 강세지역으로 판명, 흥미로운 결과로 연구대상이 되었다.

- Eduard Linter 의원님, 통일 후 10년 이내 Blossom Landscape 만들겠다는 헬무트 콜 총리 발언의 영향은 무엇이었나?
  - 비판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달성되었다.
  - 통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동독 내에서 삶의 질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 현 동독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구비(도로, 통신망, 주요 문화재 등)하였다.
  - 연방정부는 매년 ‘통일보고서’를 발간하여 동독지역의 변화 실태를 입수 가능하게 했다.
  - 2000~2008년에는 1인당 GDP 신연방주 14.1% 증가(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음)하였고, 반면 구 서독지역 9.1%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서독 소득 격차가 감소했다.
  - 2019년까지 ‘통일세’가 징수(동서독 모두 해당)되었다.
  
- Eduard Linter 의원님,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동서독 간의 생각(사고)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동서독 간에 완전한 동질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지역 주민은 통일에 만족하고 있고, 과거로 돌아갈 것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 동독사회 기득권세력(향수, 복고세력)과 공산주의 동조자, 구 사회주의통일당, PDS(민사당-링케: 좌익당 Left)는 소수로서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 동독은 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집권 정부 형태였다.

I
II
III
IV
V

통치를 위해 행정구역만 가지고 있었다. 동독 지역을 신연방 주로 조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 동독지역에서 지자체 자율권, 조세행정권(세수 징수 가능)이 시행되었다.
- 동독지역에서는 사법부도 달랐다. 동독에서도 형법은 존재했다. 행정상의 문제는 법적 절차의 존재와 무관하다. 공무원의 대 주민인식 및 태도도 차이가 있었다.

○ Eduard Linter 의원님의 입장에서 남북통일에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동독 주민의 힘’이었다. 동독주민의 힘으로 슈타지와 보위부가 해체되었다. 이에 반해 서독의 지식인들, 진보계열 언론인들은 통일에 대한 동독인들의 열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서독 일간지, SITE(주요 신문) 및 동독을 여행(1987~1988년 사이)한 여기자조차 동독 여행 후 기사에서 동독인들은 ‘동독 독일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빌리브란트조차 통일 전에는 ‘통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했으나, 통일 후에는 ‘뿌리가 하나인 것은 함께 자란다’고 했다.
- 두 번째로 조언하고 싶은 것은 통일의 기회가 오면 용기를 가지고 꼭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력 격차로 북한은 남한을 닮고 싶어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계속 동독지역 신연방주의 높은 성장을 예상할 수 있나? 이에 대

- 한 서독지역 주민의 반발은 없는가? 2000년대 1인당 GDP 성장률은 신연방주(14.1% 증가)가 구 서독지역(9.1% 증가)보다 높으나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신연방주의 1인당 GDP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각종 보조 및 Infra,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 반면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EU 가입 동유럽국가의 노동력이 독일로 진출하면서 고용시장에서 동독지역 주민을 대체한 영향이 컸다.

## 라. 독일 통일의 경제적 성과와 헌법적 토대

### □ 개요

- 일시: 2010년 5월 5일, 수요일
- 장소: 아이히슈타트 카톨릭대학교
- 주제: 1. 독일통일의 경제성적표  
2. 통일과정, 독일 통일의 헌법적 토대
- 독일 측 참석자: 요하네스 슈나이더 교수,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1) 제1주제: 독일 통일의 경제성적표

- 슈나이더 교수님,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달라.
  - 통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다.

I

II

III

IV

V

- 당시 동독의 경제상황은 성장은 없고 도심 안은 폐허였으며, 환경문제가 심각했다. 구매력은 전무했고, 생산시설 낙후로 경쟁력은 바닥상태였다.
  - 서독의 지원이 없으면 지탱 불가능했다. 독일 통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동서독 화폐통합, 사회통합, 경제통합을 실시했다.
- 슈나이더 교수님, 화폐통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동서독 화폐통합은 당시 콜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실물경제에 영향(기업 부채 증가, 경쟁력 저하)이 큰 문제였다.
  - 화폐통합의 내용과 현상은 다음과 같다.
    - 서독 마르크(DM)와 동독 마르크(M)의 교환비율이 관건이었다. 실제 환율은 1:4~1:10 정도였으나 1:1~1:2로 교환했다.
    - 가게와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가게는 1:1~1:3, 기업·금융은 1:1.81로 교환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 화폐통합은 2주 만에 진행되었다. 1,600만 명의 동독인에게 마르크화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 화폐통합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1992~1993년 동독 지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1994년부터 진정되었다. 화폐통합 초기 서독제품(과거 동독지역에 없던 물건)에 대한 동독 주민의 욕구가 과다했다.
    - 화폐교환에 따른 현상으로 기업의 채무 증가(지불능력 불가능 상태에 빠짐)가 증가하고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감소했다.

○ 슈나이더 교수님, 사회통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동독은 규정상 사회안전망을 구비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통일 후 서독의 안전망을 그대로 동독지역에 적용했다. 4대 기본연금(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1995년 이후 간병보험도 적용했다.
- 연금 및 실업보험은 구동독지역에 적자를 발생했다. 구동독지역에 대한 지급액은 초기 이후 서독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 다르게 적용됐다. 동독지역에는 사용자, 노동자의 부담과 연방 보조 이외에 서독지원(transfer, 이전)이 포함되었다.

○ 슈나이더 교수님,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지역 기업에 대해 사유화와 민영화 작업을 추진했다. 8,500개 국유기업, 3만여 소단위 사업장 정리 및 240만ha 농장 토지 매각이 진행되었다. 매각 불가 기업은 청산되었다. 1994년까지 2억 5천만 DM 부채가 발생했고, 청산분을 포함하면 2억 7,300만 DM 부채가 발생했다.
- 경제통합을 위한 전체 자금 조달은 공공부문 채무의 증대를 유발했다.
  - 공공부문 채무는 1991년 6천억 유로(GDP의 40%)에서 2009년 1조 6천억 유로(GDP 60%)로 증가했다.
  - 이런 경제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세금·지원 결과 구동독 지역의 구도심 정비 등 효과가 있었다.
  - 특히 구동독지역 중 성공적인 지역으로는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이 있다.

I

II

III

IV

V



- 동구국가의 성장지수(1991~2008년)는 동독,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순이었다.
  - 그러나 동독지역 주민은 서독지역으로 상당수 이주하였다. 특히 젊은 층(이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수)과 학력이 높은 계층이 다수 이주했다.
- 슈나이더 교수님, 경제사회 통합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 동독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흐름이 변화했다. 통일 이후 서독, 서유럽은 동독(특히 마인트 인근지역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후 민간투자는 동유럽국가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 동독지역 인구의 이주 현상도 문제였다.

## (2) 제2주제: 통일과정, 독일 통일의 헌법적 토대

-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님, 통일의 헌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통일’은 정치·경제적 측면 외에 헌법적 측면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 1987년 개정된 한국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조항(4조)이 포함되어 있다.
  - 독일(서독)의 1949년 헌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강도는 한국이 강하다.
  - 통일의 많은 요소 중 헌법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통일 시에 맨 앞쪽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님, 서독 정부가 통일을 위해 구사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서독 정부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통일을 지향해 왔다.
  - 1969년까지 동독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 이후 신동방정책(사민당)을 통해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햇볕정책과 비견될 수 있는 정책이다.
  - 1949년~1989년 통일을 실제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 1989년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3월 총선 이후에야 통일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 정치적·헌법적 논의가 등장했다(23조, 146조 등).
  
-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님, 한국과 서독에서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차이는 무엇인가?
  -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사명이나 한국과 독일에서 차이가 있다.
  - 한국은 통일 형태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독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님, 독일 헌법에 나타난 통일 방식은 무엇인가?
  - 첫째, 서독의 기본법이 유효한 동독을 편입하는 형태(서독 헌법 23조)다. 서독의 경우 영토규정이 완전하지 않았다. 편입을 통해 영토를 확대했다. 이는 헌법상 간단한 작업으로 헌법 내용은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 민주적·법치주의 성격도 유지했다. 이 방식은 빠르게 통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I
II
III
IV
V

- 둘째,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146조와 관련)하여 새 헌법 발효 시에 기존 헌법은 효과를 상실한다. 독일 통일의 헌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통일된 독일 국민이 결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 통일의 방향을 제시(예를 들면 기존 서독 연방정부 시스템을 중앙집권제로 전환도 가능)한다. 이 경우 통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만약 이 가능성이 채택되었다면 통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었다.
  - 독일의 선택은 총선에 따라 첫 번째 안, 동독 편입과 조기 통일을 선택했다. 통일협약을 통해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회의는 서독 연방의회에 가입 결정하고 1990년 10월 3일 5개 신 연방주로의 편입형태로 통일되었다.
- 클라우스 슈튀베 교수님, 헌법적 측면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 및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한국의 경우 통일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독일의 23조, 146조)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한국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따라 영토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북한을 편입하는 식으로 통일이 완성되어야 한다.
  - 독일 통일 전 146조와 한국 헌법 13조 2항 비교 가능하다.
  - 한국의 경우 독일과 다른 형태(방식)로 통일될 가능성도 있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있다. 남북 합의(계약 또는 협의)를 통해 연방을 형성하고, 남북 상호의 구조를 조정해 가는 형태다.
    - 남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통일이 현실적이라고 생각

한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면 급진적 통일에 따르는 난제가 산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한반도의 경우 북한은 동독(서독의 미디어에 노출)에 비해 자유, 민주주의가 훨씬 미숙하다. 인구비율에서도 동서독에 비해 통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I

II

III

IV

V



## Ⅱ.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2



## 1. 개요

### □ 출장목적

-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 통일 20주년, 성공 프로젝트 독일통일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와 관련된 독일 현지 유관기관의 세미나 및 현장 체험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 동서독 접경지역의 생태·문화·경제적 발전상을 체험하고 향후 한반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활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 □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출장기간: 2010년 6월 26일~7월 4일(8박 9일)
- 출장지: 독일의 베를린, 포츠담, 라이프치히, 플라우엔, 예나, 뮌헨 지역 등

### □ 주요 일정 및 내용

- 6월 28일, 월요일
  -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과 “과거청산 작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독일 경제연구소(DWI)와 “통독이후의 경제 및 사회통합과정과 향후 발전전망”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구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문서보관소를 견학하였다.

I

II

III

IV

V



- 6월 29일, 화요일
  - 룬데 역케 박물관 견학 및 “평화의 시발점, 라이프치히, 고난과 감격의 기록들”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6월 30일, 수요일
  - 포크트란트 군과 “죽음의 선에서 생명의 띠로 - 독일 녹색벨트: 통일이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7월 1일, 목요일
  - 한스-자이텔 재단과 “독일 통일 및 통일 이후 과정에서의 독일정치 재단의 역할: 한스-자이텔 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 가.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워크숍





## □ 개요

- 일시: 6월 28일, 월요일
- 주제: 과거청산작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독일 측 참석자: 안나 카민스키 사무총장, 옌스 휘트만 연구원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1989년에도 서독시민들은 금세기 안에 통일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1월 9일 장벽 무너지던 날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 내독성도 있었는데 통일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을 기대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 냉전이 격화될 것이고 따라서 동서 양진영의 대결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대결의 심화로 공산진영이 안정성을 잃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이전에 공산국가들에서 발생한 자유갈망봉기(1953년 동독민중봉기-최초 사회주의국가 봉기, 50~80명 정도 사망하고,

I

II

III

IV

V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1956년 폴란드 헝가리 봉기, 1968년 프라하의 봄도 소련군에 의해 진압됨)가 폭력적으로 무참히 진압된 경험으로 인해 동독이 붕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 과거 공산당 독재 청산과정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독재시스템을 민주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있어 모범 답안은 없다.
  - 동독사례처럼 사회가 와해되는 경우, 그리고 동유럽체제가 붕괴되는 경우 해야할 일이 매우 많다.
  - 북한이 변화할지 혹은 붕괴할지, 그리고 경제체제를 바꾸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사람들의 정신적 공백을 메워나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모든 독재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통일독일은 1990년 10월 2일까지의 기록을 연구 활동과 동독 독재 청산을 위해 100% 공개했다. 그 결과 독재와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가?
  - 1990년부터 동·서독 양쪽 대학들에서 1,500개에 이르는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 방대한 규모의 연구가 모든 분야(사회·경제·정당 등)에서 이

루어졌다. 연구와 언론에서 특히 관심있게 다룬 분야는 동독 국가보위부(슈타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슈타지는 비밀조직 일 뿐만 아니라 핵심조직이었다. 이들과 공산당(사회주의통일당)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모든 (불법) 활동들이 100%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민들을 박해하고, 불법적으로 도청했던 활동들을 주로 밝혀냈다. 특히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된 사안들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 1990년까지 30만 명의 동독인들이 박해를 받아 정치범으로 체포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형법상의 조사 또는 형사처벌은 2004년에 완료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10만 건에 이른다. 그 중 형사소송은 1,000건이었고, 이중 유죄선고를 받는 것은 300건이었다. 금고형은 10명에 불과했다. 실질적 형량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는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 미진한 형량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 구동독 기득권층들은 미진한 형량이 자기들의 과거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 총체적 변화가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1990년 통일의 해에 사람들은 독재청산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10년 뒤에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그 이전 동독에 호의적이던 사람들이 ‘과거 동독의 모든 것이 나빴던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통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나빴는가?’라고 묻는다.
- 이러한 의문은 과거 독재시절,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I
II
III
IV
V

되어 있던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 최근에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의 총장이 동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선출 되었다.
  - 그가 바로 올버츠 총장(교육학 전공)인데,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교수자격시험(1989.2)을 제출했을 때, 제목이 “동독학생들의 이념화 과정의 개선(세뇌화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이었다.
  - 통일직후인 1990년에 과거 동독지역대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평가했는데, 올버츠 교수는 공산당원이 아니고 슈타지와 관련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통일직후 할레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과거 일에 대해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총장 선출이 과연 타당한 일이었는지,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더욱더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등의 논쟁도 있었다.
  - 이에 대해 올버츠 총장은 과거 독재시절에 대해서 현재 민주주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 이런 논쟁에 대해 ‘독재청산재단’에서도 중요한 테마로 삼고, 과거 독재청산문제 정보 및 자료 수집 및 계몽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의 장을 제공해서 진지한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
  
- 통일직후 3년 동안 모든 동독 교원, 교수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 주요 평가기준은 이 사람이 공산당원인지, 슈타지와 관계있는

사람인지였다.

- 전체 인원 중 80%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 자리는 서독의 전문인력으로 채워졌다.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프랑스의 과거 청산 경험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

- 독일의 경우 처음에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었고,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사회적 합의 의식은 강하지 않았다.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 개인을 용서하는 경우에 우선 가해자의 사과가 전제된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았고, ‘나는 동독의 체제 안에서 명령에 따라, 법에 따랐던 것에 불과했다’고 변명했다. 이는 자기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 비스텐하겐 박사(독재청산재단 연구원)

-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이후에 과거 청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왕이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문제를 덮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국은 이런 사례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진상규명을 충실히 한 결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오히려 알아가

I

II

III

IV

V

기 시작했고, 현재 이스탈지(오스탈기: 동독에 대한 향수)가 나타나고 있다. 가치판단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점은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의 보위부와 김정일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북한의 기본적 시스템(북한의 억압구조, 공개처형, 군대, 수용소)은 알고 있다.
  - 1990년에 슈타지 청산 작업을 할 때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 행동을 중심으로 청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폴란드, 스페인에는 공산당이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하고 있다.
  - 공산당은 있는데,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당의 이름을 변경해서 나오거나, 새로 창당을 해서 국회에 진출한다. 평균 20%정도의 표를 얻고 있다. 공산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정상분포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스텐하겐 박사
  - 통일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경제문제다. 그래서 콜 총리가 사회통합방안, 화폐통합방안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실업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이것이 또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했다.

- 심리적인 불안감이 초래되면서, 도대체 구동독시절 무엇이 나뻐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심리적 문제를 자신의 사고속에서만 이해했다. 동독 붕괴시점은 경제적으로 파탄상황이었는데, 이때와 비교를 하지 않고, 오직 현재 자신의 실업문제만 생각하게 되면서 객관적 판단을 못하게 되었다.

○ 문서보관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나?

- 1990년에 슈타지 본부에 가보니 상당한 양의 기록이 찢겨져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국의 스파이 관계, 군 보안대 자료 등이 파괴되었다.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 밝히기 어렵다. 특히, 상황이 명확치 않은 경우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상황이 명확치 않은 경우 피고의 입장을 우선시하려 한다.

○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 형법 적용은 공소시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외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950~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다.
- 과거 나치에 대해서도 청산작업을 한 바 있다. 나치는 1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40~50년 된 독재정권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I
II
III
IV
V



○ 형사 소송제기는 누가 하는가?

- 구동독 독재조사위원회 소속 특별검사가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동서 베를린과 동서독 내독간의 국경선에서 동독 국경수비대가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던 사건의 경우, 인권침해보존소 자료를 참고해서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처벌되어도 2~3년 옥살이에 불과했다.
- 에리히 밀케(슈타지 총수)는 기관범죄에 대해 사법적 처리를 받지 않았다. 다만, 1931년 개인적인 문제로 총격사건에 관해 처벌받은 것뿐이다.

○ 사법처리 조사위원회와 과거청산 조사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 1992년 독일연방의회 내에 과거청산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일된 국회는 구동독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스탈자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 과거청산 조사위원회의 8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 작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독재청산재단이 발족하게 되었다.

---

1. 공산당 유니폼을 입고, 공산당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

[그림 II-2] 독재청산재단의 8년 연구 결과물



\* 가운데 빨간 책이 독재청산재단의 8년 연구의 결과이다

- 조사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 공산당원인지, 슈타지 관련 여부를 주로 물었으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주로 거주지에서 진행되었고, 통일이 되자마자 구동독 주민 중에 공공기관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증거의 객관성의 문제는 없었는가?
  - 일단,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쓰기터 문서 보관소의 기록을 활용하거나, 탈동독 난민들의 증언을 활용했다.
  - 그러나 작은 경험에 기초한 사례들을 짜맞춘 것으로, 전체의 퍼즐을 다 맞추기는 힘들다.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고, 결론적으로 소수만 처벌 받게 되었다.
  
- 독재청산작업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계층에 따라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다. 슈타지 문서에 대해서

I  
II  
III  
IV  
V

오히려 서독 사람들은 그 문서가 공개될 경우의 폭발력을 우려해서 비공개를 원했다. 반면 동독대표자들은 공개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했다.

-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과거청산 작업에서 흑백논리적 접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독의 억압도 있었으나, 일상사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과거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 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억압,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계몽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흑백논리 아닌 전체적 그림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독재청산재단은 동독을 명백한 ‘범죄집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시작했다. 그래서 동독이 모두 다 나뉘었던 것은 아니라는 원칙에 대해 독재청산재단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의 동독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 동서독 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동독 사람들이 통일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의 자유’ 때문이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동독에 대한 독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더 알고자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나. 독일경제연구소(DWI) 워크숍

[그림 II-3] 독일경제연구소



### □ 개요

- 일시: 6월 28일, 월요일
- 주제: 통독이후의 경제 및 사회통합과정과 향후 발전전망
- 독일 측 참석자: 알렉산더 피셔(독일경제연구소 부소장)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1925년 설립(Largest Institute in Germany)
  - 2006년 대학원 설립
  - 한국 유학생 환영(독일통일과 통일비용: 경제)
  - 베를린자유대학에 통일부 용역으로 프로젝트 수행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경제사회 통합과정과 전개방향은 어떠했는가?
  - 통일이 15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지만, 여

I

II

III

IV

V

전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특히, 바이에른, 함부르크 등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통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통일비용으로 2조 유로 가량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투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독의 1년 GDP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요인은 통일 이후 사회적인 안정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화폐통합을 실시했다.
- 화폐통합을 1:1로 하다 보니, 구동독지역의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서 동독에 있었던 작은 자동차 ‘트라반트’는 동독마르크로 11,000 마르크였다. 당시 독일 연방은행의 총재였던 비트마이어 박사는 화폐교환을 1:8~1:10으로 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 비트마이어 박사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트라반트’를 1,000 마르크를 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 동독 고용시장 개방과 실업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 동독지역의 경제가 어렵게 되었고, 동독의 고용시장도 개방되었다. 결국 동독지역의 실업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2조 유로의 통일비용을 쏟아 부었는데, 65%가 소모성 비용(사회보장제도)으로 지급되었다. 65%가 건설적인 투자비용으로 들어가고 35%만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가 되어 버렸다.

○ 화폐교환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공식 환율은 2:1이었다. 당시에 25,000 동독 마르크는 그렇게 바꾸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는 1:1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우 화폐개혁이 이뤄진 후에 임금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결론적으로 화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 통일세를 아직도 걷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분단되어 있던 두 개의 지역이 어느 정도 편차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된 독일의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1차적인 요인은 통일과 분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원인이 더 크다.
- 이는 독일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으로 경제적인 통합은 15~20년 정도 지난시점에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 그러나 사회적·의식적인 통합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독일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18%인데, 예전에 베를린에서 동독사람과 서독사람이 결혼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동서독 사람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낮고, 독일 사람이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사회적인 통합은 향후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적 통일이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인구의 이동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예전에는 통일 이후 15년 까지 구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인구가 많았다. 1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남북 간이나 동서 간 이동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 통일된 독일에서(서독) 동독지역으로 넘어가는 돈(재화)이 많이 줄어들었다.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 전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독일의 통일과 관련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이전의 서독의 남북 간 지역을 비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 1990년에 예상했던 통일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닌가?
-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 헬무트 콜 총리가 1990년 초에 동독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화폐개혁 공약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공약 남발은 독일 경제를 붕괴시켰다. 화폐교환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지만,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에서는 기존의 정치기구를 통한 결정들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둘째,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화폐교환을 1:1로 한 것은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갑작스런 결과를 대비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는 경우에 한국이 떠안는 부담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담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충분한(몇 조 정도) 자금을 비축하고 절약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동독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동독 경제가 파괴될 정도로 1:1 화폐개혁을 했던 이유는 동독 사람들을 동독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 15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으로 자금이 이동했는데, 그 결과 동독

경제는 얼마나 성장했고, 서독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성장했나? 2조 유로를 어떤 식으로 조달했나?

- 처음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동독은 산업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서독에서 생산된 물건을 동독 사람들이 구매했다. 그렇게 돈과 물건이 순환되었다. 1990~1993년까지 동독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994년부터는 실업률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런 경제 순환과정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된 것이다. 필요한 자금은 ① 세금을 올리고, ② 독일 통일 정부가 외국에서 차관을 받거나, 국제 금융기구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달했다.
- 특히 동독의 사회보장제도(연금)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동독 시절에 일했던 것을 다 산정해서 지불했는데, 보통 구동독에서는 서독과 비교해서 일을 시작한 나이가 훨씬 어렸기(16살) 때문에, 동독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 이런 것들에 대해 서독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다.

○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문 동기는 무엇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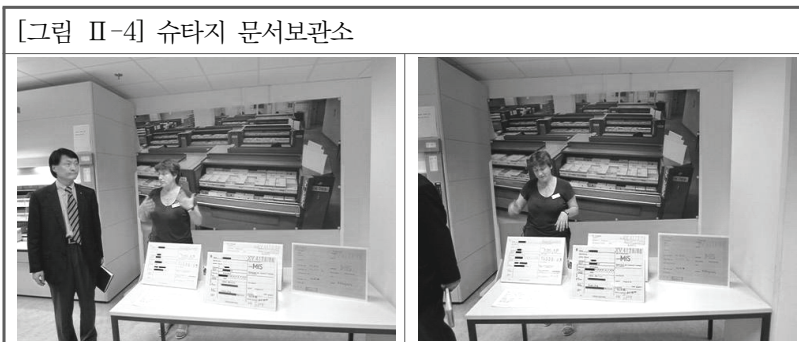
- 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가 북한경제연구소와의 만남을 부탁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DWI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도 하고, 평양에 있는 경제연구소에 노하우를 전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가게 되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독일 연방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독일 경제개발부와 협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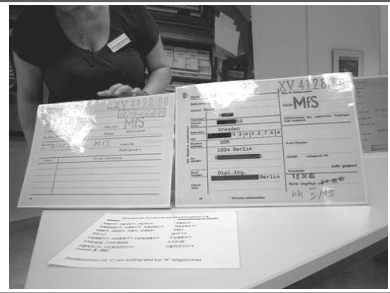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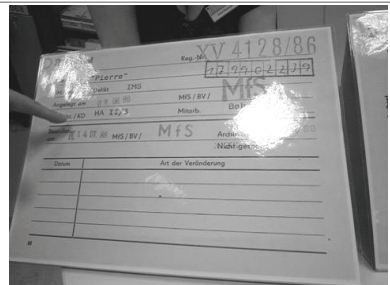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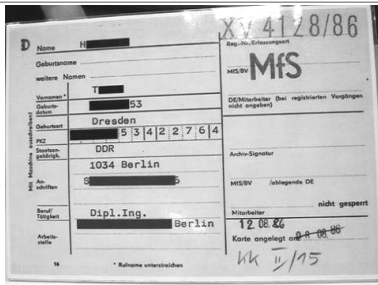
- 평양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간략히 말해 줄 수 있는가?
  - 북한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기득권과 군대에 의한 사회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동독에서 나타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 한국의 청년들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볼 때,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 그런 걱정 때문에 통일을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된다. 통일을 할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계속 분단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선은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통일이 갑자기 되더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때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다. 동독비밀경찰 슈타지 문서보관소 견학





[그림 II-5] 슈타지 문서보관소의 카드



\* XV는 슈타지에서 근무를 했음을, “86”은 1986년에 이 카드를 만들었음을 말한다. 여러 유형의 카드가 있는데, 위 카드가 인적사항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카드이다.

\* 같은 번호를 찾으면 다른 카드가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카드의 이름은 가명이고, 2~3부처(스파이 담당부서-미국 대사관 관련)에서 근무했고, IMS는 비공식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말한다. 1988년 7월 14일날 임무가 종료되었고,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번호가 706임을 말한다. 이 번호를 찾으면 이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카드가 약 500만장 있다.

I  
II  
III  
IV  
V

## □ 개요

○ 일시: 6월 28일, 월요일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문서보관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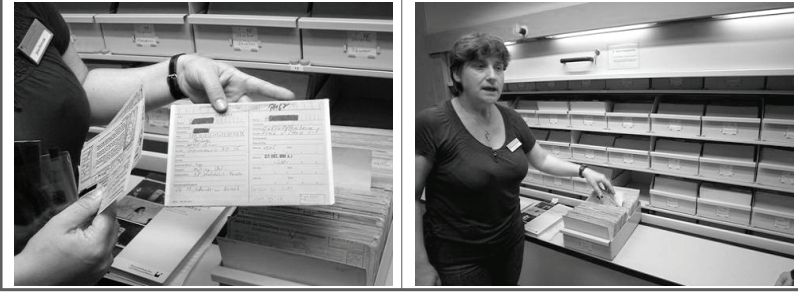
- MFS(슈타지의 공식명칭, 국가보위부)의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독시절에는 슈타지 본부 검 문서열람실로 사용되었다. 15개의 행정구역마다, 행정기관과 분소가 있고, 지금도 존재한다.
-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련 서류들을 다 열람할 수 있다. 이곳은 신상정보 카드들이 있는 곳인데, 동독지역 전체에 3,900만장의 카드가 있고, 베를린에는 1,800만장이 보관되어 있다. 붙여 놓으면 5km 정도가 되는 상당한 분량이다.

○ 신상명세 카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 카드에는 기본적으로 슈타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정보요원들이 감시하는 사람) 또는 정보요원의 신상명세(이름(정보요원의 본명), 생년월일, 주거지 주소)가 다 들어있다.
- 그러나 이 일반카드만 가지고는 국가보위부에 협력한 사람인지, 감시대상인지는 알 수 없다. 카드도 여러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 스포츠, 교육 등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M부서에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을 했다. 모든 우편물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검열했다. 받는 사람, 보낸 사람을 적고, 우편물의 내용

들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했다.

[그림 II-6] 슈타지 문서보관소





○ 문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15개의 행정 구역 안에 있는 슈타지 분소에서 문서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분류를 했다 (1990년 1월 베를린 본부에서 시행).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문서를 끈으로 묶어서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했다. 끈으로 묶여 있는 여기 자료들은 아직도 자료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들이다.
- 베를린에 있는 문서만 일렬로 세우면 약 23km 정도 되며, 현재 약 75%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문서에 번호를 매겨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이방은 '구리방'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도청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찢어진 면을 스캔해서 종이의 색깔이나, 찢어진 선, 면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기술은 독일의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맞춰진 자

I  
II  
III  
IV  
V

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이다. 2006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400봉지 정도 되었고, 총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봉지가 16,100개 정도이다.

- 일부분서가 미국 정보기관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사실이다. ‘로젠홀츠’라고 하는데, 1990년에 미국 CIA로 넘어갔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는 모른다. 마르쿠스 볼프가 서방에 보낸 첩보원들에 관한 내용이 주 자료인데, 그들의 인적사항 카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것들이 넘어갔다. 그 자료들은 이미 복사해서 갖고 있다.

[그림 II-7] 슈타지 문서보관소	
	
<p>* 슈타지 문서보관소</p>	<p>* 슈타지의 수장 밀케장관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슈타지 건물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뒤에 보이는 아파트까지 슈타지에 속하는 등 규모가 매우 컸다.</p>

	
<p>* 슈타지 문서보관소와 슈타지 문장</p>	<p>* 슈타지 문서보관소와 회의실</p>
<p>[그림 II-8] 파손된 슈타지 문서들</p>	
	
<p>* 1989년에 시위가 격화되고 정권이 붕괴되는 조짐들이 보이면서 슈타지가 문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찢어졌던 문서를 봉지에 담아놓았다.</p>	<p>* 1995년부터 뉘른베르크에서는 파손된 문서를 손으로 맞춰서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300개 포대 분량의 내용을 원래대로 맞췄다고 한다.</p>

- 기록보존소에 관심을 가진 국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나?
  -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슈타지 문서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우리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동독은 사회주의 위성국가 중의 하나로서 많은 정보들을 소련에 제공했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전문적인 문서보관소를 만들

I
II
III
IV
V

어서 문서를 넘기기까지는 8~10년 걸렸다.

- 그 전에는 이 문서들과 사회주의 정권의 안보부를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견학하러 왔었다.
- 독일에서는 슈타지가 해체되는 과정이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당시에는 MFS 국가보위부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해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문서를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동독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자, MFS(국가보위부)를 AFMS(국가안보국)으로 개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원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독일은 문서보관소에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문서 원형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다.

○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은 10년 동안 자료정리가 안되다 보니, 각 정당별로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독일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슈타지 문서보관소의 구조도 독일의 슈타지 문서보관소와 비슷한 기능을 했었다.
- 통일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이 어떤 식으로 이 문서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다. 동독사람들은 전면 공개를 주장했고, 서독 정치인들과 주민들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동독 대표자들이 슈타지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통일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슈타지 문서는 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다.

- 기록보존소의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과거 슈타지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 커다란 이 건물군 전체가 과거 슈타지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비밀경찰의 가족들까지 이 건물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
  - [그림 II-7] 왼쪽의 마크는 슈타지의 문장으로서, 방패와 칼이 표시되어 있다. 슈타지는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당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억압,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다.
  - 비공식요원(IM)만 약18만 명 있었다. 슈타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베를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동독전체에 7,000~10,000명 정도가 활동을 했고, 군단위로 205개의 사무실과 200여개의 특별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 이외에 동독 전체에 1,000여개의 비밀 안가를 마련해서 요원들과 접촉했다. 독일 인구당 정보원의 숫자가 매우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다.
- 그렇게 강력한 조직이었다면 독일 통일을 저지하려 했을 것 같은

I
II
III
IV
V



데 슈타지는 어떤 역할을 했나?

- 동독은 영토가 크지 않지만, 정권차원에서 동독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0대 공업국이라고 선전선동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게에 가면 물건 진열대는 텅 비어있었고, 자동차를 한대 사려고 해도 15년을 기다려야 했다. 모순된 상황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 1989년에는 동독의 대규모 시위가 평화롭게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이었다. 1953년에 일어났던 최초의 시위가 무력으로 진압이 되었고, 천안문 사태도 무력으로 진압 당했기 때문이다.
- 1987년에 슈타지가 동독 최고 수뇌부에 더 이상 억압적인 수단으로 동독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 지금 슈타지 문서보관소의 인원과 각 조직 역할은 무엇인가?

- 1,600여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 문서보관 아카이브 담당, 공공기관의 취업적합성 여부 판별, 미디어 홍보, 연구와 교육을 담당, 전시회 부서 관련서적, 학생들 교재 제작 등의 업무분담이 되어 있다.
- 정보를 외부로 주는 경우에는 철저히 개인의 정보보고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 베를린 본부에도 13개의 지부가 있다.

○ 냉전 시대 때 동독이 북한의 보위부와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단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부와는 그렇게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소련(KGB)은 1:595, 동독(슈타지)은 1:180으로 감시를 했는데, 혹시 북한(보위부)은 몇 대 몇인지를 아나?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는가?
  - 1990년도에 KGB의 문서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알게 된 수치다. 북한에 관해서는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
- 슈타지가 동독 주민들을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타지는 동독 주민들의 변화 요구를 파악하지 못했나?
  - 그런 상황은 동독의 TV를 통해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호네커(동독 공산당 서기장)가 10월에 40주년 퍼레이드를 할 때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이었다.
  - 그때 라이프치히 시에서는 매주 월요시위를 했고, 매주 시간이 갈수록 군중의 수도 늘어났다. 이 시위는 동독 지역 전체에서 들불처럼 번져갔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 라이프치히에서 대규모 시위 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고층빌딩으로 올라가서 시위대 사진(비디오카메라)을 찍어서 서독의 공영방송국에 보냈다. 결국 서독의 TV를 통해서 동독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동독 정권의 입장에서 천안문 사태처럼 무력으로 진압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동독 장교들은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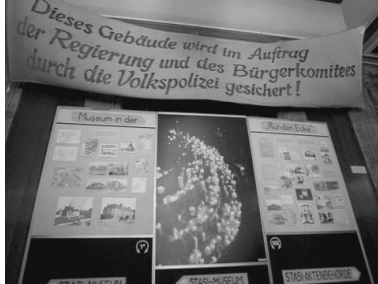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시위대가 무기도 없는데 발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독이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자신들의 체면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썼다.

○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많은지? 이 문서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현재 기록보존소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취업 시 이 사람의 과거전력이 적합한 사람인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1990년도에는 이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1년에 약 25만 건이고, 통일 후 15년 이후에는 많이 줄어서 1년에 300~500건 정도다. 특히, 고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력을 조사한다.
- 개인적으로 자신의 과거사, 내가 슈타지에 어떤 관찰대상이었는지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해 못할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었는지, 그 일과 슈타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알아본다.
- 슈타지의 관찰 감시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동독정권을 반대하고,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감시인들이 따라붙었다. 이들의 약점을 잡아서 위협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 라. 룬데 엑케 박물관 워크숍

[그림 II-9] 룬데 엑케 박물관	[그림 II-10] 촛불 평화시위 사진들
	
* 룬데 엑케 박물관 입구	* 1989년 10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이면 촛불을 켜놓고 평화 시위가 개최되었다. 당시의 사진 들이 붙어있다.

### □ 개요

- 일시: 6월 29일, 화요일
- 주제: 평화의 시발점, 라이프치히, 고난과 감격의 기록들
- 독일 측 참석자: 마티아스 폴리츠 소장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독일 통일에서 룬데 엑케 박물관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 1989년 12월 3일 시민들이 룬데 엑케 박물관을 접수하였고, 그때 그 시위에 직접 참가했다.
  - 이 룬데 엑케 박물관은 역사적인 장소이다. 슈타지의 라이프치히 본부로 사용되던 건물이었고, 당시의 모습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바로 이 앞 길에서 1989년 10월 2일부터 대규모 시위

I  
II  
III  
IV  
V

가 있었다. 특히 매주 월요일 마다 ‘월요시위’가 개최되었는데,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링을 돌면서 슈타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 10월 2일부터 월요시위가 계속 있었지만, 단 한번도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 건물 앞에서는 감정이 격앙될 수 있는 장소였지만, 돌을 던지거나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촛불시위를 하는 등 차분하게 폭력을 쓰지 않도록 시위를 주도하는 평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한다.
- 1989년 1월에 전단지 10,000장을 만들었지만, 5,000여장 정도 밖에 뿌리지 못했다. 이 전단을 뿌렸던 주동자를 슈타지가 체포하였다. 이 사건이 서독과 미국에 알려졌고, 마침 오스트리아 빈에서 CSC 외무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서독과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CSC 회의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주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여기에 대해서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가 서방의 여론이 무서워서 이들을 석방했다. 이일로 라이프치히에 있던 시민운동가들과 시위자들이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는 1989년 사건의 긍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다. 1989년 10월 9일 슈타지는 시위대에게 강제진압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실제로 경찰들이 진압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강제진압이나 무력진압은 없었다.

○ 왜 라이프치히에서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강했나?

- 첫째, 라이프치히에서는 이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이전부터 저

항의 움직임과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환경 분야에서만 움직임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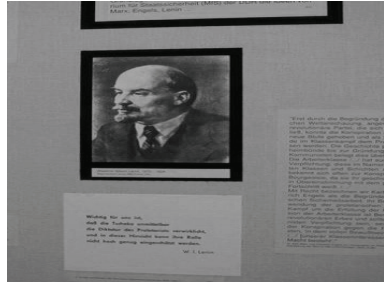
- 둘째, 그 당시에 동독사람들이 여행의 자유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p>[그림 II-11] 슈타지가 사용했던 문서 파쇄기</p>	<p>[그림 II-12] 룬데 역케 박물관</p>
	
<p>* 슈타지가 사용했던 문서 파쇄기이다. 왼쪽의 돌맹이처럼 보이는 것이 파기된 문서봉치이다</p>	<p>* 룬데 역케 박물관 내부</p>

○ 이 건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 건물은 슈타지 본부로 사용되었던 건물로서, 사용당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칸마다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 이름은 국가보위부이지만, 국가 안전부나 비밀경찰의 역할을 했다. 국가를 지키는 의미보다는 공산당을 호위하는 안전기구 역할을 한 것이다.

I
II
III
IV
V

<p>[그림 II-13] 라이프치히 슈타지 책임자의 제복</p>	<p>[그림 II-14] 레닌의 사진</p>
	
<p>* 라이프치히 슈타지 책임자의 군대 정복인데 장군계급을 가졌다고 한다. 평소에는 제복을 입지 않고 민간인 옷을 입었다.</p>	<p>*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 당시 비밀경찰의 대표로 활동했고 소련 KGB의 원형이 되었다.</p>

○ 슈타지와 KGB의 유사성이 있는가?

- 슈타지는 소련의 KGB의 활동방식을 모방해서 조직을 구축했다.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보부의 원형은 KGB이다. 따라서 문서 정리방식 등에 유사성을 볼 수 있다.

<p>[그림 II-15] 슈타지 군대 시스템</p>	<p>[그림 II-16] 슈타지의 제복</p>
	
<p>* 슈타지는 군대 시스템을 가졌다. 정식요원이 9만 여명 정도로서 계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유사시에는 중무장을 할 수 있었다.</p>	<p>* 슈타지의 제복</p>

-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슈타지의 규모는 어떠한가?
  - 슈타지는 라이프치히 주변을 군 단위로 나누어서 주민들을 관찰했다.
  - 그리고 어떤 분야(특히 주민, 기관감시)에서든 슈타지의 감시 체계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 건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1950년에는 100명 미만이고, 동독이 무너지기 전인 1980년대까지 400명 정도 근무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구역을 담당하는 비공식정보원(IM)은 10,000명 정도였고, 행정구역의 주민은 150만 명 정도였는데, 이는 상당히 촘촘한 관리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슈타지의 조직과 구성원은 어떠한가?
  - 비공식정보원(IM)은 점조직이고, 관리하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 전 분야에 침투되어 활동했고, 누가 비공식정보원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체계를 관리하는 서류는 꼼꼼하게 관리되었다.
  -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비공식정보원(IM)으로 슈타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비공식정보원들은 보수를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사상이 투철하기 때문에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보수보다는 선물, 메달, 훈장으로 보답 받았다.
  - 비공식정보원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슈타지 쪽에서 적합한 인물들을 찾아서 훈련시켰다. 이 사람들이 비공식정보원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철저히 기록했다. 1960년대부터 외부에 동독이 독재정권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특

I
II
III
IV
V



히, 슈타지는 자체적으로 법대를 보유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p>[그림 II-17] 변장술 교육과정 도구들</p>	<p>[그림 II-18] 슈타지가 촬영한 사진들</p>
	
<p>* 변장술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있었다.</p>	<p>* 슈타지는 동독인들의 각종 모임은 물론, 동서독을 지나는 차들도 촬영하였다.</p>
<p>[그림 II-19] 슈타지의 안가 위치</p>	<p>[그림 II-20] 슈타지의 첩보활동 도구들</p>
	
<p>* 검은 점이 찍힌 곳에 슈타지의 안가가 있었는데, 총 600여개에 달했다.</p>	<p>* 슈타지는 첩보활동을 위해서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렌즈오 카메라로 유명한 칼 차이스(사)와 산학협동을 통해서 필요한 도구를 개발했다.</p>

[그림 II-21] 마흥에 위치한 슈타지의  
이동 지휘본부 병커 사진들



\* 라이프치히로부터 30km 떨어진 '마흥'이라는 곳에는 유사시에 슈타지 간부들이 회동할 수 있는 이동 지휘본부 병커가 있었다.

- 이 건물 이외에 슈타지 활동을 위한 건물도 있었나?
  - 슈타지의 핵심관리인 정보원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거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안가가 필요했다. 안가 외에 사격연습장, 휴양소 등의 건물도 존재했었다.
  - 병커는 어떤 전쟁이나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유사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놓았다.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바로 병커나 임시지휘본부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들만 10만 명 정도의 조직을 짜놓고 있었고, 관청, 기관에 있는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 라이프치히 지역의 슈타지의 활동 중에서 비공식 요원들의 특징적인 활동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동독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외부에 보이려고 했는데, 슈타지가 만든 법대에서 심리를 연구해서 사람의 심성을 파괴하

I
II
III
IV
V

도록 활용했는데, 특히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지능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 1976년에 이와 관련한 행동지침을 문서상으로 하달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시위가 있을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술가나 문인들을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도록 연구했다. 이렇게 개인을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공식정보원(IM)이었다. 비공식정보원들이 정보만 캐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 예를 들어 유명한 인물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해서 동독사회에서 매장시킨 사례도 있었다. 과정을 살펴보면,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동성도착자’라고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 슈타지를 비난하면 비공식정보원(IM)들은 A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상부에서 ‘어린이 성추행범’이라고 했다고 교묘히 말했다.
-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이 실추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 파괴 효과가 있었다.
- 특히 슈타지가 만든 법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아직도 ‘Dr’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 라이프치히의 슈타지가 비밀문서를 파괴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 슈타지가 마지막에 문서를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문서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슈타지와 시위대가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 시위대는 슈타지에 의해서 문서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월요시위가 있던 날 오후에 시위대가 와서 “우리는 슈타지 문서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슈타지가 이를 거절했다.

- 그날 밤에 20만 명의 시위대가 다시 왔고, “우리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 그때 문서를 봉인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슈타지에 남아있던 문서들은 다 보존된 것이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슈타지 문서를 세우면 약 10km 정도이고, 동독전역에 있는 문서를 세우면 180km정도가 되는 방대한 양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다른 관공서나 사회주의통일당 내의 문서들은 지킬 수가 없었다. 1990년 초 이후에도 문서 파괴 작업이 계속되었다.
- 비공식정보원들(IM)의 신상을 카드뿐만 아니라 필름으로 만들어서 튼튼한 용기에 담아놓았다. 왜냐하면 종이는 유사시 불타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필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도 파괴되지 않고, 다시 상황이 안정이 되었을 때, 비공식정보원들(IM)에 대한 접촉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타지는 종이문서를 파괴하기 바빴지만, 이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이것이 그대로 캐비닛 안에 들어있었고, 그전에 비공식정보원들(IM)이 누구였는지도 알게 되었다.

I

II

III

IV

V

[그림 II-22] 슈타지의 조사시설  
겸 감옥



- 슈타지가 만든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었고 수감생활은 어떠했는가?
  -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냈다. 동독을 탈출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를 슈타지에서 맡아서 했다.
  - [그림 II-22]는 다른 곳에 있던 감옥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다. 창문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창이어서 밖을 못 보도록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도록 했다.
  - 감옥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정보가 교류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이 감옥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했는데, 잘 때도 손을 배위에 똑바로 올리고 자야 했다. 담요를 머리위로 올려서 덮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 간수가 10분마다 점검을 하는데, 적발되면 자세를 바로 잡도록 강요받았다고 한다.
  - 어떤 사건으로 인해 슈타지 관할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슈타지 전담 법관을 통해 사법재판을 받게 되었다. 밖에서

볼 때는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슈타지가 관장한 것이다.

○ 슈타지 직원들은 통일 이후 어떻게 살았나?

- ① 경제적인 측면: 슈타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는 전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다. 시위대들은 슈타지 직원들이 공공기관보다는 민간회사에 취업하기를 바랐지만, 결국 행정, 공공기관 등에 일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 1990년에 통일되고, 4~5년간은 슈타지의 정직원들이 누구인지 대강 알 수 있었다. 그러나 5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다. 그러나 비공식정보원들(IM)은 처음부터 누구인지 몰랐다.
- ② 정치적인 측면: 사회지도층이었는데, 알고 보니 비공식정보원(IM)이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 공공기관 취업자를 대상으로 슈타지 전력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실제로 조사에 착수했다. 요직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나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처음에 정직원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했던 사람들은 후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좌익당의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치 박물관 관리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슈타지 활동을 했었는지를 금방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만 해도 행정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
- 그리고 슈타지들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교묘하게 자기 것

I
II
III
IV
V

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한 곳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슈타지 전력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서독 정부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었다.

- 시위를 평화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 이유는 엄청난 숫자의 시위대가 몰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7만 명 정도였는데, 시위를 막으려 나온 경찰의 숫자가 8천 명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시위대 규모에 기가 눌렸다. 시위대 또한 무력을 촉발시킬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동독정권의 반응이 굉장히 늦었다. 진압을 하거나,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여름에만 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 동독정부는 구소련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동독정부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소련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정부가 그런 무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을 것이고, 지도부 또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 마. 라이프치히시 현대사 포럼 박물관 워크숍

### □ 개요

- 일시: 6월 29일, 화요일
- 주제: 독일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남긴 유산
- 독일 측 참석자: 슈타인 호이저 홍보관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1945년 전후 켈른 지역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는가?
  - 1945년 독일에서 시작한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다.
  - 전쟁이 끝난 후 켈른 지역은 다 파괴되었지만, 켈른 대성당은 연합군의 폭격시 이정표로 삼았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남았다.
  - 포츠담 회담에 참석했던 처칠, 트루만, 스탈린이 독일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하는 지를 결정했다. 전후에 4개의 D(탈 나치화, 민주화, 무장해체, 군대를 더 이상 동원할 수 없게 함)를 목표로 삼았다.
  - 처음에는 라이프치히에 미군들이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미군이 빠지고, 소련군 점령지역이 되었다. 동독지역에 들어온 소련군들은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소련군에 의한 성폭행, 강간 등이 일어났다. 소련군들이 야만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소련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동안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거쳐 오면서 나치가 있던 포로수용소를 다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군대의 심각한 만행을 다 보면서 왔기 때문에, 소련군들이 야만적인 행동을 하면서 복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림 II-23]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동독공산당)의 로고



-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설립과정과 당시 사회상은 어떠했는가?
  -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독일공산당(KPD), 사회민주당(SPD)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손을 잡은 표시는 두 당의 당수가 악수함을 뜻한다.
  - 외형상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화합 합병으로 보이지만, 실은 공산당과 소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합쳐진 것이다. 같은 해에 많은 단체들(예: 청소년 조직(FTJ))이 결성이 되었다. 집중화를 통해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 전쟁 배상금이라는 이유로 소련군이 독일에서 기계들을 다 빼앗아 갔다. 1945년에 빼앗아 간 기계가 1989년까지 모스크바 근교에서 사용되는 것이 발견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기계들이었다.

○ 독일민주공화국(DDR)의 설립배경은 어떠했는가?

- 1949년 10월 4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생겼고, 모든 것은 소련의 승인을 받았다. 동독 측에서 헌법을 만들고 동독이 건립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선거는 1950년으로 연기되었다.
-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해에 형식적인 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투표용지에 원하는 당을 찍을 수 있는 표시가 없었다. 동독의 첫 선거는 용지를 받고, 반을 접어 그냥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통일당(SED)은 98~99%의 지지를 받았고, 항상 선거 조작이 있었다.
- 1955년에 서독의 군이, 1956년에는 동독 인민군이 창건되었다. 서독군은 NATO의 일원이 되었고, 동독군은 바르샤바 조약군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군대가 창건되고, 각각 군사동맹으로 다른 영역에 편입됨으로써 다시 합쳐진다는 것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되었다.

○ 동독의 1960년대 생활상은 어떠했는가?

- 동독 주민들의 삶은 전쟁이후에도 힘들었다. 농장은 협동농장이 되었고, 생산시설은 전부다 국유화되었다. 반대세력은 박해를 받았고, 노동은 더 많이 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사망했다. 동독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나아지겠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혀 예상을 빚나갔다. 오히려 더 어려워 졌고, 동독은 이전의 정치행태를 계속 이어갔다.
- 그래서 1953년에 사람들의 예상이 빚나가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1953년 6월 17일은 동독 민중

I
II
III
IV
V

들의 봉기가 일어난 날이다. 7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독 주민들이 자유 시위를 했다. 소련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탱크를 배치하고, 포를 설치했다. 공산주의 최초의 봉기는 무력진압되었다.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체포되어서 감금되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 동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살기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반대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소련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처형했다. 둘째,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셋째, 동독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1962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생긴 이후, 300만 명의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 동서독 간의 국경선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장벽이 있었고, 바닥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철조망에는 자동발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의 베를린으로 많이 넘어갔다.
- 그리고 넘어온 사람들은 주로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이었다. 동독의 정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동베를린에 의사, 간호사가 없었다. 동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이 서독으로 넘어간 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짓 선전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에 장벽을 쌓았다.
- 이때 당시에 서베를린에서 일하면서 동베를린이 거주지였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산가족이 생겼고, 일을 마치고 갑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망감, 분노감을 느꼈다. 장벽건설 책임자가 에리히 호네커였다.

-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세우면서 ‘우리(동독)는 외부의 파시즘 세력(서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짓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이 되었다.
- 1960년대 들어와서 동독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병영에서는 그날의 상황을 전신을 통해서 전송했고, 이 전파로 인해서 TV전파가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 동독 사람들은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서독의 TV방송을 볼 수 있었다. 장비는 간단했다. 원통형 안에 구리 용수철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서독의 TV를 볼 수 있었다. 이 걸의 케이스가 우유를 담았던 용기인데, 이를 설치하느라, 우유 담을 용기가 없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 이산가족들은 서독에서 보내온 소포들을 동독에서 받았다. 동독사람들 사이에는 “삼촌이 정치국원인 것보다 서독의 이모나 고모가 더 낫다”는 말이 유행했다.

○ 동독의 1970년대 생활은 어떠했는가?

- 1970~1975년 사이에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았다. 음악수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70년대에 ‘통일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975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했다. 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었다.

I
II
III
IV
V

-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적으로 화학 산업이 발전한다. 색  
깔이 들어간 그릇들과 나일론 등이 생산되었는데 이것들은 모  
두 서독을 모방한 것이다.
- 동독에 식량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지만, 상점에 공산품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있어도 상당히 비쌌다. 라디오와 녹음기가 같  
이 달려있는 제품의 가격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근로자 한  
달 월급이었다고 한다. 전화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계가 아  
니었고, 높은 사람의 끈이 있어야 했다. 특히 열대과일은 특권  
층만 먹을 수 있었다.
- 가게에 들어오면 일반인에게는 오늘은 물건이 없다고 보내지  
만,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공산당 당원, 특권계층에게는 ‘구부  
린 물건’<sup>2</sup>을 줬다. 이 풍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다.

○ 동독의 1980년대의 생활과 국민들의 민주화 변화 열기는 어떠했  
는가?

- 동유럽에서의 폴란드가 1980년에 ‘솔리다리테’라는 단결의 기  
치아래 개혁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  
반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시작되었고, 소련은 형님국가였다.

---

<sup>2</sup> 일반인들에게는 물건이 없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주거나 특권층에게는 물건을  
내주었다는 뜻의 은어다. 예를 들면 동독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바나나가 왜 휘  
었나? -바나나가 푹바르면 동독에 들어갈 수가 없고, 휘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가  
있다. 또한 “왜 레몬이 신가? -레몬은 독일어로 시다와 화가 난다는 뜻 2개가  
있는데, 동독은 그런 화가 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레몬이 필요하다는 유머가 있다.  
하지만 유머는 동독시절에는 위험한 이야기였다.

- 하지만 동독정권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거부했다.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면서 동독에서는 한 때 소련의 잡지판매나 영화상영이 금지되기도 했었다.
- 이러한 외교적인 상황이외에 1989년에 동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독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했고, 생산시설은 낙후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집들이 보수를 못했고, 겨울에는 갈탄을 떼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극심했다.
-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선거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98.85% 찬성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989년 5월부터 2~3개월 동안 동독주민들은 동독을 빠져나가서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 있는 서독대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할 때 오스트리아로 들어갔다.
-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동독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건국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동독정권은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할 때 거기에 반대해서 어용데모를 시키기도 했다.

○ 통일 당시 라이프치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 1989년 10월 9일 월요일 라이프치히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위가 있었다. 10월 9일에 시위를 동독정부에서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날 최초로 7만 명의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비폭력적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I
II
III
IV
V

- 다행히 라이프치히에서는 어떤 폭력도 없었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이 지나자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
- 통일 이후 라이프치히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통일과 함께 특히 구동독지역 사람들의 생활은 몰라보게 나아졌다. 1989년 당시만 해도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했다. 그 전에 동독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는 가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예전에는 레닌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 물론 지금도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서독 놈들은 잘난 척하고, 동독 놈들은 불평만 이야기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2년에 100년 만에 한번 오는 홍수가 왔는데, 사람들이 보여줬던 단결된 모습과, 2006년 독일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바. 포크트란트 군 워크숍

### □ 개요

- 일시: 6월 30일, 수요일
- 주제: 죽음의 선에서 생명의 띠로 - 독일 녹색벨트: 통일이 가져다 준 선물
- 독일 측 참석자: 아네리제 링 (포크트란트 부군수), 토마스 핀다이(포크트란트 군 건축담당관)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그림 II-24] 포크트란트



I

II

III

IV

V



○ 포크트란트의 의미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시설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이 시설은 포크트란트에서 임대를 해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설로, 어린이들의 환경 공부를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다. 새벽 4시에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서 새소리를 듣기도 하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 포크트란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업, 휴양지, 악기 제조, 자동차 산업, 은광, 아연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오케스트라, 친절한 20만 명의 주민들이 있다.
- 포크트란트는 분단의 경계선이 접해 있던 지역이다. 동서독 분단 당시에는 죽음의 선, 무인의 땅,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불렸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넘어야 했다. 지금은 국경이 열려서 통행이 가능하지만, 40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 국경선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매우 많은 동식물이 생존하는 ‘그뤼네스 반트-녹색띠’라고 하는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 통일이 되고 난 후에 동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서독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동독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독 사람들이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 이곳 포크트란트는 서독 지역과 비교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포크트란트에 대학이 있다면 학업을 위해서, 또는 일자리가 많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 서독 및 유럽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동독의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었다. 서독과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때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독일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세제혜택)을 했고, 포크트란트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에게 카운티 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스트럭처)을 제공했다.
  
-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20여 년간 얼마나 변했나?
  - 주민의 경제생활이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대전제로 예전의 동독시절과 비교해서 삶의 질의 변화가 모두에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 예전의 동독은 길도 엉망이었고, 환경오염도 심했다. 그러나 동독시절이 모두 나빴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다.
  - 그러나 통일이 되고난 이후에는 모든 조건이 변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경제적으로 많은 편차가 생겼다.
  
- 토마스 핀다이(포크트란트 군 건축담당관) 씨는 2007년에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DMZ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와 DMZ의 차이점

I
II
III
IV
V

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의 DMZ는 240km인데, 그뤼네스 반트는 DMZ 보다 5배 이상의 긴 1400km(14,000ha)이나, 폭으로 보면, DMZ보다는 좁다. 그뤼네스 반트는 동서독 경계선에서 동독 쪽에 해당되는 구간이고 서독쪽 구간은 아니다. 동독 쪽에 군사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결국 동독지역만 그뤼네스 반트가 되었다.
- 1980년대 중반부터 그뤼네스 반트의 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환경운동가들이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희귀한 조류를 관찰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그뤼네스 반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 후에 서독의 호프시에서 약 400명 이상의 환경운동가들이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 그뤼네스 반트는 여러 연방주를 지나가게 되는데, 연방주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작센 주는 그뤼네스 반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 그뤼네스 반트 중 42km가 포크트란트에 속해 있고, 다른 주의 그뤼네스 반트와 비교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 독일의 녹색벨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그뤼네스 반트 안 민통선 안에 2km씩 간격을 두고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국경이 있었던 곳으로 작센주에서 바이에른주를 통과하는 경계에 있다.

[그림 II-25] 작센주에 있는  
그뤼네스 반트



- 까치교는 2차 대전 종전이후에 다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재건의 이유가 없어져서 방치를 하다가 통일 이후에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 93번 고속도로는 통일 이후에 새로 건설한 고속도로다. 서독의 바이에른, 호프까지 서독지역이었는데, 이곳과 동독지역을 연결하고, 그뤼네스 반트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다. 환경생태적인 차원에서 이 도로는 그뤼네스 반트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요인이다.
- 이 그뤼네스 반트는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북쪽의 러시아 핀란드 사이의 그뤼네스 반트에서 아드리아해의 그뤼네스 반트까지, 유럽의 그뤼네스 반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 민간인 통제선은 동서독 국경선에서 동독 쪽으로 5km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 그뤼네스 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은 너비가 좁다. 가장 좁은 지역은 50~60m인 곳도 있고, 넓은 지역은 1km 정도인 곳도 있다.
- 국경선으로부터 500m~1km 되는 구간에 철조망을 설치했는

I

II

III

IV

V

데, 이 안쪽에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예외적으로 밭이 있는 경우(옥수수, 곡물 등)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밭이 넓어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림 II-26] 콜로네백



\* 아래에 울퉁불퉁 길이 순찰로인 콜로네백이다.

- ‘콜로네백’은 무엇이고 주변의 특징은 무엇인가?
  - ‘콜로네백’은 경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으로 군사시설이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동독 국경수비대가 순찰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1,393km에 이르는 길을 순찰로로 만들어 놓았다. 이 순찰로는(콜로네백) 여전히 남아 있다.
  - 또한 철조망 근처에는 발자국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흙으로 덮어놓았는데, 이탈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트라비 순찰차를 이용해서 6m 폭 안에 발자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철조망 앞에는 구덩이를 1m 정도의 깊이로 파놓았는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차량(바퀴가 달린 원통기둥)을 가지고 돌진해

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놓은 것이다.

- 참호 밖은 30m의 지뢰매설지역이다. 지뢰는 모든 곳에 다 매설되어 있지는 않았고, 1,393km에 130만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1983년에 서독에 바이에른 주의 총리였던 후란치 요셉 스트라우스가 동독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독에게 지뢰와 철책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 발사 장치를 제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동독이 모두 수락하고 1985년에 모두 제거했다.
- 한국전쟁 때 공중에서 지뢰를 투하했기 때문에 한국의 DMZ는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는지를 모르나, 독일은 동독 국경수비대가 지도를 가지고 심은 지뢰여서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쉬웠다.

○ ‘콜로네벡’ 주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 담장 앞에 있었던 풀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제거했다. 서독 쪽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국경선 앞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었다. 경작을 하는 농부의 경우는 바로 앞까지 밭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서독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그뤼네스 반트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자연보호 구역으로 정해지면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보호구역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냥 방치를 하면 마음대



로 수풀, 관목들이 자라서 동식물 다양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농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초지의 경우는 일관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용이 되고 있다. 양을 이용해서 초지의 풀을 뜯게 해서 잡풀을 제거한다. 작센주에서는 700마리 정도의 양을 초지에 풀어놓아서 환경 친화적으로 풀을 제거하고 있다. 양이 먹지 않는 풀, 관목의 경우는 기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고, 이런 작업은 건조하고 제거하기 쉬운 겨울에 진행되고 있다.



- 현재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그림 II-27]에 동그라미에 커다란 구조물이 있다. 저곳은 바이에른 주인데, 풍력발전을 위해서 높이 200m 정도의 풍차를 세웠다. 거리상으로 그뤼네스 반트와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문제는 행정상으로 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간섭하거나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뤼네스 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접경지역에 옛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소유권 반환이 안되었던 지역이 있는데 좋은 가격으로 자기 옛 땅을 살 수 있었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국유는 독일 연방 국유지가 되었다. 점차 각 주는 자연보호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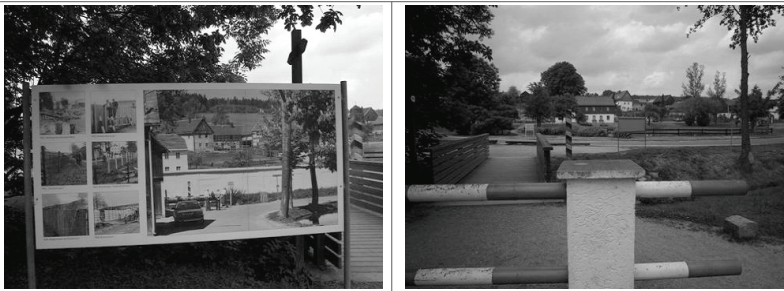
## 사. 내독간 국경박물관 “Little Berlin: 분단시절 동·서독간 분단 현장” 견학

### □ 개요

- 일시: 6월 29일, 수요일
- 주제: 내독간 국경박물관 “Little Berlin: 분단시절 동·서독 간 분단현장” 견학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그림 II-28] Little Berlin



I

II

III

IV

V





- 내독간 국경박물관 주변 지역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가?
  - [그림 II-28]에서 다리 옆에 개천(동서독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앞쪽에도 마을이 있고, 뒤쪽에도 마을이 있었다. 바이에른과 튀링 지역은 19세기 초반의 나폴레옹 시대에도 경계선이었다. 2차 대전 끝나고 바리케이트가 있던 지점에 하얀 담이 있었고, 동서독의 경계선이 되었다.
  - 1961년 8월 13일에 베를린 장벽이 생기고, 1949년 10월에 동독이 생기면서부터 동서독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1949년부터 1961년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동서베를린을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었다. 동베를린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인원이 12년 동안 300만 명에 이르렀다.
  - 베를린에는 1961년 8월 13일에 장벽이 생겼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훨씬 더 이전에 철조망 구조물을 설치되었다. 1952년에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장벽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 하게 되었다. 동독과 소련에서 예고없이 막아버렸다고 한다.
  - 통일이 된 후에도 저 바리케이트 부근이 경계가 되어 한곳은

바이에른 주, 반대편은 튀링엔주가 되어, 소속이 달라졌다. 40여 가구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그림 II-29] 동독 측 국경지대



\* 개집이다. 사나운 개가 왔다 갔다하면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했다.

\* 철조망 앞에 흙을 깔아놓아 발자국 표시가 나도록 했다.



\* 그때 당시 실제 장벽으로 높이가 2m 70cm~3m 정도였다.

\* 감시병커

I  
II  
III  
IV  
V



○ 당시의 (리틀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 감시탑과 하얀 장벽은 실물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그때를 재현해 놓은 것이다. 민통선에 이런 시설들을 갖춘 초소를 만들어 놓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했다.
- 5km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 출입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1km 전망쯤에 다시 철조망을 세우고, 약한 전류를 흘려서 강하게 건드리면 감지가 되도록 했다. [그림 II-29]에서 철조망 앞에 높은 사람 발자국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다가 철책, 경계선에서 죽은 사람이 40년 동안 1,000명 정도다. 정상적으로 철책을 뚫고 탈출해서 나가는 거의 불가능 하다. 신발 앞에 갈고리를 달아서 철조망을 넘어오기도 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넘어가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서독의 형이 수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동독의 가족을 구출하기도 했다.
- 철조망에 자동 발사 장치를 걸었는데, 위, 아래에 이중으로 걸어서 사람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쇠구슬이 나와서 맞으면 죽는다. 지뢰와 자동 발사 장치는 1983년에 차관을 제공하면

서 제거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였다. 그래서 지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4년 전 동독에서 스스로 철거했다.

## 아. 한스-자이텔 재단 워크숍

### □ 개요

- 일시: 7월 1일, 목요일
- 주제: 독일통일 및 통일 이후 과정에서의 독일정치 재단의 역할: 한스 자이텔 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독일 측 참석자: 베른하르트 슈탕글 교수, 베른하르트 켈리거 박사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독일의 정당(CSU)과 한스-자이텔 재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한스-자이텔 재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한스-자이텔 재단은 이념적으로 기독교 사회연합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치 이념적으로만 관계가 있고 독립된 기관이다.

[그림 II-30] 한스-자이텔 재단



- 안보여행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기원과 과정은 어떠한가?

- 서독의 사람들과 동독에서 안보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기본적으로 통일과,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나 쉽지 않았다.
  - 주로 교사,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일주일 정도 동독에서 지내면서 동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가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학습을 진행한다.
  - 이러한 작업은 오버프랑켄, 튀링겐, 작센지역에 반츠 연수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행을 한다. 반츠 연수원은 동독과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있었다. 당시의 동독으로 여행을 하려면 국가가 운영하는 자트위스트, ARD 2개의 국영여행사와 접촉을 해야 했다. 당시에 동독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들어갈 때는 일정액수를 반드시 환전해야 했다.
  - 서독 관광객들이 동독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었고, 감시원과 함께 항상 동행했어야 했다. 항상 공식여행 일정이 있었고, 사적인 만남은 허용하지 않았다.
  - 원래 동독방문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이슈를 주제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동독 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집단농장,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정도로만 채워져 있고, 자유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다.
- 순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 내용은 어떠했는가?
- 1990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튀링겐에 있는 ‘줄’이라는 곳에서 교육했다. 튀링겐 ‘줄’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굉장

히 발달한 곳이다. 지자체 테마, 언론과 홍보, 사회시장 경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교육의 참가인원이 300여명 정도였다.

- 기본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9년 10월 3일까지 동독 전역을 돌면서 교육을 했다.
- 중요한 것은 1990년 3월에 동독에서 최고인민회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고 새로운 정당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 순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동독지역에서 순회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똑같이 독일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개념의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예를 들어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동독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좌파들의 ‘Social Market Economy’는 통일된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동독 사람들은 ‘Capitalism’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 1990년 이후의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 의미까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이 나왔고, 이후에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통일을 염두에 둔 구호로 바뀌게 되었다.

I

II

III

IV

V

- 순회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소는 몇 개 지역에 몇 개가 있었나?
  - 1990년에 동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2개의 사무소를 신설했다.
  - 지금 베를린 사무소는 존재하지만, 라이프치히 사무소는 없어졌다.
  - 통일 전 1988년부터 시작했던 동독지역의 안보관광이나 세미나는 통일을 얼마나 촉진했다고 보는가?
  - 통일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의 그 작은 기회의 창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그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통일의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 한스-자이텔 재단은 CSU와 수 십년간 추구해왔던 목표인 ‘통일’을 잊지 않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동독의 여행프로그램에 같이 협조해서 일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다.
  
- 라이프치히 사무소는 왜 문을 닫았나?
  - 비용 때문에 라이프치히 사무소까지 둘 수 없었다. 베를린 사무소에서 업무를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다.
  - 독일에 존재하는 정치재단이 6개가 있는데, 우리가 동독에서 진행했던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는 6개 재단 중에서 한스-자이텔 재단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 가장 높다.
  - 아테나워재단은 CDU(콜, 안드레아 현 총리가 소속된 당)에



지원하는 재단으로 59명이 일을 했고, 우리는 단지 2명이 일을 했다. 동독 사람들은 아데나워 재단은 몰라도 한스-자이텔 재단은 알고 있다.

○ 베른하르트 슈탕글 교수(Prof. Dr. Bernhard Stangl, 법, 정치전문, 내독관계연구 다수, 통일과정의 사례를 직접 경험)님의 의견은 어떠한가?

- 동서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의 개념은 달랐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벽이 무너질 즈음에 4주간 그룹의 절반은 서독 교수, 나머지 절반은 동독 교수와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 안통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 냉전시절에 동독에서 100여명의 변호사, 검사 앞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가와 사회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동독 행정 분야 중에서 지자체 분야와 관련되어 도움을 주고 있을 때, 동독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곤 하는데, 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행이 안되는 사례를 종종 경험했다. 서독의 법치주의와 법규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 슈탕글 교수님은 한스-자이텔 재단이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한스-자이텔 재단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전함으로써 독일의 동쪽지역의 일부는 소련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I

II

III

IV

V



폴란드로 귀속되었다. 그 이후 4대 전승국에 의해서 동서독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4대 전승국은 독일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 서방 3대 전승국은 서독에 대해서 동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독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동독과 소련 간에도 같은 입장이었다.
- 1952년에는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입장이 팽배하였으나, 서독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 CDU, CSU 등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SPD와 사회민주당은 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동독이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경향이 강했다.
- 빌리브란트가 연방수상이었던 1972년 당시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사민당 정권의 빌리브란트 정권이 추구했던 방식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두 개의 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 기사당 총재는 동서독 간의 조약을 맺고, 통일을 부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렇게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었다. 결국 연방헌법재판소는 첫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동독과의 국경선은 주와 주간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독일 국민은 서독의 국민이거나, 동독의 국민이거나 하나의 국가의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 연방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다면 1989년 동독주민들이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 대사관에 진입을 했을 때, 독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재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다.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떠나서 서독의 땅을 밟았을 때 서독의 비자를 얻을 수 있었다.
  - 나중에 콜 총리는 동독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가의 형태로 국제법상의 국가보다는 낮은 것으로 인정은 해주었다.
  -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의전을 해주었지만, 콜 수상은 “독일 문제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 서독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동서독이 공존할 수 있다.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동독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협상 2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 슈탕글 교수님은 아데나워 수상 이후의 서독의 통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아데나워 수상은 집권을 하자마자 통일이 근시일 내에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방과의 관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 이런 큰 틀 안에서 동독과의 관계를 생각한 반면 사민당의 대표는 서방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동서독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생각해서 서방과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생각했다.
  - 유럽연합이 없었다면 독일의 통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바탕은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이 있었기에 가능

I
II
III
IV
V

했다. 또한 인권문제를 존중하는 내용에 서명했기 때문에 동독 내에서 인권과 관련되어 동독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태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 유럽의 틀 안에서 독일은 인접국들로부터 통일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 1989~1990년에 통일독일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독재청산재단의 이사장이자 국방장관이었던 라이나 에펠만은 “유럽의 통합없이는 서방과의 단단한 관계가 없었을 것이고, 동서독의 통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저항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슈탕글 교수님은 통일 과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 동독 사람들의 시위는 1989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불과 100~200명으로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여행의 자유화였다. 이러한 아주 조그마한 규모로 시작되었던 것이 동독정권의 선거조작 사건을 겪으면서 라이프치히에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동베를린에 100만 명이 모이는 시위로 이어졌다.
- 1989년 11월 9일에 동독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샤보스키가 “어떤 조건도 없이 해외여행이 당장 허가된다”는 실언으로 그날 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 동독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소가 개신교 교회였다. 상대적으로 천주교 성당은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았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온 구호가 “우리는 국민이다”인데, 이 구호가 “우리는 한민족이다”로 바뀌

게 되었다. 동독사람들의 시위대는 동독정권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동독 정권은 개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법을 개정하고, 변화를 시켜서 서독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처리했다. 이후 추가 절차 없이 바로 EU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런 아이디어를 CSU에서 제공했다고 한다.

○ 통일 이후에 행정재건 작업은 어떠한가? 이 과정에서 한스-자이텔 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했나?

- 동서독이 만나 독일 연방 공화국이 되었고, 지자체 단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통일 독일 이후에 새로운 행정재건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동독의 행정 재건을 하고, 지자체를 건설하는 작업에 한스-자이텔 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주중, 주말에 구 접경지역의 반츠 수도원에서 계속 세미나를 열었고, 지역 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다. 이런 내용의 강연, 세미나들은 베를린 사무소, 라이프치히 사무소가 주축이 되어서 강좌를 개설했다. 이와 더불어 한스-자이텔 재단은 지자체 행정의 전문가들을 동독지역에 급파해서 조언이나 지원을 했다. 이 작업들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했다. 한스-자이텔 재단에서는 공무원과 학자를 함께 파견 했다.
- 물론 아데나워재단도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그들은 교수만 보냈다. 교수들은 이론은 잘 알지만 실무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
- 바이에른 주의 군수, 시장이 현지에서 실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 군을 방문해서 직접 OJT를 했다. 이와 동시에

I
II
III
IV
V

행정업무에 기본이 되는 이론과 원칙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다른 재단들은 한스-자이델 재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규모가 컸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한스-자이델 재단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민주주의 법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제문제였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고르바초프가 “늦게오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 경제시스템의 전환은 동독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고 뼈아픈 문제였다. 헬무트 콜 총리가 1993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번영하는 동독을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하니까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인데, 그때 당시에 동독의 경제상황으로 2~3년 안에 성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동독의 경제 상태는 파탄된 상황이었다.
- 통일이 된 이후의 20년이 지난 입장에서 보면 헬무트 콜 총리의 비전은 결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동독사람들에게 경제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정치 세미나는 오히려 쉬웠다.

○ 통일이후의 정치통합이 제일 잘되고, 사회통합은 더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없었나?

- 바이에른에 있는 반츠 연수원에서 튀링엔 주의 교사들을 초청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비용문제 때문에 예전

의 신연방주(구동독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은 못한다.

- 다른 정치재단들과 비교했을 때 노력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다른 재단과 비교해서 호응과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비용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현지사람들이 교육을 좀 더 해주기를 원했다. 원칙적으로는 한스-자이텔 재단은 바이에른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재단이다.
- 동서독 통일 20년이 지났는데, 현재 독일의 정치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있는 앙겔라 메하켈의 독일 연방 총리가 동독 출신이다. 이와 관련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 이후에 태어난 20세 미만의 청년들은 더 이상 어떤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 안보교육의 재정을 어디서 받아서 했는지, 좌파라는 비판은 안 들었는지?

- 개인적으로 1인당 300유로 정도를 참여비로 내고 나머지는 재단 활동비로 부담했다.
- 동독을 방문하면 공식, 비공식 일정이 있는데, 주로 비공식 일정에 중점을 두고, 개인이나 교외에서 사람을 만나서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고, 접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좌파라는 소리를 들을 여지가 없었다.

○ 헬싱키조약에 동독이 참여한 배경과 동독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서독 정부가 할슈타인 정책을 썼던 결과, 20년 동안 동독이 독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주의 국가하고만 수교를 맺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과는 수교를 맺지 못하였다.
- 빌리브란트가 수상이 되고 동방정책을 통해, 즉 접근을 통한 변화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에 1975년에 헬싱키 회의가 열리고 독일 대표로 호네커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 때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헬무트 슈미트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 모든 참가국들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헬싱키조약인데, 동독이 국제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서명할 수밖에 없다. 소련이나 동독 모두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동독 시민들이 서방국가로의 여행자유화를 외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바로 헬싱키조약이다.

### Ⅲ.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3





## 1. 개요

### □ 출장목적

- 2010년도 연구과제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사례를 연구
-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DMZ의 평화공원화,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독일 측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
- 구 동서독 접경지역으로서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조성된 샬제(Schaalsee)와 독일그린벨트의 평화적 이용 사례 및 국제하천인 라인강의 평화적 관리·이용 실태에 관하여 독일 전문가들과 토론

### □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출장기간: 2010년 9월 25일~10월 2일(7박 8일)
- 출장지: 독일(베를린, 샬제, 본, 코브렌쯔)

### □ 주요 일정 및 내용

- 9월 26일 일요일
  - 독일연방의원 Juergen Klimke(기민당)과 정책자문회의
  - 베를린 인근 구 동서독 접경지역 현장 시찰

I

II

III

IV

V

- 9월 27일 월요일
  - 살제 생물권보전사무소 워크숍 개최
- 9월 29일 수요일
  - 독일연방환경성 워크숍 개최
- 9월 30일 목요일
  -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 워크숍 개최

##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 가. 독일연방의원 Juergen Klimke(기민당)과 정책자문회의

#### 개요

- 일시: 9월 26일, 일요일

[그림 III-1] 위르겐 클림케 의원과 함께



\* 위르겐 클림케 의원과 독일연방의회인 제국의회 의 옥상이다.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한국의 통일과 관련하여 Klimke 연방의원이 10가지 문제를 언급하였다.
  - 첫째, 국민이 통일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통일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통일의 대상이 북한 전체인지 아니면 북한의 특별한 계층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 넷째, 경제적·사회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점진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다섯째, 독일은 통일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 통일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협상과정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
  - 여섯째,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은 20~3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한다.
    - 통독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독일은 동서독의 균형 있는 성장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 일곱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의 차이(gap)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 차이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활용이 중요하다.

I

II

III

IV

V

- 정치권은 통일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및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 여덟째, 북한의 정치세력들에게 통일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정치세력들의 신상에 영향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차별(과거청산)은 필요하지만 차별로 인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 아홉째, 연금문제, 보험문제, 학위인정문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통합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통합전략을 개발할 경우 한 개의 안(案)만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A, B, C 등 각 단계별로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 각 단계별 플랜은 비밀로 해야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비밀로 해서는 안 되고 공개해야 한다. 보험을 예로 들면 독일은 비밀로 하고 일부만 공개했다가 후에 사회문제화된 경험이 있다.
  - 열번째,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통일비용이 통일과정에서 문제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
- 합의통일을 하는 경우 북한정권을 압박하면서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하면서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가?
- 제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포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안정을 합의해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통일세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세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이 국민들에게 어떤 점에서 편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설명하고 통일세 문제는 그 다음에 제기했어야 했다.
  - 독일은 유럽통합과 함께 독일통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따른 내적통합비용과 유럽통합에 따른 외적통합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통합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는 등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림 III-2] 베를린 소재 연합국박물관



## 나. 실제 생물권보전사무소 워크숍

### □ 개요

- 일시: 9월 27일, 월요일
- 주제: 구 동서독접경지역의 평화공원화 현황과 시사점
- 독일 측 참석자: Rainer Mönke 부소장

I

II

III

IV

V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그림 III-3]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 ○ 샬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경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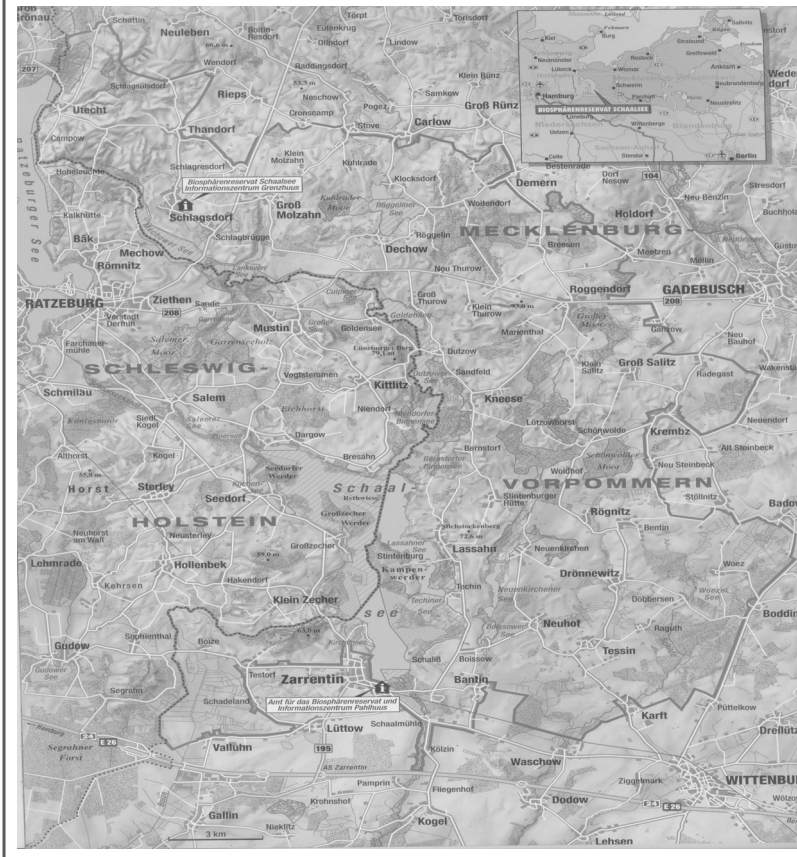
- 샬제의 동쪽지역으로 1990년 자연공원으로 지정했다.
- 1994년 주정부 지원으로 샬제 오른쪽 부분만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려 하였으나 연방정부는 동서 양쪽 모두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려고 하여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샬제 양측의 주정부(오른쪽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와 왼쪽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문제에 대한 협의를 개시했다(아래 그림 참조).
  - 그러나 구서독 측에 있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정치적인 이유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속하는 지역의 생



물권보전지역 신청을 반대했다.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반대한 이유는 이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면 구서독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I-4] 실제 생물권보전 신청지역





- 서쪽 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친 살제 생물권보전사무소는 동쪽 주의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 1999년 연방정부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하였고 연방정부는 2000년 1월 20일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 살제 생물권보전사무소가 동쪽 주 지자체의 협력을 받은 이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300km<sup>2</sup>이상 되어야 하는데 당시 자연공원의 면적은 192km<sup>2</sup>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 살제 자연공원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전 구동독 정부가 살제 인근에 5km의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생태환경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반면 통일 전 구서독 정부는 살제 부근에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 살제 생물권보전지역의 현황은 어떠한가?

- 전체면적은 309km<sup>2</sup>이다.
- 핵심지역과 전위지역, 개발지역의 3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 핵심지역은 전체 면적의 5.5%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사람의 입장이 불가하고 조망만 가능하다.
  - 개발지역은 전체 면적의 68.9%로 보호는 되지만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하다.
  - 전위지역은 전체 면적의 25.5%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중간지대이다.

[그림 III-5] 살제 생물권보전지역



○ 살제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는 어떠한가?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연 50만 명의 관광객이 살제를 방문하여 이 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통일 이전에는 버려진 땅으로 관광객이 없었다.
- 주 정부는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전위지역과 개발지역에 관광객 유치에 위한 시설을 많이 짓고 있다.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에 반대했던 구서독 측의 솔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현재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I
II
III
IV
V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발생한 재산권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

- 구서독 측의 주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우려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에 반대하였으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경제개발이 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점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 생물종의 보전
-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발전)
- 보전·개발(발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림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

-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후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 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어느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 독일의 경우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가 핵심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처했다.

-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에 앞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매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다. 독일연방환경성(Bundesamt für Naturschutz) 워크숍

### □ 개요

- 일시: 9월 29일 수요일
- 주제: 구 동서독접경지역의 녹색지대(그린벨트)화 현황과 시사점
- 독일 측 참석자: Dr. Uwe Riecken 국장, Dr. Axel Ssymank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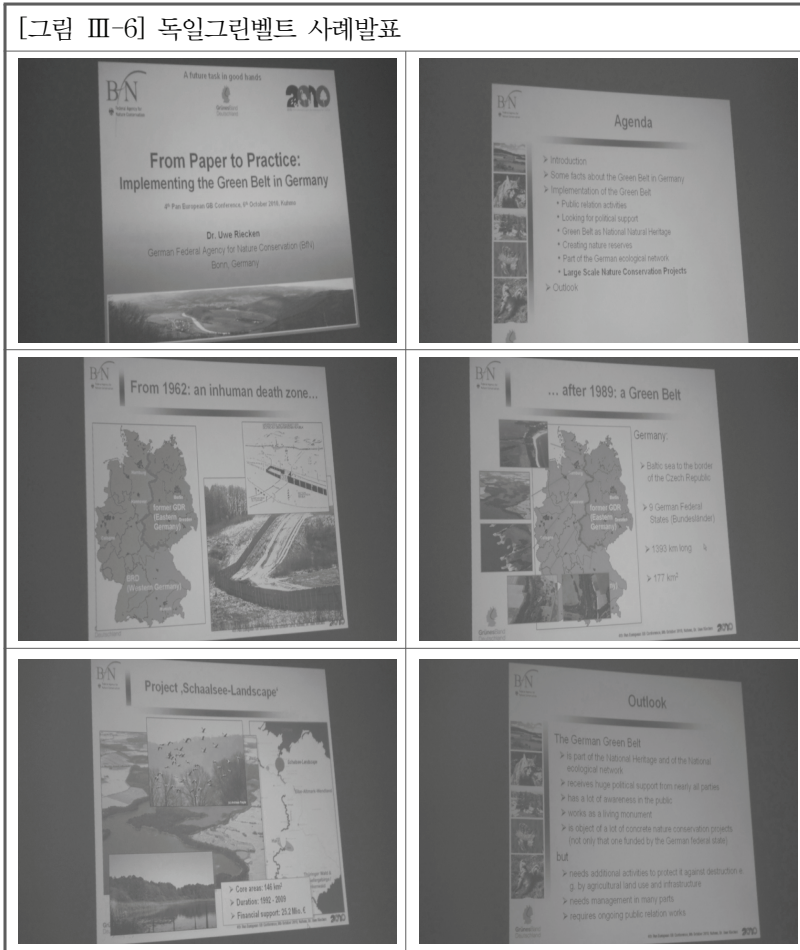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독일그린벨트의 연혁은 어떠한가?
  - 독일그린벨트의 길이는 1,393km이고 면적은 177km<sup>2</sup>에 달한다. 구 동서독의 국경을 따라 북쪽의 발트해로부터 남쪽 체코에까지 이른다.
  - 1962년 이후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inhuman death zone)으로 1989년 이후 그린벨트화 되었다.
  - 그린벨트의 사용 용도는 85.4%가 동식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준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10.9%는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 2.4%는 개발지역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그린벨트를 따라 자연보존 및 개발을 하기 위해 32개 구역을 관심 구역(focus area)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I  
II  
III  
IV  
V

21개 구역이 독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유럽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성은 이 구역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림 III-6] 독일그린벨트 사례발표



○ ‘그린벨트 경험하기’ 프로젝트의 내용은 무엇인가?

- 구 동서독의 국경이었던 그린벨트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분단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역사적인 분단의 장소를 경험하게 한다.
- 하이킹, 자전거타기, 구 동독국경수비대의 초소로 사용되었던 장소 탐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I-7] 독일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그린벨트)



I

II

III

IV

V

○ ‘국립자연유산’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 그린벨트 일대를 국립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 2000년 11,000헥타의 그린벨트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 2003년 독일재정장관이 이 지역을 독일 연방자연보전지역으로만 이용하도록 명령했다.
- 2003년 독일재정장관 명령 이후 개별 주 정부와 협상 개시했다.
- 2005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125,000헥타를 국립자연유산으로 지정하고 그린벨트를 국립자연유산에 포함시켰다.
- 2008년 튀링엔주와 첫 번째 협정을 개시했다.
- 2010년 9월 28일 주 정부들과의 모든 협정이 완료되었다.

○ ‘유럽그린벨트’의 설치 과정과 경과는 어떠한가?

- 과거 철의 장막 때에 러시아와 핀란드가 그린벨트를 만들어 양 정부가 협력하였고 남부에서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리스가 발칸그린벨트를 만들어 협력하였다.
- 2003년 7월 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기간 동안 독일 연방환경성은 구 철의 장막 전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결과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었다.
- 2004년 9월 그린벨트 인접국가 대표들과 NGO로 구성된 첫 실무회의가 세계보존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 IUCN)에 의해 조직되었다.
  - 독일 연방환경성이 후원했다.
- 그 결과 유럽그린벨트가 구 철의 장막을 따라 전개되게 되었고, 바렌츠해로부터 흑해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 유럽그린벨트 사무국은 세계보존연맹 유럽지역 사무소에 자

리잡고 있는데 관련 국가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교환하고 유럽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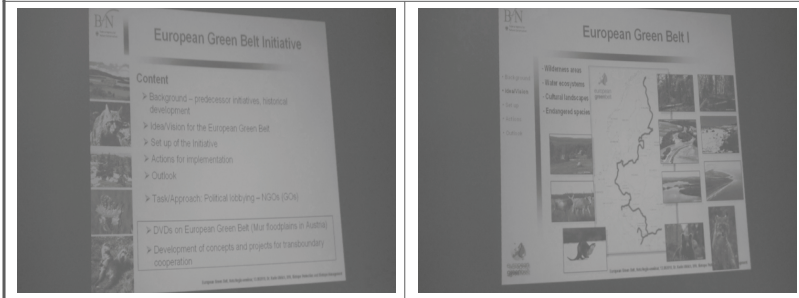
- ‘유럽그린벨트’를 위한 국제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국제회의와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 핀란드와 러시아, 중부 유럽, 남동부 유럽 등 3차원의 지역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존연맹 유럽사무소에 협의를 위한 사무국이 있다.

I
II
III
IV
V



- ‘독일그린벨트’와 ‘유럽그린벨트’ 사업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유럽그린벨트 사례는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유럽그린벨트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 독일그린벨트 사례는 현재 그리고 통일 이후 접경지역을 보존·관리하고 특히 통일 이후 분단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분단의 역사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9] 유럽그린벨트 사례발표



## 라.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Internationales Kommission zum Schutz des Rheins) 워크숍

### □ 개요

- 일시: 9월 30일, 목요일
- 주제: 국제하천 라인강의 평화적 관리·이용 현황과 시사점
- 독일 측 참석자: Ben van de Wetering 사무총장

## □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 ○ 라인강의 현황은 어떠한가?

- 라인강은 1,320km로서 유럽에서 3번째로 긴 강이며 강 유역에 9개국, 5,800만 명이 거주, 3,000만 명에게 식수공급을 하고 있다.

### ○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의 연혁은 어떠한가?

- 1950년 네덜란드의 제안으로 라인강의 국경을 이루는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이 라인강의 오염 및 복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포럼을 창설했다.
  - 1963년 라인강오염방지국제위원회협정(베른협약)으로 라인강 유역국들이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 1986년 10~30톤의 독성살충제가 라인강으로 유입되어 라인강의 모든 생물체를 죽게 한 산도스 사건이 발생했다.
  - 1987년 회원국 장관들이 라인강행동프로그램의 이행을 결정했다.
  - 1995년 회원국 장관들, 홍수발생시 행동계획(Action Plan on Floods)의 초안마련을 요구했다.
  - 1998년 홍수발생시 행동계획 통과, 신라인강협약을 채택했다.
  - 2000년 12월 EC의 물골격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발효했다.
  - 2003년 라인강보호협약을 발효했다.
  - 2007년 2007 라인강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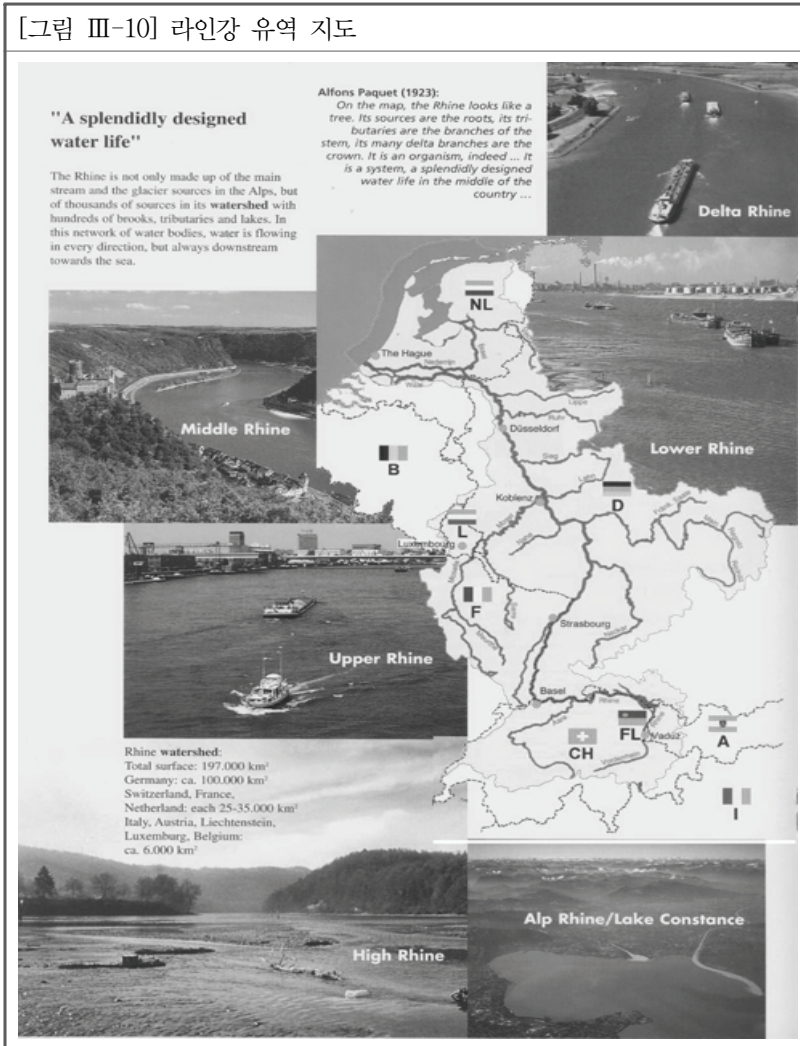
III

IV

V

- 2007년 11월 EC의 홍수지침을 발효했다.
-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 회원국은 현재 독일, 유럽공동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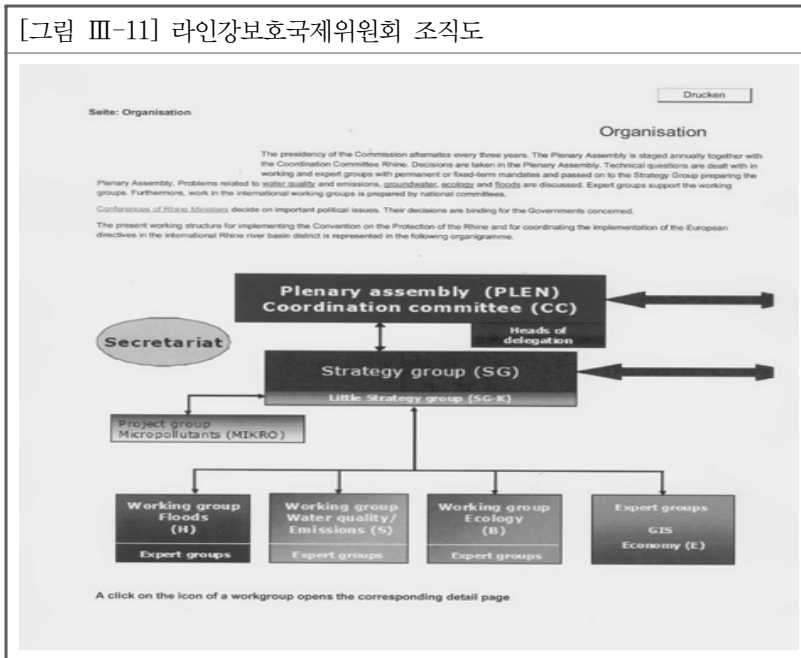
[그림 III-10] 라인강 유역 지도



○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회원국 총회(Plenary Assembly)와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전략그룹(Stratgy Group), 사무국으로 구성되어있다.
- 전략그룹 산하에 분야별로 4개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결정은 매년 개최되는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한다.
- 중요한 정치적 사안은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 사무국의 예산은 연 1,000,000유로이다. 이 가운데 80%가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에 쓰이며, 20%는 발간물, 컴퓨터, 통신비용 등으로 지출된다.

[그림 III-11]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 조직도



I  
II  
III  
IV  
V

- 라인강 보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라인강 보호의 법적 근거는 크게 라인강보호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hine)과 유럽물골격지침(European Water Framework Directive), 홍수지침(Floods directive) 등이 있다.
  - 라인강보호협약은 라인강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토대로 1999년 4월 12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정부대표와 EC에 의해 조인했다.
  - 유럽물골격지침은 유럽지역 강들의 포괄적인 수질보호 이행을 목적으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00년 채택했다.
  - 홍수지침은 홍수가 인간의 보건, 환경, 문화유산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1월 26일 발효되었다.
  
- 라인강의 홍수방지 및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홍수발생시 행동계획(Action Plan on Floods)이 있다. 1993년과 1995년 라인강에 큰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는 로테르담에서 제12차 장관회의를 개최(1998.1.22)하여 라인강 홍수 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2020년까지 라인강 홍수 시 인명 및 재산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라인 2020(Rhine 2020)이 있다.
    - 라인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 결과 라인강의 생명력이 상당히 복원되었다. 그러나 라인강보호국제위원

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라인강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라인 2020’을 채택했다.

- 라인 2020은 2020년까지 연어와 기타 회류성 어류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에 이를 정도의 라인강 생태시스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의 활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라인강 사례는 라인강 유역의 여러 국가들이 법적인 토대 하에 공동으로 기구를 구성하여 라인강의 홍수, 생태·환경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남북한 공유하천의 경우에도 남북한이 명시적인 합의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공유하천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남북공유하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I-12] 라인강과 라인강관리위원회



I  
II  
III  
IV  
V



## IV.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4





## 1. 한반도 접경 생물권보호지역 설립방안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 가. 서론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한국과 독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독일 연구자들은 통일 이후 독일의 발전을 되돌아보기 위해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에 대한 비교연구가 때로는 지나친 일반화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독일에 관한 비교연구가 분단접경지역에서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한국의 분단접경지역은 모두 청정 자연이 보존되고 있으며, 또한 보존의 부작용으로 인해 분단접경지역은 경제발전이 정체되었다. 이것이 한반도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독일 싱크탱크인 Hanns-Seidel-Foundation이 2005년에 고성군과 협력을 시작하고, 그 후 1년 뒤인 2006년부터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강원 리서치 연구소와 손을 잡고 한국 분단 국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존 계획에 협력하기 시작한 이유이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은 독일 현장방문, 독일 분단 국경 지역에 공무원 및 연구원 파견, 생태 관광의 컨셉 이행, 서독 국경 지역이었던 Upper Franconia와 강원도의 지식 제휴, 국경 지역 내 대규모 보호 구역 추진 등이었다. 독일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된 국경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본 논문은 한국 분단 국경 지역, 즉 DMZ 내 대규모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생물권 보호

I

II

III

IV

V

지역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까지 남한에는 두 개의 등록된 생물권 보호지역이 있다. 생물권 보호지역 도입은 기존 보호방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DMZ 지역과 그 부근의 CCZ 지역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6가지 보호 지역 형태, 즉 생태계 보존 지역, 국립공원, 자연숲, 야생동물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습지 보호지역 거의 모든 방법은 DMZ 안에 지정될 것이다. DMZ 생물권 보호구역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방법이다. 철원평야와 동해 인근 산악지역은 철새와 산양을 위한 특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철원 내 DMZ의 특정 구역은 습지, 자연 우림 등을 보호하는 특수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독일의 “그린 벨트” 설정 경험을 검토하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 분단 국경 지역을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생물권 보호구역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DMZ BR 계획에 대한 원리를 마련하고 DMZ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사용에 대해 논의하며, 이 방법이 DMZ B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DMZ BR (DMZ TBR) 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 섹션에서는 DMZ 대규모 보호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단-중기 조치(방법)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참고문헌이 짧게 나열된 다음, 첨부 문서에서는 생물권 보호구역에 대한 공식 UNESCO FAQ에 따라 생물권 보호구역의 핵심 특징들을 요약한다.

본 논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통일연구원과 이 프로그램을 책임진 손기웅 박사님, HSS사무실의 Kathleen Kleittke씨에게 깊이 감사한다.

## 나. 독일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독일 분단 국경은 북쪽 발트해에서 시작해 남쪽 바바리안-색스-보헤미안(예: 체코) 국경 지역에 걸쳐 1,393km에 이르렀다. 일부 지정된 통행 지점(주로 서 베를린으로 향하는 통로)이 있기는 했지만 1945년에서 1989년까지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려 했던 동독인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동독 국경 경찰들의 총을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경 지구는 “죽음의 지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동-서에 있는 죽음의 지구와 부근 지역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생물종들의 보고이기도 했다. 도로는 보통 국경 앞에서 단절되었으며, 동쪽 구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농업활동이 허락되었다. 산업화와 농업 용지의 확대는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였지만, 국경 지역은 희귀 동식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습지, 고립된 산림, 초원은 여러 양서류와 파충류 그리고 먹황새나 수달과 같은 희귀 동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였으며, 곳곳에서 철새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지역의 환경적 상황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환경보호 의식이 부재했고 질 낮은 갈탄의 사용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나친 중공업정책은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오염을 발생시켰다. 1980년대 서독에서는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운동과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환경부가 신설되고 주요 환경관련 법률들이 시행되었다. 서독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동독은 환경오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재앙과도 같은 환경 문제들도 쉽게 무시했다. 1989년 평화혁명과 1990년 통일 이후 환경 문제들은 오염(dirty) 산업의 대규모 공동화와 현대적 환경 기술 투자를 통해 해결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경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I  
II  
III  
IV  
V

1979년부터 독일에서 가장 큰 환경협회 중 하나인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는 희귀종 연구를 위해 서쪽 국경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 후인 1989년 12월 9일, 동서독의 환경운동가들이 처음으로 Hof (바바리아)에서 모여 대규모 회의를 열고, 독일 분단 국경지역 보호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40년 동안 교류가 없던 국경지역을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로 보존하자는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린벨트의 성공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린벨트가 한국에 제시해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한번 뒤돌아 봐야 할 때이다.

통일 이후 독일에서 경제변화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호구역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가,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특히 독일연방자연보호국(Bundesamt für Naturschutz)은 국경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였다. 국경 지구는 1,393km 길이지만 폭은 100~500m에 불과했다.

그린벨트의 177km<sup>2</sup> 중 절반 이상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중요한 지역이며, 16%는 EU 분류에 따른 최고 우선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독일을 가로질러 통과하기 때문에 알프스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서식지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근 지역, 특히 서쪽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분단의 기간 동안 군사적 용도로 고립되지는 않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사실상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았던 지역이다. 독일에서는 환경 보호가 지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주 정부, 카운티 및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했다. 더욱이 재산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했다.

[그림 IV-1] 독일 그린벨트



출처: Wikimedia Commons/Lencer,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b/Karte\\_Deutschland\\_Gr%C3%BCnes\\_Band.png](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b/Karte_Deutschland_Gr%C3%BCnes_Band.png)> (검색일: 2009.11.29)

1950년대 동독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독일연방에 속하게 되었다. 동독은 국경지역의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었고, 국경 지역 내 주택과 농지를 불태웠다. 오랜 논의 끝에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산(토지)을 환경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었다. 작센 주

- I
- II
- III
- IV
- V

(Saxony)의 예를 들어보자. 작센은 40km 길이의 가장 적은 그린벨트를 공유하고 있으나 이 지역을 모두 환경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린벨트 부근 지역들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작센주 및 튀링겐 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바리아는 국경을 따라 27개 지역을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31개 지역을 자연보호 구역보다 보호 강도가 낮은 경관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구역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Upper Franconia에 있는 Steinachtal의 보호 구역에 서만도 132ha의 토지가 추가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4,000명의 농부들이 “계약에 따른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5,000ha 토지에서 광범위하게 농작물을 생산하였으며, 자본조정 방법으로 보상받았다. 주와 카운티의 협력은 자연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수자원 보호, 경제 발전, 인프라, 정보 시스템으로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분단 40년이 흐른 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침내 국경을 넘어 화합과 통일을 달성하는데 그린벨트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전 “Kolonnenweg”(독일 분단 국경의 동쪽에 이르는 군용 차량 도로) 길을 따라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방안들이 국경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 관광으로 등장하였다.

(바바리안-튀링겐 국경에 있는 Mittwitz 와 같은) 생태 교육과 역사(마을을 가로지르는 벽 때문에 “리틀 베를린”으로 알려져 있는 분단 마을 Mödlareuth 에 있는 독일-독일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들도 국경지역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자연 보호와 경제 개발 사이의 갈등이 이미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지의 새로운 이용에 대한 큰 논쟁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바바리안과 튀링겐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가 그린벨트의 13배를 가로지르는 규모로 기획되었으나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항

의가 있자 그 계획은 변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전 독일 분단 국경의 15%가 새로운 교통 방식이나 산업 혹은 농업을 위해 상당히 변화했다. 이제 남아있는 지역, 특히 주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그린벨트의 성공은 독일의 분단이 위장하고 있는 축복이며, 종들의 보존은 사실 국가적 업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런 견해는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 내 동-서를 분단시키고 있는 철의 장막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전 철의 장막 8,500km의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국경 지역의 환경보호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 지역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순수하게 환경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독일의 바바리안과 보헤미아, 뉴체코 사이에 있는 옛 문화 지역들을 함께 묶어 재통합하고 냉전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의 그린벨트는 유럽의 롤 모델이 되었다.

대형 자연공원과 자연보호지들은 바바리안-보헤미안 국경(Bayerischer Wald/Sumava), 오스트리아-체코 국경(Thayatal-Podyil),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Neusiedler See-Seewinkel/Fertö Hanság), 그리고 다뉴브 습지, Thaya, Drau, Mur 강을 따라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러시아 국경의 북쪽,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의 남쪽을 따라서도 생겨났다. 이 지역들은 철새를 비롯해 유러피언 늑대, 유라시안 시라소니, 갈색곰처럼 몸집이 큰 포유류에게 매우 귀중한 서식지였다. 이전 철의 장막이 평화로운 협력과 환경보호의 새로운 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1989년 이후 희망찬 변화의 조짐이다.

국경 지역에 대한 통합된 종합 비전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중 하나가 자연공원이나 생태권 보호지역과 같은 대형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들은 다양한 생물종들을 보호하

I
II
III
IV
V



는데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있는 생태 보호지역 Schaalsee는 유럽의 두루미들이 쉬고 번식하는 곳으로 생태관광 프로젝트와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의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생태권 보호지역에 환경 교육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황야지대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두루미 보호를 위해 기증하는 ‘두루미 공유’라는 혁신적인 신규 마케팅 방법도 만들어 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환경 개발의 주주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경지역이 언제 어떻게 개방 혹은 변형될 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남쪽 부분의 개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일단 개방이 되면, 밀려드는 환경 계획들로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또한 국가 계획과 국제 협력에 대한 기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춘천에 있는 강원대와 Upper Franconia지역에 있는 University of Bayreuth는 현재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양 경계 지역의 수질에 대해 조사하는 일명 “Terreco”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이 모두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형 보호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20년이 지나자 “죽음의 지구”는 생명선이 되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 **다. 국경 지역에 DMZ 생물권 보호지역(DMZ BR) 지정 원칙 및 3구역으로 나뉜 DMZ BR을 경쟁력 있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안**

독일 그린벨트의 경영은 대형 보호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9년 이후, 서독 정부는 생물의 다양성과 국가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대형 보호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왔다. 이는 현재 1,400만 유로에 해당하는 연간 예산과 누적 경비 3억 7천만 유로 이상이 투자된 프로그램이다. 대형 보호지역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보호지역에 비해 크기 면에서 월등히 커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 법적 전제조건 측면에 있어서도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2001년에 소위 “개발과 모델” 프로젝트(Entwicklungs und Erprobungsvorhaben or 약식으로 E + E project)는, 연방자연 보호청이 그린벨트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주요 지역들로 이전시키기 위해 승인했다. 국경선 1400km 전부가 동일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E + E project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으며, 이는 한국의 보호지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대형 지역을 구역화(지도화) 하는 노력이었다. 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업이었다. 독일 적색정보 리스트 멸종 레벨 1~3에 따라 서식지 형태를 정해야 했다. 서식지 형태를 나누기 위해 작은 규모의 구역(길이 100m 정도)들이 선별되었다. 이 구역들을 전 지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소생활권, 도로 등을 갖춘 “부족 지역,”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지역, 멸종 위기 중간 단계 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두 번째 평가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FFH 서식지(유럽 자연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장 높은 우선순위 지역) 우선순위 형태에 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들을 대규모 집중 지역(가치가 높은 서식지가 있는)과 개발 지역(서식지 부족)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주와 연방 차원의 프로젝트가 각각의 지역에 집중되었다.

I
II
III
IV
V

물론, 한국이 독일 모델과 비슷한 그린벨트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경의 일부분만이 개방되었으며, 다른 부분도 변형이 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환경적 목표와 개발 목표를 납득시켜 동의를 이끌어내고, 대화를 추진하는 매카니즘도 독일에 비해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개발의 물질적 측면들이 독일에 비해 훨씬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방이 되면 DMZ를 경제적으로만 활용하려는 강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DMZ의 풍부한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중장기적 공간 계획과 최소 대형 보호지역의 준비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험이 함의하는 것은 국경 지역을 경쟁력 있게 이용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대체 이용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적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과 가치가 덜한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국경 지역을 따라 생물권 보호지역을 만들기 위한 현 제안은 이런 차원에서 종종 너무 급진적(혹은 너무 미미)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많은 예외들이 있으면 국경 지역을 서식지로서의 응집력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차선의 해결책(예를 들어 서식지들을 연결하기 위한 생태 다리 기획을 통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이 경제 성장의 급속한 기간 동안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4년 생물 다양성 회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생물 다양성 이슈를 인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환경 정책 원칙 중 하나인 “뉴 밀레니엄을 향한 국가 환경 비전”에 국제 환경 회의들에 대한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제정 단계에서 4대강 복원 문제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핵심 성장 정책에 편입시키면서 환경 문제를 선두에 놓았다.

이제 DMZ 생물권 보호구역 (DMZ BR)지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BR이 DMZ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국경 지역의 다른 지역, 특히 민간통제구역(CCZ)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는 생태적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다. (다시 말해) 서식지는 종종 사람이 정한 국경에서 끝나지 않으며 가끔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사용측면에 있어서도 CCZ는 경제 활동의 제한 측면에 있어 DMZ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여러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다른 하나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예를 들어, 철원 평야에 있는 만주 재두루미의 경우를 들어보자. 재두루미는 철원에서 겨울을 지내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이다. 야간 시간 동안 이 새들은 얇은 물, 특히 DMZ에 있는 물에서 휴식을 취한다. 철새들은 DMZ에서 인간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식동물들로부터도 안전하다. 낮 시간 동안에는 CCZ에 있는 철원 평야 논밭과 북한 쪽에 있는 평야로 날아가서 떨어진 곡물들을 주워 먹는다. 만약 현재 DMZ에 있는 휴식 지역만이 보호 구역이 되면 두루미 서식지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는 가상적 위험이 아니라 DMZ의 서쪽 부근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 부근에서 쌀을 추수하는 지역이 서울 지역의 산업 및 주거 이용과 인삼 농사의 확대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DMZ와 CCZ의 구역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둘을 동일한 보호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R의 개념은 핵심 지역, 완충 구역 및 접경 지역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DMZ에서도 가치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지역들만이 야생동물 보호구



역, 자연 보호구역,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충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가능하지만 특정 형태의 농-산업 및 집중 농업 등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적 보호수준으로 인해 서식지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철원 평야의 최근 경우를 살펴보자. 소위 “아이스크림 언덕” 위에 있는 이전 병커를 조류 관찰소로 지정하려는 방안은 “아이스크림 언덕”이 환경적으로 활용되면 토지활용에 관한 환경규제가 순차적으로 강화될 것을 우려한 토지 이용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같은 경우, DMZ BR 지정에 있어 세 번째 원칙, 즉 사람들을 관련 기획에 포괄적으로 편입시킨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남한에서는 ‘주주 어프로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DMZ의 해당 토지 대부분은 국유지이다. 그러나 CCZ구역을 비롯한 DMZ BR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원형 테이블,” 정기 주주총회, 그리고 위원회 참여를 통한 투명한 법률 과정으로 모든 구역의 주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주 어프로치에서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역시 환경(생물 다양성) 교육이다. 지역 주민들은 종종 해당 지역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을 기획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반대로 때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다. 교육은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일찍 변화를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해당 지역 보호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심어준다. 이를 통해 BR 성공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주주 어프로치에 대한 참고문헌과 기존 BR 경력 등을 비롯해 주주 대화 및

유네스코가 출판한 BR 개요인 Boumrane(2007)과 같은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

네 번째 원칙은 보상과 대체 수입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주민들이 DMZ BR 지정으로 경제적 기회가 제약된다고 믿는다면 DMZ BR 지정이 단순히 손해만 야기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DMZ BR 지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태 관련 사업 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보상 계획도 DMZ BR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상은 농업으로 이용되는 지역이나 BR 구역에 특히 중요하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이와 같은 지역들은 두루미나 독수리와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의 일부다. 한 가지 보상 방법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라인 하류 지역에 있는 야생 거위의 대규모 집단거주와 먹이활동으로 겨울 추수의 상당량을 손해 보는 농부들을 위한 보상 계획이 오랜 시간동안 협의되었다. 겨울 추수가 없는 한국에서 이 상황이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의 사용에 대한 통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생물적 퇴비사용 통제도 포함될 것이다. Bayreuth 대학과 강원대에서 해안 국경에서 실시한 Terreco 프로젝트는 최근 시행한 연구에서 생물적 퇴비가 수자원 품질에 대한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상 계획 외에도 생태계 서비스와 연관된 새로운 수입원 개발 역시 중요하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BR관리원으로 고용될 것이며, DMZ가 오늘날과 같이 민간인들에게 폐쇄되어 있는 한 DMZ BR의 전반적인 관리와 경영은 군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이다. 대체 수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몇 방법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태 관광 개발을 들 수 있다. 이는 DMZ BR

I
II
III
IV
V

개념(호텔과 펜션, 마케팅 서비스, 레스토랑, 휴양 활동 경영 등 포함)이나 CCZ 지역의 동쪽 구역에 있는 특정 산림 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해당 지역의 젊은층의 심각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주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는 특정 관련 서비스(산림이나 농업과 같은)에 대한 전문 “마스터 학교,” 대학 혹은 BR지역 내에 대학 분교와 같이 특정 교육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부근에 있는 서울 대학교의 생태 서비스나 생물학, 혹은 관련 대학을 DMZ BR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개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오직 이주를 줄일 뿐이다. 특히 원거리 지역(동쪽 지역에 있는 DMZ부근 경계 지역과 같은)의 경우 이주의 물살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드문드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건강, 공공 서비스 이전을 비롯한 이주에 대한 ‘연착륙’ 개념 역시 정립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종합 공간 기획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DMZ BR로 DMZ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문화적 이용과 인류 발전에 대한 시각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DMZ를 “살아있는 역사 기념비”로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실현되었다. 강원도 지역(고성군)에 있는 체계적으로 기획된 DMZ 박물관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살아있는 기념비로서 DMZ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들이 가능한 많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그린벨트에서 Schaalsee BR은 지역 특산물을 위한 정기 지역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관광객들과 지역민 모두에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정기 지역 시장은 지역 특산물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그와 같은 성공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기도 했다. 두 가지 모두 한국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심지어 DMZ BR없이도 실현될 수 있으나, BR의 존재는 추가적인 마케팅 수단을 제공한다. 정치적 개방을 한 이후, 관리 계획을 우선순위로 만들고 평가해야 하며, 이후에는 -가장 유명한 관문점 마을 자체처럼- 한국 분단의 공공 랜드마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철원 지역 DMZ에 있는 왕궁 유적지처럼 다른 랜드마크들을 평가해야 하며, 지속적 개발-특히, 생태학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경우-을 위한 컨셉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토지 사용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고 기획을 하는 것이다. 1970년 “인류와 생태권” 프로그램 내에서 밝힌 원조 BR 개념에서 보듯이, DMZ BR은 주로 동물과 식물군의 서식지이지만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다. DMZ BR에 대해 사람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최소 세 가지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며, 기획할 때부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첫째, 교통과 인프라 개발이다. 북한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DMZ BR 컨셉을 거절하고 있다. 이는 다른 우려에 대한 핑계임이 확실하지만(DMZ 월경성 BR 섹션 참조), DMZ BR 지정에는 국경을 넘은 인프라, 특히 교통뿐만 아니라 기타 통신 및 에너지 개방과 수요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통일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에너지가 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합 에너지 그리드는 정치적 목표라는 사실에서)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서 지역에는 두 개의 주요 교통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남-북을 잇는 추가 도로가 작은 국도를 제외하고도 적어도 10개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통신 인프라에 대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경우,

I
II
III
IV
V



특히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체방법 (생태 다리, 터널 등) 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토지 사용은 산업과 주거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주 어프로치에 대해 상위에서 논의했을 때 이미 언급되었던 사항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필요성은 압력이 거센 수도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성 산업 단지가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경우, 개성 역시 보다 역동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경이 보다 개방되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된다면 서울-개성-평양-남포를 잇는 도로는 국가의 새로운 주요 개발 축이 될 것이며, 최소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마도 자율 비즈니스 원동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이런 경우, 이전에 DMZ BR을 지정함으로써 개발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이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이다. DMZ BR은 여러 구역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질 것이고, 서울-평양 통로는 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조류들의 필수 휴식처를 비롯해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이동 루트”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 부근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작은 하천 및 그린벨트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DMZ 서식지의 중요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셋째, BR (현 CCZ내)에 바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역시 기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경우 기획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DMZ BR을 기획하는 중요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DMZ BR을 기획하기 위해 DMZ를 세 개의 구별되는 풍경지역으로 나누어

생태 형태를 보호할 수 있다. 서해안 지역은 독특한 조류 습지 지역이며, (저어새와 같은)바다 및 해안에 거주하는 조류, (점박이 바다표범 같은)포유류, (두루미 같은)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인 한강의 오염되지 않은 입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가까이에 있어 개발로 인한 가장 큰 위협을 받으며, 청정 자연 지역을 비롯해 다소 원거리에 있는 파주 농업지역에 여러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 지역은 이용 경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DMZ BR내 이 구역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지금도 멸종 위기에 놓인 특정 종들이 이미 서서히 쇠퇴하고 있고 생태계는 서식지에 해롭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도 DMZ BR의 서쪽 해안은 서해까지 다 다르며, 백령도 및 NLL 인근 섬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MZ BR의 동쪽 편에 있는 서쪽 해안 지역은 개성공단과 서울-평양 개발 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기획을 할 때, 이 개발 축이 DMZ 지역을 상당히 좁힐 수 있으며, 이동 루트가 그 지역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DMZ BR의 중앙 평야 지역에는 철원 평야를 중심으로 서쪽 인근 지역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는 두 개의 지방정부, 강원-개성 지역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특정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농업과 서식지를 경쟁적으로 이용하면 중요한 문제와 난관들이 야기될 수 있다. 환경 당국들(지역 혹은 중앙 등급)과 농민들이 체결한 계약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일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남북을 잇는 도로를 동쪽 산악지역보다는 이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앙 평야들이 앞으로의 기획에서 중요하다. 이 지역은 철새들의 아시아-퍼시픽 이동경로의 중앙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서식지 보호와 이를 활용하려는 이해관계의 갈등



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 갈등은 주주 어프로치와 같은 동의 조성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화천군에서 시작하는 DMZ BR의 동쪽 부분에는 유라시아 수달, 산양 등과 같은 멸종 위기에 놓인 포유류의 중요 서식지인 청정 산악 지역들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들의 이용과 서식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인구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한 토지 문제로 인해 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도 역시 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있다. 가장 동쪽 편으로는, 기존의 강릉-속초-고성-원산 교통 통로가 있다. 북한의 개방이나 통일 이후 이 통로가 토지 이용측면에서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의 관광 개발로 인해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가 위협에 처해 있다. 생태 관광 어프로치는 이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DMZ BR의 제정은 그 지역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BR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두 인지를 비롯해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통해 가능하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호감가는 상징 동물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전 독일 분단 국경의 Schaalsee BR에서 두루미 보호 사례를 살펴보자. Schaalsee BR에서 희귀종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철새와 같은 번식종뿐만 아니라, 봄·가을에 얇은 물속에서 밤에 휴식을 취하고 광활한 들판에서 먹이를 찾는 유라시아 두루미였다. Schaalsee BR에서는 이 지역의 두루미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개의 혁신적인 마케팅 어프로치를 만들었다. “Schaalsee 황야지역의 일부를 두루미에게 기부하자” 라는 모토

로, Schaalsee BR의 방문객들과 Schaalsee BR의 웹사이트 방문객들은 일명 “두루미 주식”을 살 수 있었고, 두루미를 위한 황야지대의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상에서 클릭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두루미 주식”은 주당 50유로로 고정된 가격의 “주식”이다. 이는 대표 문서로, 생태권 보호지역(BR)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인 이름도 넣을 수 있다. 구매자들은 그들이 바랐던 두 가지 목적 즉, 좋은 일 하기 그리고 고유의 가치 소유 즉 50 유로의 가격으로 제시되는 실질가치 구매 모두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구매자들은 뉴스레터 배포지에 자동적으로 그 이름이 들어가며, 매 가을마다 두루미 관찰 관광에 초대된다. 기부자는 보호구역 웹사이트에서도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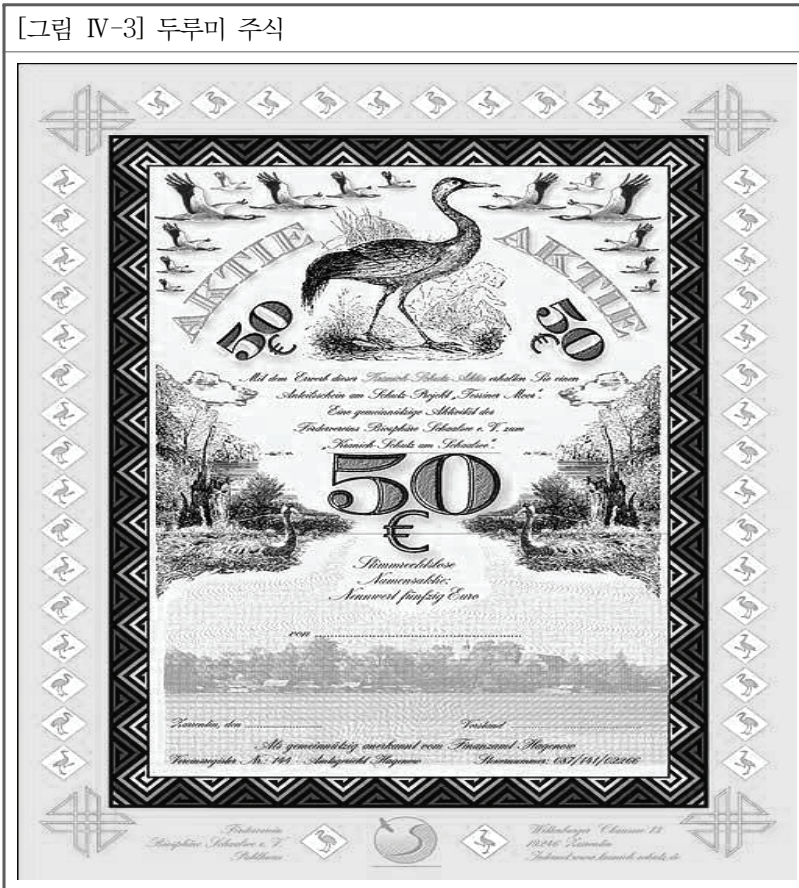
[그림 IV-2] 실제 생물권보전지역 두루미 보호 프로젝트의 인터넷 스크린샷



출처: <<https://www.kranich-schutz.de/kranich-schutz/kranich-schutz-aktie.php>>  
(검색일: 2009.11.29)

자연보호 개인 기부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황야지대 기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자는 이행 기관의 자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기존의 황야지대의 작은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하나의 허구 소유자가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부자는 웹사이트 상에 언급된다.

[그림 IV-3] 두루미 주식



출처: <<https://www.kranich-schutz.de/kranich-schutz/kranich-schutz-aktie.php>>  
(검색일: 2009.11.29)

[그림 IV-4] 두루미 보호를 위한 기부포스트



출처: <<https://www.kranich-schutz.de/kranich-schutz/kranich-schutz-aktie.php>>  
(검색일: 2009.11.29)

두 아이디어 모두 자연보호에 대한 생각이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로 보인다. 자연보호 지역들과 상징 동물들을 연결하는 것은 특히 포유류(수달, 곰, 스라소니, 늑대)와 두루미와 같은 철새의 경우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에서 두루미는 수 세기동안 이미 상징적인 조류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과 장식예술에도 쓰이고 있다. 두루미는 '자연보호'같은 컨셉을 추상화하는 것보다는 동정과 관심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상적이다. 살랭이, 검독수리 혹은 한국에서 상징적인 새인 두루미와 같이 국경 지역에 있는 희귀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연보호에 대한 동정심과 관

I
II
III
IV
V



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외 동물로는 유라시아 수달, 산양과 한국 흑곰이 있다.

Schaalsee BR의 예에서 DMZ BR에 이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적합한 동물들을 지역별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이미 김포, 파주 지역과 철원의 두루미, 파주와 철원에 독수리, 화천에 수달, 인제에 산양, 고성에 흑곰과 같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둘째, 보호는 (핵심 보호지역과 같이) 의미가 있어야 하며, 연구는 서식지 보호와 복원에 대한 결정들과 부합해야 한다. 셋째,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동물들은 위협에 처하지 않은 종에 한정해야 한다. 이는 화천에 있는 수달 센터와 같이 광경에 맞는 관찰 지역(고성군 송지호에 있는 UFO 관찰탑은 다소 좋지 않은 예이다)과 철원의 안내 투어, 다수의 교육 대책들을 가진 환경 센터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이 모든 활동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체는 중앙관료나 행동가가 아닌, 지역 당국, 환경 당국, 연구 기관, 기업, NGO, 농부 등을 비롯한 대형 이익단체다. 당연히 가끔은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는 보다 넓게 정보를 배포할 뿐만 아니라 위에 인용된 아이디어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전체 DMZ, 남한, 북한의 시각이 모두 편입되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 보다 많은 사안들이 논의된다.

## **라. 국경지역 생태권 보호지역이자 북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구인 DMZ BR**

현재 남북관계에서 국경지역 내 남북 간 협력을 구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경지역에 공동 보호구역을 만들

기 위한 모든 시도를 거부해왔으며, 거절해야만 하는 핑계도 갖고 있었다. 국경지역에 공동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는 북한군의 위협이 약해짐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남한은 단독으로 국경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북한이 장기 혹은 중기적 자체적으로 공간계획을 할 의사가 없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지에서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남한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 정부가 어떤 이유론든 남북 간 평화 관계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이 붕괴되어 공간과 환경계획 자체에 대해 필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남한 당국에 이를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상황의 경우, 남한이 세운 계획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로 첫 번째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과도기적 체제가 등장하거나 혹은 근대화화 평화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남한은 즉시 DMZ TBR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협력의 징조이다. 또한 DMZ TBR이 만들어지면 공유 생태계의 공동 관리를 통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협력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 UN 기관들의 공식적 인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생태권 보호구역과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Seville 전략을 함께 적용하겠다는 두 국가 이상의 약속을 나타낸다. 또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하기 위한 생태계 어프로치의 적합성에 대한 인지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UN Seville 전략에서 제시된 조언에는 다음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I
II
III
IV
V



DMZ TBR 설립에 관한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남한이 먼저 DMZ 남쪽 편에 생물권 보호구역을 만들고, 북한이 이를 따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모두가 DMZ TBR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까지 TBR을 만들기 위한 공동 방법이다. 이 경우, 남북한은 생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 기준에 따라 지역 구역화를 공동으로 정의해야 하며, 지역과 국가적 파트너를 규명하고, 협동을 위한 핵심 이슈들을 규명할 실무진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현 구조를 봤을 때, 이는 파트너들의 자율성이 없는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들은 환경부와 같은 당국으로서 생물학 연구기관, 지역 수준의 농업인협회와 협력하고 있는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아마도, 새로운 TBR 관리기관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DMZ TBR에 대해 남북한 정부 당국이 공식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며, 남북한 당국이 TBR의 여러 부분들을 지목하는 것이다. 혹은 어느 단계에서 TBR이 만들어지면, 관련 정부 당국들이 전체 지역을 공동으로 지목 한다. 향후 주요 협력 요소들에 대한 지시는 필수적이다. 설립의 마지막 단계로, 유네스코의 ICC MAB이 공식 지정이다.

근본적으로 DMZ TBR은 국가 생태 보호지역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핵심 보호지역과 완충구역들을 만들어야 하며, 중간지역들의 이용 목적에 대해 서로 조율해야 한다. 이는 관련 국가들이 각 구역들의 특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하고 있으며, 비슷한 관리대책이 각 구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공동 DMZ TBR에는 (역사나 문화가 아닌) 생태적 관점에서 종들이 서로 운집할 수 있도록 지역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두루미 보호 운동은 정확히 “새들은 국경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구역 나누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통합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분단지역을 지도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적대적 행위의 서곡이라 보는 현 체제 하에 있는 북한에 대한 난관 중 하나이다.) 핵심 구역들은 (예를 들어, 두루미들의 야간 휴식 지역 혹은 수달 핵심 보호구역) 지금에 비해 훨씬 쉽게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과거에는 전경 측면에서 원하는 바가 위성 이미지에 없었을 지라도 대지에서 본 광경은 다시금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DMZ 북부 부분에 있는 지역들이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남쪽에서는 상이한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양같이 땅에서 움직이는 종들에게는 공동 기획이 산양들의 움직임을 막고 있었던 인공적 경계들의 부분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산양의 활동영역들은 확대될 것이다.

구역 나누기 작업이 끝나고, 발표가 되고나면, 예산이나 업무 계획, 일정을 비롯해 특정 종들이 사는 환경의 복원이나 개선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대책 (앞서 언급한 산양과 같은 동물들을 위한 오솔길 제작) 등이 필요하게 된다. 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예산은 남한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때 인건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른 예산 요건들을 지불하기 위해 노동력을 남한에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특정 부분 역시 UN 산하에 있는 세계 환경시설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DMZ BR 관리원, 관련 군 당국, 관리 사무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남북한 의사소통의 문제, 특히 분산된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장 힘든 난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서는 이 이름을 받을만한 TBR은 존재할 수 없으며, 북한과 협의할 때 이 사항을 항상 강조해야 한다.

I
II
III
IV
V

마지막 포인트는 정부 양자 간 협의보다는 최소한의 조율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할 수 있으나, 일일 관리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남북한 모든 등급의 대표들, 예를 들어 정치(북한의 경우, MOLEP과 당이 대표하는 정부, 남한의 경우 MoE와 MOPAS가 대표하는 정부), 군, 지자체, 지역뿐만 아니라 기능 집단(산림 & 환경 서비스, 수자원 전문가, 생물 연구원, 생물 다양성 전문가)으로 구성된 합동 DMZ TBR 위원회를 설립, 이를 대표하여야 한다. 복잡한 남북한 관계로 인해 아마도 만장일치로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 매카니즘이다. 비록 이것이 그 기능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문제점들은 또한 즉각적인(임기응변) 실무진을 구성하여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수자원, 수자원의 품질, 산림 & 산불 등과 같이) 주제 단위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비롯해 TBR 두 구역에 두 개의 사무실을 둔 상설 사무국이 관리에 필요한 기준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기능들(예를 들어 PR 관련)을 이행할 것이다.

이전 섹션에서, DMZ를 홍보하기 위해 상징종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DMZ BR의 남부 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며-저어새, 두루미, 수달 혹은 독수리처럼-, TBR은 DMZ TBR의 대중성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포유류 프로젝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흑곰이 살아남아 있는 DMZ의 동쪽 부근에서는 흑곰이 경계간 프로젝트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또한, HR 개발 측면에서, DMZ TBR은 예를 들어, 공원 관리원, 산림 관리원의 합동 교육과 같이 농부와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생물 다양성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범 프로젝트의 역할

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화로운 삶의 구역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 상황에서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그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남한은 열린 정보 정책을 갖고, 남한이 DMZ에 대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과 DMZ 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들을 북한 측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현 남북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배적 상황 역시 기관의 암시가 담겨 있다. 경계 구역의 비군사 관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 당국은 DMZ 생물 다양성 이슈들을 다루는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민간 사무실에 대해 협력하고, 국가 안보 차원의 거부권을 갖지만 이를 현명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업무를 이행한다. 둘째, 오늘부터 시작해 남한은 국제기관 내에 DMZ TBR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옹호하는 국내외 NGO들로 구성된 기존의 DMZ 연합이 지금까지 해왔으며, 그런 노력의 “자연적”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 뒤에 있는 남한정부의 부담은 국제적 관심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로비의 수신인은 UNESCO와 UNEP과 같이 북한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IUCN과 같은 국제단체가 될 것이다. 셋째, 남한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 “환경 지원”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정부가 협의에 의해 변화하지 않을 것이나 (핵보유 국가로서의 상태), 일부는 협의가 가능한 우선순위가 있다. 아마도 DMZ 환경보호는 부분적으로 일순위에 속하나, 또 다른 부분으로는 둘째 순위에 속한다. 북한 위협의 특정 요소들은 협의 불가능한 것들인 반면, 일부는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서 그 우선순위를

I
II
III
IV
V

이 낮은 것일 수 있다.

#### 마. 결론: 대책과 청사진

지난 10년간, 남북 경계지역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전에는 이슈조차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도서관이 해당 논문과 조치, 심지어 그 주제에 대한 서적들로 가득하다. 본 논문은 “무엇을 보호하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기존 연구에 덧붙일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 독일사례, 즉 그들의 사고와 생각, 법률과 규정들은 잘 번역되어 DMZ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와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청사진은 무슨 활동들을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하는 지를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중기,” “장기”란 개념의 사용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는 1년 안에, 2~3년 안에, 그리고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시행될 대책들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런 기획 제안들을 비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현 남북한 상황에서는 특정 단계를 갖추고 난 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금 더 기다린다는 것이 예를 들어 북한이 DMZ TBR 기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멸종 위기에 있는 특정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이며(특정 보호대책의 긴급함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이런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평가의 결정이다. 이와 같은 제약들을 깊이 새긴다면, 대책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2011년~2012년)으로는 DMZ BR을 지정하여 DMZ를 보호 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지자체들과 모든 기타 주주들이 모두 모인 합동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MOPAS의 DMZ 정책 포럼이 이런 회의를 기획하는 것이 적합하다. 회의 말 무렵에서는 내각과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중기적(2012년~2015년)으로는 DMZ BR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상기 언급한 단계에 따라 UN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생물 다양성 조사, 우선 지역 결정, BR 컨셉(핵심구역, 완충구역, 임시구역)에 따른 서식지 지도 만들기
- 경쟁적 사용 결정 (교통통로, 산업개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계획)
- 이런 결과들을 국가, 지방, 군 수준의 주주 회의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폭넓게 논의
- 동시에 모든 단계를 북한 측에 알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DMZ TBR에 대한 대화 제공하기
- 모든 주주를 비롯해 국가, 지방, 군 수준의 집행 위원회/관리 위원회 설립하기
- 지역의 공식지도 만들고, DMZ BR에 대한 법률 제정하기
- 국회에서 논의 및 투표하기 (필수 자금조달에 대한 투표 포함)
- 기획안 UN에 제출하기
- UN의 공식 승인
- 집행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논의 및 승인하기 (해당지역 및 활동지역 보존, 복원, 개발 계획안 포함)
- DMZ BR에(주변에) 대학 이전시키기, DMZ BR을 위한 마을 갱생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높은 등급 대책에 대해 중앙 수준의

I

II

III

IV

V

## 기획안 (작성)

장기적(2015년 이후)으로는 DMZ (T)BR의 관리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 위원회가 관리/경영
- 북한에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협의 제안
- 지역 브랜드, 지역 특산물 개발을 비롯해 DMZ BR 브랜드화 하기
- 물품, 서비스, 보호대책 차원의 참신한 대책 도입(상기 언급된 두 루미 주식과 같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청사진은 프레임 형태로 보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책으로 채워져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조율되어야 한다. DMZ 서식지 보호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 반면, 특별 종들이나, 일부 지역(특히 수도권 부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며, 속도가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이다. 다른 정책들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는 DMZ BR 정책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DMZ BR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는 모든 수준의 정치, 행정 및 남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그와 같이 중요하고(생태학적 차원에서) 상징이 되는(한반도의 평화 차원) 노력에 대해 국제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연합과 같은 국제 활동가들을 파트너로 참여시켜 진행하는 것이다. BR은 이미 국제적 인지 차원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둔다면, DMZ BR의 부분·지역들은 철새들의 아시아-태평양 이동 경로의 중요성으로 인해 UN의 세계 자연유산의 자격을 갖추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제적 인지는

또한 남한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까이서 지켜봄에 따라 북한에게 이에 대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한쪽 편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북한에게 현재의 부정적 위치를 다시 고려해 보라고 부드럽게 강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서 DMZ는 실제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잇는 “평화-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남북협력의 가능성: 후퇴인가 진로수정인가?

안드레아스 헤네카(Andreas Henneka,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 가. 서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은 “협력”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남북한 정상들의 연설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남북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야말로 남북화해의 주요 동인이고, 한민족 전체에게 최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정치적 이상이며 평화와 안보 그리고 복지로 특징지어지는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건설적인 기초다. 협력과 상반된 개념인 봉쇄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들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건설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봉쇄는 양국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구속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블록형성과 같은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조장하며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갈등을 고조시킨다. 남북한의 관계가 군사적인 충돌과 상호불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냉엄한 현실이 양 정부의 협력을 명백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장기적으로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I  
II  
III  
IV  
V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은 단선적이지 않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퇴도 전체과정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후퇴가 일어날 때, 협력 자체를 문제 삼거나 심지어 폐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남북 간의 긴장완화는 물론 최종목표도 이룰 수 없다. 본보고서는 향후 남북 간 평화를 위한 전략의 성공을 규정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요소는 첫째,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으려는 준비, 둘째, 인내하는 능력, 셋째, 국내정치에 있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결단성이다. 본문에서는 현재 주요 이슈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상황전개에 대한 설명과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협력과정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각 부분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 나. 배경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 대표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은 남북경계선에서의 견고한 협력이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남북경계선에서의 협력을 양국 협력의 바로미터로 해석한 것이다. 위도 38도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마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의 분리선이자 전선이다. 그래서 남북경계선은 충돌의 지리적 중심이 된다. 따라서 만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군사분계선에서의 건설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 매우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남북경계선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협력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남북경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타진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지역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들은 경계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정치적 사건들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경계지역이 아닌 일상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은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 지역들에서의 협력이 더 간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0년대 초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남북교류가 현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상술한 양국 간의 협의에서 뿐 아니라, 특히 정치, 경제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참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도 북한경제의 지속적 하강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양측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교류를 추진하는데 일조했다. 1995년부터 통계를 보면 남북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다. 현재 상황

### (1) 남한정부의 목표

#### (가) 개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8년 4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신정부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가들의 개인적 이해가 아니라 민족과 국민의 이해가

I

II

III

IV

V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목표에서 국제적 스탠더드가 지켜지고, 기업과 정부가 투명한 작업방식을 통해 발전하며, 기회의 균등이 중시되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보호받고 강해지는 “Global Korea”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개혁이 요구되며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신 정부는 설정한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900개에 달하는 행동플랜들을 설정하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의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많은 분석가들은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당적 배경으로 인해 앞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강경한 정책을 채택하여 그동안 구축된 남북관계의 신뢰가 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수뇌부 역시 전임 서울시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북한의 의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평양은 1954년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방위조약(특히 이와 관련한 남한의 미군기지와 공동 군사행동 같은 함축들)이 남북 화해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2009년 6월 16일 한미 간 ‘조인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역적 협력을 넘어서는 21세기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관계로 격상시켰다. 한미동맹의 격상은 북한에게 비우호적인 행위 이상을 의미한다. 그 핵심에 있는 파트너 관계는 북한에게 명확한 위협을 의미한다. 2009년 6월 16일 한미 공동성명에 의하면, 양국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양국은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해결하고 북한의 인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자신의 친미적이고 선임자들에 비해 보수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언론에서 과소평가된 부분이다. 그의 초기 연설들을 분석해 보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생각들은 유화적인 어조로 표현되어 있고 공공연한 도발적 표현이나 위협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2월 국회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의 발표를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이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남북한 지도자들이 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통일을 위한 문을 열기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 정상회담의 가능성 역시 열어놓았다. 통일은 모든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희망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진술이었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3.1운동 89주년 기념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상호이해와 상호배려의 문화가 한국사회에 확고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배척하고 등 돌리는 대신, 공동의 문화적 유산을 가꾸고 상대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의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은 평양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5월 29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과 6자 회담의 중재자 역할도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그는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베이징과 긴밀한 공조를 원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 대화의 거절이 아닌 속개에 치우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알 수 있다. 이 진술들

I

II

III

IV

V

로 보면 신정부는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에 기초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협력의 여지를 증진하며 그 결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미래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비평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초반부터 강경노선으로 경도되었다고 비판했던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평화로운 협력의 조건인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종결을 자신의 전임자 두 명보다 더 확실한 언어로 표현했고, 또한 이것을 남북 대화와 대북 원조의 전제로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력이 너무 공격적인 표현으로 인해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초기부터 오해를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외교참모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참모들은 국제관계 속에서 국민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힘을 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이었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능력있는 경제와 막강한 군대가 발전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한다. 조지 W. 부시 하의 정책노선과 유사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평양과 남한의 일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에 대해 의심했고, 그 의심을 강화시켰던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와 군사가 번영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전제는 보수적인 정당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정당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나) “비핵·개방·3000”의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개방·3000”의 핵심은 북한을 향후 10년 동안 국제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약 1,9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북한을 산업, 교육, 재정, 인프라구조와 사회영역과 같은 부분들을 개혁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데 돕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참모들이 수립한 이 전략을 통해 보수적인 한나라당 출신인 대통령은 북한에 실제적인 진로를 제시했고, 이것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존 대북정책의 진로변경으로 해석되어졌다. 최소한 이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된 대북정책이 대부분의 한나라당 당원들이 요청했던 것보다 초기에는 더 신중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당에 과거에 두 전임자들에 의해 시작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비핵·개방·3000”의 중심에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있다. 이 정책의 기저에는 상호성에 입각한 원조가 있다. 공동의 프로젝트에서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이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대변인은 대북정책의 건설적인 내용들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대해 강경노선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이 때, 양국 간 물적, 인적 교역량이 2008년에 최고에 달했다는 것이 정부 노력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물적, 인적 영역에 있어 숫자가 2009년 이래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입장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울이 보내는 메시지가 여론과 평양에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그의 전임자들보다 나쁜 점수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처럼, 대화와 협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향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가 전임자들과 달리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무장해제를 남북협력확대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비타협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북지원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반대급부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경험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과 대 성과” 전략을 강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적인 정당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통령은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나 반대급부를 성취하는 일 없이 북한에 양손 가득 지원을 보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선거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햇볕정책과 차별적이며 남북관계를 상호주의의 기초위에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는 태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신 정당, 북한에 대한 명백한 요구와 특히 그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평양이 이명박 대통령을 강경주의자로 생각하게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통령의 대외표현과 그의 전략을 전달한 참모들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 (다) 제안

이명박 대통령의 대외표현과 정책에 대한 점검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 (2) 천안함 침몰

### (가) 개관

2010년 3월 26일 한반도 서해 앞바다에서 한국 프리깃함 천안함이 폭발로 인해 침몰하여 104명의 함대원 중 46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상황과 정치적 어조는 하루아침에 격화되었다. 이 위기는 남북 간의 기존 노력들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사이에 진행되

던 건설적인 대화마저도 깨뜨릴 만큼 위협적이다. 천안함 침몰은 남북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 사건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되었다는 소문을 성급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서울과 워싱턴은 평양이 천안함 피침에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울이 요청해 만든 “민관합동수사팀”이 5월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남한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과 호주, 영국과 스웨덴의 대표들이 속한 위원회는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에서 제조되고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근거로 다른 납득할만한 설명이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이 엄격하게 감시되는 해역에서 포착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폭발이 자발적인 과실이나 남북해역경계(NLL)를 따라 뿌려진 수많은 수뢰중의 하나와 부딪혀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피침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과 워싱턴에 북한의 전문가들이 조사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것과 공동 조사를 허락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다. 서울은 이제까지 이 무리한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가 이 사건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인 근거도 없다는 언질과 함께 조사를 중단한 것과는 달리, 베이징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북한이 참가하는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투입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울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고 엄중한 대처를 예고하였다.

I
II
III
IV
V



5월 24일에 국민에게 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은 평화를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북한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만행을 용서해왔지만 한국의 관용적 태도는 천안함의 피침과 함께 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평양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깃발아래 폭력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는 어떠한 협력도 의미가 없다. 남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참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당하게 안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능력과 전투능력은 증가되었고, 군사개혁이 확장되었고 기존의 동맹에 근거한 미국과의 전투준비는 강화되었다.

실제로 해상기동훈련이 재개되었고 미국과의 기동훈련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규모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기동훈련에는 거의 3만 명의 미군과 5만 6천명의 한국군이 참가하였다. 평양은 이에 대해 자국의 군대에 비상을 걸었고, 남한과 체결했던 기존 안보협약들을 무효화시켰다. 한국과 미국의 군대도 비상경계 태세의 수위를 올렸다. 게다가 서울은 군사경계선에서의 대북선전 스피커를 재설치하는 등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평양은 한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남북경계지역을 따라 설치된 경제특구에서의 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한국이 휴전선을 따라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선전스피커를 사격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6월 14일 열린 UN안전보장이사회의 청문회에서는 남북한에게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대통령의 UN을 통한 엄격한 대북 응징조치가 관철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이후에 평양

에 대한 그의 어조는 명백하게 강화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당히 유화적인 어투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 (나) 천안함 사고의 분류

언론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표현되었지만 북방한계선 수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남북 간에 있어온 해상 경계에 대한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1953년에 그어진 경계선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더 남쪽의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수십 명의 남북한 선원들이 군사적 충돌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1999년에는 최소한 17명의 북한 수병들이 교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았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 임박한 2000년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02년의 충돌에서는 6명의 한국군과 13명의 북한군이 죽었다. 2009년의 소규모 전투는 배들이 부서진 것을 빼고는 인명피해 없이 끝났다. 해역경계의 통제와 이와 연관된 바다의 이용이 생사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것은 명백히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관련돼 있다. 이 지역의 바다는 대단히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어업 수익에 결부된다.

이러한 경제 정책적 요소 이외에도 최근의 천안함 사건은 남북정책과 군사적 연관 속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9년 12월에 북한대표들은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한국 정부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거듭 요청해왔다. 이 제안은 청와대에 전달되고 논의되었지만, 정부진영 내의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평양은 이 문제로 화가 많이 났던 듯하다. 군사 정책적으로는 2010년 초에 출간된 미국의 Nuclear Posture Review와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평

I

II

III

IV

V

양을 불안하게 하였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은 한국과 미국이 종래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 기동훈련으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왔으며 평양은 기동훈련을 워싱턴과 서울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북한정권의 전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여기 진술된 모든 요인들이 평양의 눈에는 서울과 워싱턴이 말하는 대화준비를 방해하는 것들이었다.

평양이 도발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분쟁의 강도에 비춰볼 때 있을 법한 일이다. 상당수 여론이 북측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피침되었다는 결론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공격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반영한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 명령이 북한 군대 내에서 김정일에 반대하는 소수분파그룹을 통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에 따르면 천안함 공격은 내부 붕괴의 표현이다. 이러한 시각과 반대되는 것은 최근의 북한 지도자의 정책이 서방에서 원하는 테제인 “미치거나 약한” 지도자 테제가 불합리함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모든 위기를 통해 국가에서의 강자로 자신을 증명해왔고,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작년에 소위 스파이활동을 하다 잡힌 미국 여기자들을 구출하러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과는 다른 요인들을 지적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제시된 증거들의 일부 결함들, 한국 정부에 대한 낮은 여론지지도와 정부 여당 내에서의 명백한 의견대립은 천안함 피침을 의도적으로 북한책임으로 돌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북강경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기 시작부터 반대자들로부터

터 반동적이라고 비난받아온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미 언급한 5월 24일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을 북한의 선전이라며 무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도는 한국과 서방의 관찰자들 모두 역시 북한에 천안함 피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조사보고서에서의 불분명성외에도 어뢰가 북한 잠수정에 의해 발사되었다는 주장을 의심할만한 일련의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논거들이 있다. 북한 어뢰설에 관련된 기술적인 논거들에 대해서 서울이 상세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모든 의심스런 사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이 보고서를 미리 언급하기 보다는 대신 북한 어뢰설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은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양국 간 협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의 꽤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북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야기되었다. 미국 신정부는 통상적으로 행했듯이 핵실험을 비난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요청했으며, 문제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직접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외교영역에서 극단적으로 노련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드러난 북한의 지도부가 한국의 배에 발표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와 완전히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실제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동등한 대화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기동훈련의 중지만큼이나 멀어진 일이다. 평양이 실제로 천안함의 침몰에 책임이 있다면, 이것은 달갑지 않은 일을 한 것이 된 셈이다.

I

II

III

IV

V

### (다) 천안함 사건의 요약

천안함 피침을 둘러싼 위기와 관련 논의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그리고 북미관계에 방해요인이다. 또한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이 6월 초에 실시된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잃게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2012년에 있을 임박한 대통령 선거를 고려할 때 재임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측근들이 가능한 한 유리한 정치적 위치에 포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중요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서두에서 밝힌 대북 협력을 염두에 둔 대북 아젠다를 재고하고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작금의 위기에서 대북강경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퇴행적 행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군부와 외무부, 강경주의자와 온건주의자들 사이의 압력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온 갈등이었고, 한반도에서의 협력노력들이 항상 다시 정체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이후 몇몇 관찰자들은 북미 간의 갈등이 종식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과 조건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고, 핵 감축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는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외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었다. 아직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은 행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평양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실제적인 궤도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워싱턴이 평양의 조속한 양국협상에 대한 희망을 알면서도 이제껏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강한 국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된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에 관련된 사안에는 한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보수적인 여론에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천안함의 침몰이 강경론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워싱턴은 서울의 동맹자로서 한국에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의 성실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관계자들은 대북정책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무대 뒤에서 씩씩해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 해군의 공격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동맹 파트너인 미국과의 계속적인 군사·기술적 연계는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계속된 비난은 평양을 도발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동훈련은 북한의 안보에 공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 (라) 제안

해상 충돌을 확실히 방지하는 방법은 근접해안 해역의 이용과 비무장 해역의 설정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서울은 평양이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임기 초기에 행하던 유화적인 어조로 귀환하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 있는 강경론자들이 천안함 침몰의 결과로 그를 엄격한 강경노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법의 과격화는 선거 전후에 행한 남북의 접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상호간의 접근과 협력을 통해 신뢰형성을 추진하려 한다면 반대자들의

I

II

III

IV

V

영향력에 굴복하지 말고 우발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평양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3) 남북협력

#### (가) 개관

이미 암시했던 것처럼, 남북협력을 위한 기반을 수없이 준비해왔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례들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동구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파괴적인 자연재해들과 김대중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있다. 2000년에는 양국정상회담에서 남북협력이 구속력있게 합의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달성된 것들과 상관없이 분석가들은 아직까지 이 협력이 북한정권의 장기적인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관대하게 제공되었고 어떤 전제 조건과도 결부되지 않은 미화 70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가 지금의 폐해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과거의 관대함과 개방이 없었으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최근의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북무역을 종사한 회사들에게 더 이상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고 권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궤도수정 후 행해진 프로젝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98년 현대 아산과 북한 관광청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된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다. 북한 동해안에 위치한 산악지역이 관광객들을 위해 개발된 후, 2002년부터는 그곳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다. 같은 해에 이 지역은 강원도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관광지역

으로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육로가 개통되었다. 2005년 6월에는 누적 관광객 100만을 달성하였다. 북한은 이 지역을 자신의 땅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범적 프로젝트로 여겼다. 미국 달러가 지불 수단으로 쓰였다. 2008년 7월에는 남한의 여성 관광객이 민간인 통제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사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평양이 사건 조사단에 한국의 참여를 거부한 후, 서울은 이 지역 관광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였다.

2010년 3월 평양은 금강산 관광단지 내 한국 정부와 한국무역공사의 5개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남측 근로자들을 추방하였다. 이 사건에는 한국 측이 이 지역으로 여행을 중지한 것에 대한 보상과 한국의 천안함 피침을 북한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강산 프로젝트의 빠른 폐기는 다른 공동 프로젝트들과 6자회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천안함 피침이 평양과 서울의 대화를 지대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론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공동프로젝트는 2004년에 문을 연 서울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개성 공단이다. 한국의 투자자인 현대 아산은 개성이 남북교역의 중심 항구가 될 것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중앙 환적항이 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여기 들어온 수많은 남한의 기업들은 거의 39,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월급 75달러로 고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월급은 직접 지불되지 않고 북한의 에이전트가 공제 후에 노동자에게 북한 돈으로 지불한다.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은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개성공단과 유사한 특구들의 시설을 평가할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공단지역의 연구를 통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증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성에서는 일차적으로 섬유, 화장품, 반도체가 제조되고 수출된다. 북한은 연간 1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특정 물품들이 개성으로 반입될 수 없고, 이것이 다시 생산력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게다가 개성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경쟁제품에 비해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2년까지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북한에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억 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산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도 현재의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남북한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평양은 이 지역 안에 있던 연락사무소의 협력을 종결한다고 선언하였다.

수주 전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낸 보고서는 남북협력을 화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영역에서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이 영역에서 남북한 간의 기술 차이가 특별히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신희 ‘이슈와 정책 보고서’에는 북한이 이 분야들에서 뛰어난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고 이 영역에서의 협력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북한이 핵에너지와 미사일 산업 영역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역들에서의 협력은 북한이 얼마만큼이나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깊이와 질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빠른 협력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단계적인 확장과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제안

북한이 한국의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기존의 서울과의 경제적인 공동프로젝트들을 파기하는 것은 외화를 북한 안으로 들여오려는 북한의 이해와 완전히 상충한다. 이것은 서울에게도 해당된다. 한국 역시 자신의 책임과 의욕적인 정치적 계획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경색과 협력의 중단을 행할 수 없다. 남북한 간의 계속적인 관계 악화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의 주최국이며 의장국인 한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서울은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금강산에서의 여행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그 밖에 정부는 회사들이 북한에 계속 투자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이 두 제안의 이행으로 평양과의 대화를 유지시키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진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남북교역에 관한 예산 삭감은 재고되어야 한다.

## 라. 잘못된 상황전개: 핵심 문제들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한국 대통령의 기본 정치적 노선에 대한 잘못된 전달, 진보와 보수 간의 국내 정치적 힘 싸움, 미국과의 공동 기동훈련 속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임자들에 대한 비판은 일방적인 유화전략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결에 있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시키지 못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프로젝트 전체를 중요성과 비용에 따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첫째, 쌀, 비료, 의약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적 원조, 둘째, 자연자원의 채굴과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같은 계산할 수 있는 위험과 남한측에 직접적인 이득을 가지는 프로젝트들, 셋째, 북한 인프라구조의 건설과

I

II

III

IV

V

계속적인 공단건설 같이 현저한 재정적 부담과 위험을 수반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거의 모두 세 번째 카테고리 속에 속하고 현 정부에서는 중지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항구도시 해주에 경제센터를 짓는 것이 여기 속한다. 화해와 협력을 대신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쌍방의 이익과 번영의 전략을 내세웠고 이것은 핵무기의 감축, 개방 그리고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향상이라는 콘셉트에 기반을 둔다.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그 아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전조들이 달라졌을 뿐이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포기로 나아가게 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북한은 2000년과 2007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중심적 문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이 전 정부들이 행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반면에 서울은 현 상태의 책임을 평양에 돌리면서 새로운 대화를 위한 모든 제안들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양측은 각각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한다. 이 입장들은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태도는 어떠한 관계발전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관계발전이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 북한이 자신의 입장에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가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정치적 열쇠가 서울에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온건하고 건설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있다

는 것을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깨닫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포기를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계속 삼는다면 평양은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조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 테마는 따로따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핵정책, 인권, 미국과의 협력 분야에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 전망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한반도 정세가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속고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동맹국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 한 한국은 미래에도 분단국으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사항은 특히 남한에 해당된다. 한반도 불안정은 한반도만의 위협은 아니다. 따라서 결론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후퇴가 아니라 진로 수정, 부분적인 협력이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공동의 이해를 찾아내고, 이것을 지원하고 각각의 개별 이해를 규칙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가깝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I

II

III

IV

V



## V.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 1.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손기웅(통일연구원)·강구섭(한국교육개발원)·양대중(고려대학교)

통일된 독일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은 정치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전투부대도 파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라인강이 아니라 이제는 ‘엘베강의 기적’을 바라보며 유럽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 동서독 주민 간, 구 동서독 지역 간의 갈등도 있지만 동쪽출신 여성이 현재 연방수상이고,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도 구동독 출신이다.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 도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대계에 맞는 일이다. 주변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겪었던, 한국전쟁이 끝나고 겪었던 그 어려운 삶을 은근과 끈기로 후세를 위해 깨끗하게 감내하고 걸었듯이, 통일 이후에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상적인 국가적 과제일 뿐이다.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시 한번 통일시킬 때이다.

### 가. 정치통합 평가

한반도와 독일 간에 놓여있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그것이 평화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연구·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과정은 그것이 잘 진행되었건 못되었건 간에 우리에게

I

II

III

IV

V



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된 2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독일의 통합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이 공식 선포된 후, 구동독 지역을 포함한 연방의회 선거 일정이 1990년 12월 2일로 확정되면서 동서독 정당 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통일 후 치러진 첫 선거에서 서독 선거법이 구동독 지역에 적용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동서독 정당 간의 통합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독 정당들은 동독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동독 자매정당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동독 정당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였다.

동서독 기민당(CDU)은 1990년 10월 합당을 완료했고, 농민당은 해체후 개별적으로 기민당에 입당하였다. 사민당(SPD), 자민당(FDP)도 서독의 각 자매정당과 연합을 이뤘고, 동독 녹색당이 선거이후 서독 녹색당(Die Grüne)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수의 동서독 정당 간의 통합이 전독일 총선 전에 마무리 되었다.

동서독 정당통합은 정당 간의 대등한 통합이라기 보다 동독 각 정당의 당 조직이 구서독 정당에 흡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서독 정치체제가 동독지역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동독 정치인이 정당 내에서 일부 보직을 맡으면서 인적 통합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당 대표, 사무총장 등의 주요 보직은 서독 측 인사가 맡았고, 부대표, 당무위원 등은 동독 측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독의 유권자수가 동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실시된 첫 연방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662명의 의원 가운데 구동독 5개주에서 선출된 127명과 베를린에서 선출된 28명, 즉 총 155

명이 구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의 지역적 규모의 차이가 정당 내의 인적 구조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다. 또한 흡수통합 방식으로 이뤄진 통일과정에서 서독으로의 권력 쏠림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동서독 정당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구동독공산당인 사통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DS)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입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체제전환의 상황에서 구동독공산당의 잔당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동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민사당은 통일 직후 통일후 유증에 따르는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주로 구동독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서독 좌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구서독지역으로까지 지지기반을 넓히면서 전국적 지지를 얻는 전국정당으로 성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사통당의 후신”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민사당은 베를린 등 구동독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사민당과 연정을 꾸리는 등 좌파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독일 정계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 구서독지역에서의 지지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구동독지역을 한정해서 볼 때 기민·기사당(CSU)과 사민당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얻는 정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사당은 2007년 구서독 좌파 세력을 주축으로 결성된 선거대안연합(WASG)과의 합병을 통해 좌파당(Die Linke)을 결성하였다. 동서독 좌파의 결합체라고 평가되는 좌파당은 진보적 색채를 드러내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I
II
III
IV
V

통일 전후 이뤄진 동서독 정당통합에 대해 서독 정당체제가 동독지역으로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의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통일후 구동독지역에서 정당체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상 유래가 없는 단기간에 민주적 정치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체제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구동독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정당이 신속하게 세워짐에 따라 통일후 공백없이 전 독일에서 의회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 구동독지역 주 의회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 509명 가운데 구동독의회 출신은 5명만 당선되어 구동독출신 정치인 청산 또한 자연스레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동독지역에서 정치경험이 없던 새 인물이 대다수 등장한 가운데 동독과는 다른 서독의 의회체제에 대한 이해·경험의 부족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이해, 정당정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개선되고 있다. 체제 구축의 측면에서 통일후 구동독지역 정당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체제 측면에서의 정당통합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독일은 구동독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정치문화 신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동독 유권자의 미흡한 민주주의 의식과 낮은 정치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통일 초기 동독인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지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년 내에 서독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동독지역에서 선거 등의 정치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에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정치조직 및 경험이 동독지역에서 아직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로 하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상황은 정치체제 이식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으나, 그에 적합한 인식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완성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 민주적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나. 행정통합 평가

구동독지역의 행정체제 통합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야만 구동독 재건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 행정부의 통합은 동독 체제하에서 해체되었다가 부활된 5개 주의 주정부를 재수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는 새로운 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인력이 전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행정인력의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동독지역에서 새로운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었다. 동시에 서독의 행정인력이 동독에 대거 투입되어 동서독 인력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 초까지 구동독은 210만 여명의 행정인력을 유지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았다. 동독 전체 인구의

I  
II  
III  
IV  
V

12%에 해당하는 이러한 공공분야 인력 규모는 전체 인구의 7% 가량이 공공분야에 근무했던 서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행정인력을 처리하는 문제가 통일후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들 가운데 약 30만 명은 통일 전에 퇴직하였고, 약 180만 명이 통일된 독일로 인수되었다.

동독의 행정인력은 크게 조기 퇴직, 해직, 교육 후 계속 임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동독출신 행정인력은 공직적격성 심사를 통해 계속근무 가능여부를 심사받았다. 심사과정은 당사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한 후 개별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성(이른바 슈타지) 등에서 인권 측면에서나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서 어긋나는 행위에 가담한 여부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되었다. 헌법에 반하는 행위 전력이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적극 협력한 자가 새로운 체제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동독 작성 주는 국가보안성, 국가안보국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자의 주 행정기관 고용을 금지시켰고, 이러한 조항은 이후 다른 주에서도 적용되었다.

이처럼 반 인권적 기관에서 적극 활동했던 인력이 통일후 더 이상 행정인력으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행정경험을 가진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체제의 상층부에서 그러하였다. 반 인권적 행위 관련자 이외에 동독의 기존 행정조직이 해체되면서 자리가 없어진 인력의 일부도 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감원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전 보수의 70% 가량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으며 6~9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쳤다. 이후 재고용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해임되는 방식으로 감원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원된 인력은 약 20~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 초기인 1990년 210만 명에 이르던 동독 행정인력은 1995년 15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축되었다. 감원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행정단위 수준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연방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져 중앙 행정인력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리가 체제개편 과정에서 없어졌다.

계속 근무가 결정된 행정인력은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였다.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지식 등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법치국가, 민주주의 행정체제에 입각한 가치관, 행정법, 헌법 등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검증을 통해 계속근무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다.

동독 행정인력의 교육은 구서독의 중앙공무원 교육담당기관, 연방행정청, 구서독 각 주의 행정전문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각 기관은 구동독, 즉 신 연방 5개주의 행정인력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교육을 전담하는 강의인력의 양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구서독의 각 기관은 구동독 5개주의 공무원 교육기관 신설자문, 동독 인력의 행정실무 견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독 인력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1991~1994년 사이 21만 5천명의 동독 행정인력이 교육에 참여했고, 통일 후 첫 3년 동안 매년 1억 8천 마르크 가량이 이를 위한 재정으로 소요되었다.

한편, 행정인력 처리, 행정체제 구축 등 전체 행정통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기구 등이 신설되었다. 연방-주 조직정비처(Bund-Länder Clearingsstelle)는 통일후 진행된 인력지원 업무를



주관하였다. 연방정부, 신·구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구성원으로 1990년 8월 신설된 연방-주 조직정비처는 신 연방의 첫 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지방행정 업무를 책임졌던 전권자를 자문하였다.

동시에 공공기관 폐쇄, 새로운 기관 설립·이관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신 연방주 재건업무를 지원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행정인력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단을 조직하였다. 이 기구는 구동독 각 지방에 지방자치단체 구축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구동독에 구서독의 행정인력을 소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1년 베를린에 설치된 이 기구는 1995년 6월까지 존속하며 총 3,800건 이상의 인력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지방행정 조직정비처, 직무참모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정보업무처 등 동독의 지방행정체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구가 신설·운영되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구서독에서 파견된 행정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독 행정기관은 통일조약 제15조에 의거하여 행정자문단을 조직해 동독지역에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동독지역의 행정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였다. 1991년 1만 여명이 구동독의 연방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이래 1992년에는 2만 6천 명, 1995년 말에는 3만 5천 명이 구동독지역에 파견되었다.

이처럼 장애가 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안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독 중앙집권체제를 지탱하던 행정체제를 행정자치에 기반한 민주적 행정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무렵 구동독지역의 행정통합이 완료되었다. 특히 재정, 조세 행정 등 구동독에서는 낯설었던 분야들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

지방단위 뿐 아니라, 사법 등의 연방단위 행정체제도 구동독지역에 성공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독체제로의 편입과정에서 217개에 이르던 동독의 군 행정구역이 87개로 축소되는 등 지방행정 체제가 대폭 개편되었다. 인력 측면에서 슈타지 연루자의 해임 등 인적 청산 뿐 아니라, 방만했던 인력 규모를 서독 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 행정인력의 높은 고위직 점유율 문제도 점차 해소되어, 2002년 이후 신 연방 지방정부에서는 동독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다. 경제통합 평가

독일통일 후의 동서독 경제통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낙후되었던 구동독지역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정비하여 이 지역을 재건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통일 전인 1990년 3월 1일 동독의 산업과 경제의 상속자 역할을 할 기관으로 신탁청(Treuhandanstalt)이 설립되었고, 1990년 5월 18일에는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협약」이 체결되었다. 신탁청의 임무는 국가 소유로 되어있던 동독의 재산과 산업체들을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민영화하는 일이었다. 공동의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협약에 의해서 서독마르크화가 동독지역에서 공식통화로 인정되었다. 이 두 결정이 향후 동독의 경제발전추이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협약」으로 전체 독일에 단일 경제단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서독마르크화가 공동통화로 인정되면서 1,980억의 동독마르크화가 1,200억 서독마르크화로 전환되었다. 분단 기간 동안 서독마르크 대 동독마르크의 환율은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하여 은행

I
II
III
IV
V



에서는 1:4~1:8, 암시장에서는 1:30의 환율로까지 교환되었었다. 통일 후 이것을 동독 주민의 요청과 정치권의 호응으로 1:1~1:2의 환율로 교환하였다. 동독 주민의 나이에 따라 환율을 달리해 14세까지는 최대 2천 동독마르크, 15~59세는 최대 4천 동독마르크, 60세 이상은 6천 동독마르크를 1:1의 환율로 서독마르크와 교환하였다. 임금, 연금, 장학금, 임대료 등도 같은 환율을 적용하였다. 그 이상의 추가 액에는 1:2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환율 적용을 통한 화폐교환과 서독마르크의 공동 통화화는 통일 전에 이미 동독지역의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생산성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인상된 대부분의 동독기업들은 이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0년 후반 동독지역의 평균임금은 서독마르크로 환산해 약 1,400 마르크로, 서독지역 평균임금 3,500 마르크의 약 40%정도에 달하였다. 동서독 지역에 따른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노동력이 이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일한 언어, 사회적 안정과 낮은 이주비로 인해 동독 노동력의 이동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1991년에만 14만 명이 이주하였고, 50만 명이 장거리 출퇴근자가 되었다. 동독 내부의 열악한 노동시장에 기인한 노동력의 이동은 동독의 임금상승을 촉진하는 이유로도 작용하였다. 1990년 후반부에 동독의 임금은 30%가 상승했고, 1991년에는 60%의 임금상승을 기록하였다.

한편, 서방국가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동독시장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고, 동독인의 서구상품 선호현상까지 겹쳐 동독기업은 점차 활로를 잃게 되었다.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동독 내부의 역동성이 발현되리라는 정치권의 기대는 경제통합의 초기에 발생한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분열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협

약』은 분명히 통일 직전 동독인들의 구호 - “서독마르크가 오면 우리가 남아 있겠지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마르크를 찾아 가겠다” - 와 희망에 대응한 서독 정치권의 옳은 대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동독 내 국내생산의 격감과 통일후 초기 동독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야기했던 것이다.

1990~1991년 동독경제는 급격히 추락하여 국민총생산은 전년도 대비 70%로, 산업생산은 40%로 감소하였다. 그 후 4년간 1992년에서 1995년까지는 동독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 기간에는 동독지역의 국민총생산이 평균 9%씩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동독지역 국민총생산이 연평균 1.4%의 증가만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서독지역은 1.6%의 증가를 보였다.

1996년과 2007년 구동독지역의 인구는 전체 독일의 21.5%와 20.2%를 기록하였다. 11년 사이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노동인구의 유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 기간 전체 독일의 국민총생산 중 구동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5.8%(1996년)와 15.7%(2007년)로 저조하고,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 역시 서독지역에 비해 뒤쳐졌다. 제조업을 비롯한 전체 경제에 있어서 투자의 위축이 나타나는 등 경제의 모든 주요 지표들에서 경기정체가 나타났다.

통일후 지난 20년 동안 동독경제의 발전은 초기 서독마르크 도입이후 급격한 경기악화에 이은 4년간의 경제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계속 침체중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6년 서독지역의 국민총생산은 3.0%, 2007년은 2.5%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해 동독지역은 각각 2.2%의 증가율만을 기록하였다. 통일 후 계속된 산업인프라의 개선, 생산라인의 현대화, 소비재와 서비스 상품의 충분한 공급, 도시개발과 주거지 현대화 작업, 환경개선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견실한 지역경제는 구동독지역에 아직 정착하지 못했고, 주민 생활수준의 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일과 연관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비용으로 약 1조 7천억 유로가 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구동독지역의 신생 주들이 연방정부에 지불한 세수를 빼고 계산하면 매년 평균 700억 유로가 통일과 연관된 동독 지원금으로 지불되어 온 셈이다. 전체 통일비용 지출 중 사회복지 부분 등 소비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를 차지하였다.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자 독일정부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에 ‘연대추가징수금’(Solidaritätszuschlag) 7.5%를 덧붙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연대징수금’은 처음에는 통일비용 뿐 아니라, 당시 벌어졌던 걸프전쟁에 대한 참전의 추가비용 등을 명목으로 책정되었다. 1년에 6개월만 징수해 실제적으로는 매달 3.5%의 세금인상효과가 있었다.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말까지 1년간만 서독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해 1993년에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연대추가징수금’이란 이름으로 전 독일에서 다시 징수하기 시작한 신설 세금이었다. 1998년 이래로 연대추가징수금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1991년에 휘발유 값이 1리터당 25페니히 인상된 것도 통일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였다.

1993년 3월 연방수상과 각 주정부 총리 및 정당대표들로 구성된 연대협약회의는 동독지역 신생 주들이 1995년 이후에도 2004년까지 재정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연대협약」(Solidarpakt I)에 합의하였다. 제1차 연대협약에서 결정된 또 하나의 주요 사항은 4,450억 서독마르크에 달하는 구동독의 부채를 1995년부터 30년 동안 상환한다는 것이었다. 전체 부채의 내역은 신탁청이 동독기업을 인수할 때

함께 떠안은 부채와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가한 2,750억 서독마르크, 부채청산기금이 지불해야 할 1,400억 서독마르크(동독 국가 채무 285억 서독마르크에 동독마르크를 서독마르크로 교환하는데 든 비용 1,115억 서독마르크를 합산한 금액)와 동독시절 공적 주거조성에서 발생한 부채를 연방정부가 떠안은 금액 300억 서독마르크 등이다.

이 첫 번째 연대협약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공무원 및 군인의 임금, 노동부 예산, 사회보장 예산, 양육비 보조, 주거비 보조, 국방 예산, 농업·광산 및 서독지역 도시개발 예산 등에서 긴축재정을 펴서 1993년 38억 서독마르크, 1994년 93억 서독마르크, 1995년 107억 서독마르크를 비축하였다. 추가세금 인상(1993년 7월부터 보험세 12%, 1995년부터 15%, 1995년부터 면세상한을 5만 서독마르크에서 12만 서독마르크로 올리고 재산세 2배 징수)으로 1995년 307억 서독마르크, 1996년 390억 서독마르크 등의 예산을 확보해 사용하였다.

제1차 연대협약이 끝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은 1,560억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중 1,050억 유로는 동독지역 산업기반 시설의 강화와 지자체 경제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 510억 유로는 교통과 주거, 도시개발 및 혁신기술 지원에 쓰인다. 제2차 연대협약의 예산은 급격한 점강곡선을 그리며 2019년에 최저에 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구동독지역 도시들의 빠른 자생력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9월 동독재건담당관을 겸하고 있는 교통건설장관 볼프강 티이펜제가 낸 연례보고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할일도 많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력의 결과 산업인프라 조성, 주거여건, 소비와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서독의 약 80%

I
II
III
IV
V

수준까지 전체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도 구동독지역의 서쪽 대비 생산성은 79%, 임금은 81.5%를 기록하였다. 경제통합 과정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이다.

한편, 전체 동독 GDP의 30%가 서독에서 오는 통일지원금이라는 사실과 지역별로 25%까지에 달하는 이주자의 문제, 서쪽에 비해 두배나 높은 실업률 등은 아직 풀어야할 과제이다. 제2차 연대협약이 끝나는 2019년까지 동독지역이 얼마나 자생력을 보일지가 경제통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 라. 사회통합 평가

정치·경제적 통합과 함께 고려돼야 할 통일의 또 다른 측면은 정치·경제적 통합의 결과물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통일 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반영하는 문화적, 심리·정서적 통합의 문제이다. 통일 직후부터 구동독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야당의 권리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규범적 차원에서 인정하였다.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역시 동서독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사회에서 가졌던 경험들 때문에 동독인들이 법적 장치들과 경찰에 대해 가졌던 전반적인 불신도 통일 후의 경험에 의해 모두 극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기간 동안 다른 체제에서 성장했던 국민의 머릿속에 상당기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매우 근본적인 변화이다. 사회주의 노동윤리에서는 사악한 행동

으로 취급됐던 이익추구나 기업정신이 갑자기 핵심가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화는 더 이상 당연히 분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장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외적 제도의 변화와 달리 느린 속도로 세대를 거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당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은퇴하기엔 너무 젊었던 중년세대들에게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심리적 상처적응형태로 ‘통일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동독인들이 느끼는 2등 국민의 심리는 서독인들이 엘리트세대인 것을 통해 부추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좌절의 감정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현상은 동독통일 후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

통일은 구서독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구동독지역의 독일인들은 통화를 비롯한 경제제도와 사회체제, 일상의 모든 부분에 걸쳐 타 문화권으로의 이민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특히 구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시장의 경직에 의해 신분상승이 원천 봉쇄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젊은 세대에 의해 진행되는 ‘불법국가 동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독일의 사회통합이 주력해야 할 부분은 따라서 힘든 조건 속에서 이뤄낸 구동독인들의 성과와 경력을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사회화 과정에서는 교육과 스포츠 및 여가를 비롯한 일상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통일후 독일정부의 사회통합 노력은 경제통합 및 법·제도통합과 병행되어 진행되었고, 다른 통합영역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구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불만,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는 구동독지역의 시도, 또는 일부 극우주의

I
II
III
IV
V

적 성향 등이 단순하게 새로운 체제가 지닌 가치들의 전달이 실패했다는 명제로 일반화 될 수는 없다.

통일과정의 초기에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적 가치들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규범적 차원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지 이를 통해 표출했던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실제 통합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미흡함을 통해 실망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2009년 9월 27일 치러진 총선의 결과에서 동쪽지역이 구 공산당 후신 정당에 20% 이상의 지지를 보인 것 역시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불만의 표출이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와 사회의 동서 간 갈등을 극복하여 내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이 추진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실망한 이들에게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나 문화, 가족, 여가 등의 가치를 통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체화한 구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정치교육과 계몽을 통해 이 체제의 우수함과 그들 자신들의 낙후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이 체제의 성과에 대한 실망이자 이 체제를 통해 지난 20년간 일구어 낸 부가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에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이고, 부의 창출에 자신들이 참여해 기여할 기회가 적다는 데에 대한 실망인 것이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내면적 사회통합은 정의사회의 실현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 후에 자란 젊은층에서는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구동독지역에서 25세 이하

청년층의 40% 이상이 통일독일과 자신을 충분히 동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한 스포츠와 보건시설의 현대화, 이를 통해 늘어난 평균수명의 균등화는 독일의 사회통합이 올바른 궤도 위에서 꾸준히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 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실 한반도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도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독일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었던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을 전제로 한 사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야별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독일의 정치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정치체제 전환과정에서 북한지역에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직·간접적 지원 속에서 진행될 이러한 정치체제 전환과정에서 북한이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세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개인의 참여와 자발적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방식을 통해 구축될 때 결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한출신의 정치인, 정치세력이 북한지역을 대표하기보다 북한주민 스스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측

I

II

III

IV

V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독 사통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당(좌파당)이 통일 후에도 계속 구동독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통해서, 북한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남북통일 후에도 계속 주요한 정치집단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체제변화 과정 초기에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북한지역에서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북한지역에서 정당정치 체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민주적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민주시민 교육 등 민주적 사고와 행동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독일의 행정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 전 북한의 행정체제를 사전에 조사·연구하여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북한의 행정인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행정인력 처리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남북통합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어 잘못된 과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넘어갈 경우, 행정인력 처리과정이 가지는 역사청산이라는 측면이 크게 퇴색될 수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남한의 인력지원이 필수적인데 북한에 투입된 남한의 인력이 북측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행정통합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남한 측 행정인력이 ‘점령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경제적 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 경제통합 정책의 가장 큰 실수로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동독지역 임금의 빠른 정상화를 들 수 있다. 물론 독일통일은 준비된 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기회의 창이 좁을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구권의 다른 지역들, 체코나 폴란드 등에서 국가가 중요한 경제지표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자본시장으로의 점진적인 진입을 시도했던 것들은 독일과의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인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계획경제 체제에 자본주의를 알리는 좋은 교육장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분단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은 결과적으로 통일의 준비이자 초석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화폐의 1:1 교환과 같이 경제적 고려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통일 이후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급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정치적 결정, 동독 주민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유인책이 없었다면 과연 통일의 길로 독일이 순탄하게 진입했을까 하는 어려운 질문이 남는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승 4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가 우려하고 원치 않았던 통일을 이끌어 내야 했던 당시 서독 지도부가 달리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신중하게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과연 통일 자체가 가능했을 것인가?

I
II
III
IV
V

넷째, 사회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통일후 20년이 지났어도, 사회 내면적 통합을 위한 독일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동서독 주민 간 그리고 구 동서독 지역 간에는 갈등이 남아있다. 통일 이후 독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에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실은 여론응답자 개개인이 처하고 체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이다. 구동독 시절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일반 노동자였던 사람과 20년이 지나도 같은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동독을 체험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 동독을 경험했던 동서독의 어른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 통일 이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여론을 표출할 수 없다.

40년간 이질적인 체제에서 상이한 삶을 살았고, 그 극복을 위한 진통이 20년 이후에도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늘어난 총체적 부를 어떻게 조화롭게 배분할 수 있을가에 대해 통일독일이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 나타나는 내적 갈등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통일 이후에 닥칠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동서독 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더 크고, 남북한은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면서 뼈아픈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이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극복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버거워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불만만을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어려움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 심리적 갈등의 정도가, 그 극복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 2.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준비

손기웅(통일연구원)

### 가. 서독의 통일외교와 우리의 통일준비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분단된 독일은 ‘통일’이란 말조차 거론할 수 없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바로 국제법적으로 분단된 독일의 상황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서독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긴 안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완화하거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갔다.

#### (1) 통합정책과 통일정책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독일과 독일민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서독이 국제사회와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통합정책’이었다. 패전국인 서독의 입장에서 전쟁도발의 과오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국가와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Entweder-oder) 것이 아닌 모든 쪽을 향하는(Sowohl-als-auch)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수립 이후 한반도 잇어본 적이 없었다.

I  
II  
III  
IV  
V

통합정책은 국제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서방통합, 동방통합, 전 유럽 통합이란 다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독·미, 독·불, 독·소, 독·폴, 독·독과 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중첩적·복합적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의 가능성이 도래한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토대로 통일을 무리없이 이끌어내었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상생공영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확실하게 인식되게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및 동방통합정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미·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중·러 협력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독이 확고한 미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면서 자국의 실리, 국가를 강력하게 건설하고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이해를 차근차근 충족시켜왔다는 현실외교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국과의 통합정책과 더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적 상생공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통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동시 병존정책은 더욱 환영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고도화 되고, 남북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남북 간의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도래할 경우, 동북아 4국과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반도라 할지라도 역내국가 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

적으로 상생공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굳게 하여 한반도통일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통일정책이다.

## 나. 독일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준비

20년 전 독일은 40여년의 분단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통일을 이뤄낸 근본적인 추진력이 바로 동독의 주민들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당초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복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동독 사회주의체제 40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 “이것은 아니다”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서독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고 인간적이란 현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 (1)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평화적인 독일통일의 위대한 승리는 이들이 절망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스스로 획득하기 위해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정되었다. 동독정권에 대해 너희들이 그토록 주인이라 선전했으나 실상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당한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시작하였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독대사관에 진입하여 서독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1989년 11월 9일 동독정부는 베를린장벽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I
II
III
IV
V

## (2)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변혁을 위한 동독 주민의 힘은 이제 통일의지로 분출되었다. 기복도 있었다. 데모를 이끌던 동독 지식인들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진정한 사회주의를 다시 한번 실현해보자고 제의했다. 급작스러운 사태 진전에 서독정부 또한 점진적인 통일방안(콜 수상의 ‘통일10개항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통일을 열망한다”고 절규하였다. 데모 구호도 “우리는 하나의 국민(Wir sind ein Volk!)”으로 바뀌었다.

통일에의 결정적인 마침표 역시 동독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은 조속한 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사실상 이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동서독에서 함께 실시된 이 선거에서 양 독일 주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 어느 국가, 어느 민족도 독일 통일을 반대할 명분을 근원적으로 잃게 되었다. 즉, 독일통일이 동독 주민들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인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 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선택한 동독 주민들 의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 (3) 북한주민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대북·통일정책

독일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한반도 통일의 근본적인 동력도 북한 주민들에 의해 뿔어져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화통일을 전제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은 이

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로 인식하고, 우리들을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동포로 받아들일 때 실현될 수 있다.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움직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다음의 사실을 북한주민들이 듣고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원한다면 그들을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든, 누구나, 얼마든지, 언제든지 국민으로서 받아들인다, 대한민국은 언젠가 함께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확고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란 희망의 싹을 심어야 한다. 자유의 지에 의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전부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도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재결합,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활을 국가적 책무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북한 주민들은 언젠가 화답할 것이다.

결국 현 단계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동포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현실을 깊숙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따뜻한 우리의 동포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삶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의 연속선에서 그들이 통일을 향한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때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와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절감될 때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로의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베를린장벽을 스스로 부순 동독 주민들처럼 말이다.

I
II
III
IV
V



## 다. 통독 20년의 평가와 우리의 통일준비

1996년 한 독일의 고위관리는 최근의 통일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문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을 문제라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독수준의 경제를 세계 최상위의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동서주민간의 갈등, 심리적 분단을 이야기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는 지역 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민주화된 미국에도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없습니까? 그것이 몇 십 년이 지나도 사라졌습니까? 독일은 통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적인 일상적 과제를 안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통일된 독일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일은 정치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고, 라인강이 아니라 이제는 ‘엘베강의 기적’을 바라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 당당하게 군대를 파견하고, 유럽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동서간의 갈등도 있지만 동쪽출신, 그것도 여성이 연방수상이고, 축구국가대표팀의 주장도 동쪽출신이다.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 도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대계에 맞는 일이다. 주변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에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상적인 국가적 과제일 뿐이다. 광복을 맞은 후 겪었던, 6·25전쟁이 끝나고 겪었던 그 어려운 삶을 우리 선조들이 은근과 끈기로 후세

를 위해 곳곳하게 감내하고 걸었듯이, 독일통일 20주년을 바라보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시 한번 통일할 때이다.

[그림 V-1] 독일통일 20년: 2010년 10월 3일 현장



\* 독일통일 20년을 맞아 베를린에 전시된  
 구 동서독장벽(아래설명)

\* 통일 이후 독일은 베를린의 중심지역에  
 유대인학살에 대한 반성의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I

II

III

IV

V



\* “독일 민족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새겨진 제국의회 내부에 통일된 독일은 “모든 주민들을 위해”라는 의미를 새겨 넣어 민족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 독일연방의회 회의장

\* 통일 20주년 기념 신문: 통일 이후 1천 8백 7십억 유로의 연대세를 부담했다는 기사이다.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정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C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 연례정보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 통일정세분석

###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1)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소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소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n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기타

##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4 (Ⅳ)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Ⅳ):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